

PDF자료집

주체 90(2001)년

진보정당

6.15주간 편집부

진보정당

6.15주간 편집부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김일성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총비서

주체 59(1970)년 11월

동지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펼쳐준 우리 당 제4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9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위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사변들이 일어난 보람있는 시기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 나가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대표자회와 전원회의들을 열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았으며 인민대중을 그 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고무되어 남조선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높였으며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어떠한 모진 풍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일 관계를 맺고 있는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장성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확신과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다른 나라의 친근한 벗들이 이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으며 대회 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것이며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을 더 큰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할 것입니다.

. . .

3.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동지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총결기간에 남조선 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 침략 기지로, 군사적 부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으며 군사 팟쇼 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적극화되였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는 보다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기간 남조선 정세발전에서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 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실제적 통치자이며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입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호 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억압하며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일부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입니다.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의 정의의 투쟁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려 왔습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전후 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 7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전후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웠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세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 요구

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력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남조선의 평범한 인민들 속에서 진보당의 위신은 높아졌으며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였습니다.

1956년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 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사기와 협잡 속에서도 진보당이 내세운 ≪후보자≫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이 얻은 투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 표 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절실히 념원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보당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빨리 확대강화되는 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려 수많은 진보당당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선생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에 진보당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비록 진보당이 원쑤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대중적 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 후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강화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1960년 4월에 있는 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오래동안 쌓이고 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남조선 전역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였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후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리였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짓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4.19 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이롭게 전변되였습니다.

4월 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지도 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 국가의 창건을 당면 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구국운동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렸습니다. 이 당은 광범한 민주주의력량의 통일전선적 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뭇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 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의 지도 밑에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 온 지역에 세차게 타 번지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적 진출을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며 그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 부시고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투쟁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반동군사 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혁명력량에 대한 파쑈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나섰을 때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5.16≪군사정변≫이 있은 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언론, 출판 기관들을 페쇄하고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야수적 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투쟁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미제의 비호 밑에 남조선의 력대 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인사들이 정권에 들어앉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대중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매번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진보당도 바로 조국통일의 구호 밑에 선거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곧 파괴당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시 광범한 대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고 인민들 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테로를 감행하는 것은 원쑤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놈들은 해방직후에도 려운형 선생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암살하였으며 김구선생 역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 참가한 뒤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자 암살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손히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진보적 력량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어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는 것과 함께 적들의 반혁명적 폭력에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였습니다.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 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 당의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피의 대가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옳게 살리면서 군사파쑈통치배들의 악독한 폭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관건적 고리를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통일혁명당건설을 다그치였습니다.

통일적 맑스-레닌주의당, 노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 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통일혁명당의 정치적 립장과 투쟁목표는 지난 해 8월 서울에서 이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리념이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념원인 조국통일의 대열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남조선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력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되며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됩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 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 인민들을 굳게 묶어 세우며 지하와 산 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동지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제때에 물리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 할 수 있습니다.

혁명력량을 마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며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 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당력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당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그것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기본부대를 잘 꾸리는 것과 합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 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이들과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 뉴대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 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 결속이 촉진되어 혁명의 핵심 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 발전시키는 과업이 긴급하면 할수록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 지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며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며 원쑤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들을 능숙히 리용하는 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 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 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혁명적 폭력은 혁명적 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 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적하여 나간다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리하여 구경은 현 반동정권을 뒤집어 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원쑤들의 어떤 발악도 어떠한 간난신고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어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멈춰세울 수 없습니다.

남반부 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투쟁입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반부 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정세는 반혁명에는 불리하고 혁명에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 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동지들!

미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전 조선 사회의 통일적 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임무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 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통일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 위정자들이 파쑈적인 군사정변을 꾸며내고 정권을 가로챈 다음에도 우리는 그들이 매국매족행위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민족적 립장으로 돌아설 것을 바라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을성있는 로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낸 다음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남북 사이에 경제문화교류와 인사왕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조선인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때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남조선 당국에 여러번 제의하였습니다. 만약 이러저러한 리유로 남북조선총선거를 당장 실시할 수 없다면 먼저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나서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라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는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묵살해 버렸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 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호 밑에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은 오직 ≪승공통일≫이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떠벌리면서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을 말살하고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침략적 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쑤들은 이런 황당한 구실을 내걸고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려고 꾀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군사 시설들을 확장하며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승공통일≫이란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한 망상이며 얼빠진 자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벌써 25년 동안이나 공산주의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기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여 왔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 잡았으며 허물 수 없는 위대한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자는 것입니다.

요즘 남조선 괴뢰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말, 한다면 그것은 조국통일 문제를 실현할 아무런 방도도 없는 철두철미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 모략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화통일구상≫이요, 뭐요 하고 떠벌리는 목적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자주적 평화통일 기운을 무마하고 저들의 매국매족행위를 가리우며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의 이목을 딴 데 돌리려는 데 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계속 애걸복걸하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자기 민족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며 월남침략전쟁에 남조선 청년들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는 매국역적들과 어떻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와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 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입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억센 투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음흉한 책동을 반드시 짓부시고야 말 것이며 조국을 기어코 통일하고야 말 것입니다.

4.19시기까지의 진보적 합법정당운동

한국전위조직운동사

남한사회변혁은 주체역량이 피폐화되고 반면에 식민지배질서는 한층 강고하게 정비된 조건위에서 다시금 진행된다. 53년 종전부터 61년 5.16군사쿠데타까지의 시기에는 남로당의 잔존인맥과 해방후 남한 3당통합시기에 구성되었던 근로인민당 계열의 인사들, 전쟁의 참화를 모면한 중도좌파세력을 비롯한 진보적 인사들, 그리고 전쟁후의 사회현실에 눈을 뜨면서 새롭게 운동대열에 동참한 세대들을 비롯하여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단질서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운동의 주요역량을 이룬다. 이러한 흐름이 최초로 조직적결실을 이룬 계기가 조봉암이 지도한 진보당이었다.

전쟁으로 조직운동의 맥이 끊기고 운동경험이 풍부한 핵심들이 거의 사라진데다가 반공이데올로기 이외의 모든 정치사상적 견해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합법정당을 통한 사회운동방식이 모색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만은 아니다. 이 흐름은 강압적 파쑈통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어 나가던 1955년 시기의 진보당창당과 1960년 4.19직후 일시적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민중의 자주적 혁명열기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어진 시기의 사회대중당 창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 양당은 모든 민중들의 변혁열망을 가로막아 나선 세력들에 의해 와해되었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진보적 사화운동의 맥을 소생시키고 횡행하는 분단이데올로기 하에서 민족통일에 대한 민중의 변함없는 의지를 표출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전쟁직후의 조건에서 파생된 이러한 진보적 합법정당운동의 경험은 이후 남한변혁운동의 진전과 조직운동방식 특히 전위조직결성을 위한 모색에서 몇가지 귀중한 교훈들을 남기게 된다.

첫째로, 진보당과 사회대중당의 역사적 경험은 남한변혁운동이 자발적인 순수대중운동이나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합법정당 운동에 의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오직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지반으로 하는 전투적 전위조직에 의해 영도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한국전쟁이후 대중들의 변혁의지가 집약되어 출현한 진보당과 사회대중당은 식민지 통치제도를 근본으로부터 부정하고 대중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방도를 세웠다기보다는 대중세를 바탕으로 56년 대통령 선거와 60년 7월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국면을 변혁세력의 진출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운동방식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진보당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18%에 달하는 216만표를 얻는 데 그쳤고,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혁신계정당들은 4.19이후의 열려진 공간속에서 조차 참의원 58석 중 2석, 민의원123석 중 5석의 의석을 간신히 차지하는 참패를 모면할 수 없었다.

진보당의 득표수는 매카시즘적 분위기하의 선거속에서 예상보다 많은 득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미 이승만의 대중적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사오입 개헌파동 등을 통해 집권당이 간신히 집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결코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그것은 진보당의 조직적 기반에 의한 득표라기보다는 대통령후보로 나선 조봉암의 개인적 인기, 또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회의 갑작스런 사망에서 오는 반사이익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19봉기 석달 후에 진행된 7.29총선 결과는 대중지반과 대중운동의 발전이 전제되지않는 합법정당운동의 허망함을 보여준다.

4.19직후 극도의 탄압과 감시속에서 활발하게 분출하기 시작한 민중들의 변혁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불과 몇달 사이에 사회대중당과 사회당, 통일사회당 등 혁신계열의 정당들이 다수 생겨났지만 내각제 총선에서 이들은 모두 참패하고 만다.**

**물론 2차대전 이후에 선진자본주의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혁명적 정당들이 합법화되고 의회투쟁이 중요하게 등장한 역사적 조건이 있었고 이는 명백히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주인의식.정치참여도가 그만큼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60년 우리 나라의 경험을 검토하여 보면 우리의 경우는 이들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식민지파쑈통치하에서 전위당은 변혁운동의 결정적 시기에서조차 자신을 전면적으로 공개화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원리로 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남로당이 미군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초기에 조직의 완전 공개화를 추구하다가 탄압이 가열되자 뒷수습책으로 점차 비합법화를 시도하는 오류를 경험하고서도 진보당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대중당조차 4.19라는 협소하게 열린 공간에서 합법적 체계화 운영을 가진 당조직을 건설했던 것은 이들이 남로당계의 테두리를 우익적으로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87년대의 조직건설 시도들이 상당수 식민지의 비합법적 장기항전에 전혀 부적합한 형식으로 건설되어 1~2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결과적으로 여전히 1920년대 조선공산당, 60년 사회대중당의 잘못된 전통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근원에 있어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노선의 관점을 철저히 세우지 못한 데 기인한다.

아무런 대중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중에 건설된 사회대중당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그나마 혁신계열 정당들은 마치 해방직후 남한 좌익세력들이 그러했듯이 사분오열되었다. 즉 진보당이나 사회대중당이나 통일화된 지도이념과 정책강령으로 애국세력을 총단합시키지 못하고 종파적 패권다툼으로 분열함으로써 남로당의 뿌리깊은 분열주의를 그대로 재현했던 것이다. 진보당의 출범이 애초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야권의 입장분열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4.19이후 혁신계는 그 이전시기의 인맥과 개혁추진의 완급을 놓고 갈라져나가 범민주세력, 광의의 변혁역량의 통일된 투쟁의 절박성을 놓치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막연히 민중들의 지지를 바라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니라 일단 반혁명적 공세가 도래할 때 이들 정당들이 아무런 대응력도 갖추지 못하고 투쟁형태를 변화시킬 틈도 능력도 없이 무력하게 탄압당하고 말았다는데 있다. 8.15직후부터 53년까지의 해방후 8년사가 바로 애국적 민중들과 제국주의 및 그와 연합한 반동무리들간의 목숨을 건 폭력투쟁, 정권쟁취투쟁 그리고 가장 낮은 형태의 수단부터 가장 고도의 수단까지 총동원된 전면적 투쟁으로 점철되었지만 변혁과제 달성이 실패했음을 상기할 때 제도정치권의 투쟁 또는 의회투쟁만으로 혁명을 대신하려 했던 합법정당 운동은 당시의 주체역량상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하더라도 너무나 위약하고 무리한 일이였다.

진보당이 이승만정권의 해산명령만으로 일거에 와해되고 진보당 사건조작으로 당간부들이 체포, 처형될 때에도 전혀 대항하지 못한 것이나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가 5.16군사쿠데타를 저지할 어떤 수단도 갖추지 못하고 한순간에 와해된 것을 보면 남한변혁운동을 이끌어 갈 전위조직이 어떠한 형태와 질을 담보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해진다. 때문에 5.16 이후에 전위운동을 준비하는 흐름은 변혁운동의 참모부로서의 기능을 구비하고, 정치권에서의 투쟁은 물론 전민봉기를 포함한 모든 대중투쟁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조직적 힘이 있으며 노동자, 농민과 청년학생 등 광범한 민중속에 뿌리내린

비합법전위조직을 추구하게 된다.*

*결국 진보당과 사회대중당의 경험은 ①합법주의.의회주의적 지도조직은 실패한다. ②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사소한 진보적 성향의 차이를 따라 지도조직을 여러갈래로 분할하면 실패한다. ③탄압과 유화적 시기 등 모든 우여곡절을 뚫고 건재할 수 없는 지도조직은 실패한다는 역사적 결론을 낳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우리 나라 지도조직이 이와같은 성격을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변혁운동이 간고복잡한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즉, 간고복잡한 민족해방운동에서는 지도조직이 비합으로 꾸려져 정상적 지도를 보장해야 하며 거족적 역량을 동원하는 단일한 조직으로 지도역량을 통일해야 하고 장기항전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53년이후부터 61년 5.16쿠데타까지 실패를 경험한 세대들은 5.16이후 전위조직 건설의 방향에서 스스로 몇가지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다. 전위조직의 사상.조직적 준비에서 남로당의 모든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한, 진정한 전위조직은 절대 창건될 수 없다는 것과 45~53년에 제기되었던 자주통일, 반미, 민주적 개혁은 53년 전쟁으로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변혁운동의 과제는 변함없이 반제.반봉건이다라는 2가지 전제이다.

먼저 53년이후 다시금 검증된 변혁운동의 투쟁강령문제를 보도록 하자, 일제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총적 과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반봉건혁명의 완수라는 것으로 집약되며, 이 과제는 8.15로부터 한국전쟁까지 성격과 임무를 조금씩 달리하는 두개의 지역혁명으로 전개되지만 의연히 총적 과제는 두지역 혁명역량의 단합에 의한 전체 한반도에서의 반제반봉건혁명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종전과 함께 남한에 분단국가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남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이 총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당면과제는 일제를 대신해 지배자로 침략해온 제국주의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위업을 달성하는 것과 남한에 수립된 식민지파쑈정권을 타도하고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는 민주적 정권을 건립하는 것, 그리고 갈라진 민족의 전국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진보당과 사회대중당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3대과제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차례차례 역사적 진리로 검증해 갔다. 특히 4.19민중봉기로 우리민중은 이러한 3대과제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의 달성을 향해 달려갔지만 식민지지배질서의 고수를 노리는 미국의 지시에 따른 5.16군사쿠데타로 좌절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3년이후 경제.정치적, 민족적 모순의 심화속에서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한 투쟁이 4.19봉기였고, 4.19봉기의 기본성격은 응당 반독재민주화였다. 그러나 이처럼 반독재민주화투쟁으로 출발한 대중운동은 열려진 운동공간속에서 급속히 민족자주의 통일운동으로 발전해 간다.

즉 반미투쟁이 낮은 차원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통일운동은 사회대중당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성급하게 감상적 통일운동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잘못된 것이었다고 보아서는 결코 안된다. 당시 민족자주와 통일운동은 반독재민주화로 시작된 운동의 자연스러운 전개였으며 또한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받기도 했다.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노동자.농민도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하층의 대중적 영향을 확산시키고(실제 이때 자연발생적으로 빈민, 교사, 농민, 노동자의 투쟁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을 확실한 공격대상으로 내세우면서 통일운동을 폭발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어쨌든 진보당, 사회대중당의 투쟁을 통해,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혁운동의 투쟁강령도 민족자주, 조국통일, 민주개혁으로 의연히 제기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이후의 흐름도 이 궤도에서 전개되는 것으로써 60년대의 한일회담반대투쟁, 삼선개헌반대투쟁, 외국자본반대투쟁, 70년대의 반유신투쟁을 경과하여 80년 광주봉기에 이르는 과정이 이것을 증명한다.

결국 4.19봉기의 진정한 의의는 부정선거규탄과 민주민권에 대한 요구나 우리민중들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설픈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에 대한 열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종된 듯했던 전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강령을 다시 인식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투쟁의 적극적 분출을 예고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서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확인하면서 진정 남로당의 전통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운동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이 절감된다. 알다시피 이 기간이후 60년대의 대부분의 비합법 조직운동은(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로당의 전통을 거부하고 전격적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남로당계열의 인사들도, 그리고 근로인민당 결성과 함께 혁명전통의 주류로부터 멀어져 갔던 사람들도, 해방전후의 혁명적 정세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고민하고 변혁운동의 대의에 근접해 들어갔던 청년학생층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들도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60년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남로당의 맥과 단절된 새로운 전위조직건설운동이 시작된다. 즉 거의 처음으로 남한지역에서 순결하게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에 의거하는 운동이 태동한다. 이러한 흐름은 극심한 파쑈탄압과 감시체제, 반공이데올로기와 친미사대주의가 만연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완만하지만 하나의 명백한 흐름으로 자라나게 된다.

오랜 잠복과 몇가지 노선과 방법상의 한계를 오히려 귀중한 양분으로 삼아 남한사회변혁운동은 53~61년의 기간을 거치며 전환의 국면을 맞기 시작한다. 소수의 선각자들로부터 시작된 혁명전통의 부활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전위조직 건설작업이 전환의 내용이었다. 이것은 진보당과 사회대중당 그리고 4.19봉기가 없었다면 얻어내지 못했을 성과들이었다.



사회대중당

정치사전 발췌

남조선의 진보적정치세력들이 1960년 11월에 결성한 합법적정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4월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25권, 305페지)

4월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정세가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는 환경속에서 남조선의 진보적세력들은 당을 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오다가 마침내 1960년 11월 24일 사회대중당결당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당을 내왔다.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었으며 광범한 민주주의적력량의 통일전선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뭇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다. 사회대중당의 지도밑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투쟁구호를 들고 북과 남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이 혁명적진출을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며 그의 식민지통치기구를 뒤집어 엎고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여기에 적극 인입하지 못하였다. 5.16《군사정변》이 있은후 원쑤들의 야수적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였다. 사회대중당은 파괴되였으나 그의 지도밑에 간고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경험을 남겨놓았다.



진보정당약사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kdlp.org) 발췌

진보당(1956년 창당, 조봉암의 검거로 인해 와해됨) → 제2공화국 혁신정당들(5.16쿠데타로 인해 소멸됨) → 군사정권 하의 암흑기 →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1988년 창당. 대중적인 정당건설에 실패) → 민중당(1990년 창당. 92년 총선에서 1.6% 득표로 해산됨) → 국민승리21(1997년 권영길 후보 대선출마) → 민주노동당

① 진보당

진보당은 1956년 1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대통령후보가 216만표를 얻는 성공을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11월 창당되었다. 중도좌익과 한민당계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일부 우익 등 복잡한 인적 구성으로 출발하였으며 평화통일을 내세운 통일정책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보수정당과 정책상 별차이를 갖지 않았다. 주로 조봉암 개인의 정치력에 바탕한 상층연합의 성격이 강했던 진보당은 대통령선거에서의 성과를 대중적 기반의 확대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진보당사건의 공판기록에 의하면 57년 말 현재 당원 수는 1천명이 안된다) 1958년 1월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조봉암이 검거되자 두 달만에 와해되었다.

② 제2공화국의 혁신정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통일사회당 등 1960년 4월 혁명 직후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나타난 4개의 혁신정당들도 급진적인 통일 정책 외에는 별다른 실천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인물중심의 상층 정치활동과 고질적인 분파대립으로 일관하다가 7.29선거에서 참패하고 결국 5.16 쿠데타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후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잃은 이들 잔존 진보세력들은 분산고립 되거나 지하당 건설로 나섰으며 1,2차 인민혁명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해방전략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으로 불리우는 집중적인 탄압으로 전전(戰前)세대는 사라져 갔다.

③ 군사독재정권 하의 혁신정당

5.16 쿠데타 이후 87년 대투쟁까지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1967년에 통일사회당, 1981년에 민주사회당, 1982년에 신정사회당, 1985년에 사회민주당 등이 혁신정당이라는 명분으로 건설되었으나 이들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맥과는 단절된 세력이었으며 군사독재 정권의 외교적 필요에 의해 배려된 정치적 장식물에 불과하였다.

④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

1988년 3월 진보블럭은 제 13대 총선을 앞두고 민중의 당을 창당하였다. 민중의 당 창당은 수십년간 단절되었던 진보정치운동의 재개를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중의 당은 당시 진보적인 정치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다. 30개 지구당에 1천여명의 당원이 참가했을 뿐이었다. 민중의 당이 보다 급진적인 젊은 세대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출신자로 이뤄진데 반해 거의 동시에 창당된 한겨레민주당에는 진보블럭의 보다 온건한 일부 세력들이 참가하였다.

민중의 당은 1988년의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50여일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지만 출마한 15개 지역구에서 평균 4.3%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되었다.

⑤ 민중당

90년 11월에는 민중당이 창당되었다. 51개 지구당에 2천여명의 당원이 참가하였다.

민중당은 1991년 지방선거에서 42명이 출마하여 1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적은 출마자와 더 적은 수의 당선자로 민중당은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다. 13.27%라는 꽤 높은 출마지역 득표율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민중당은 좌로부터는 무원칙한 유연성으로 비판받고 있었으며 우로부터는 과격한 이미지로 경계 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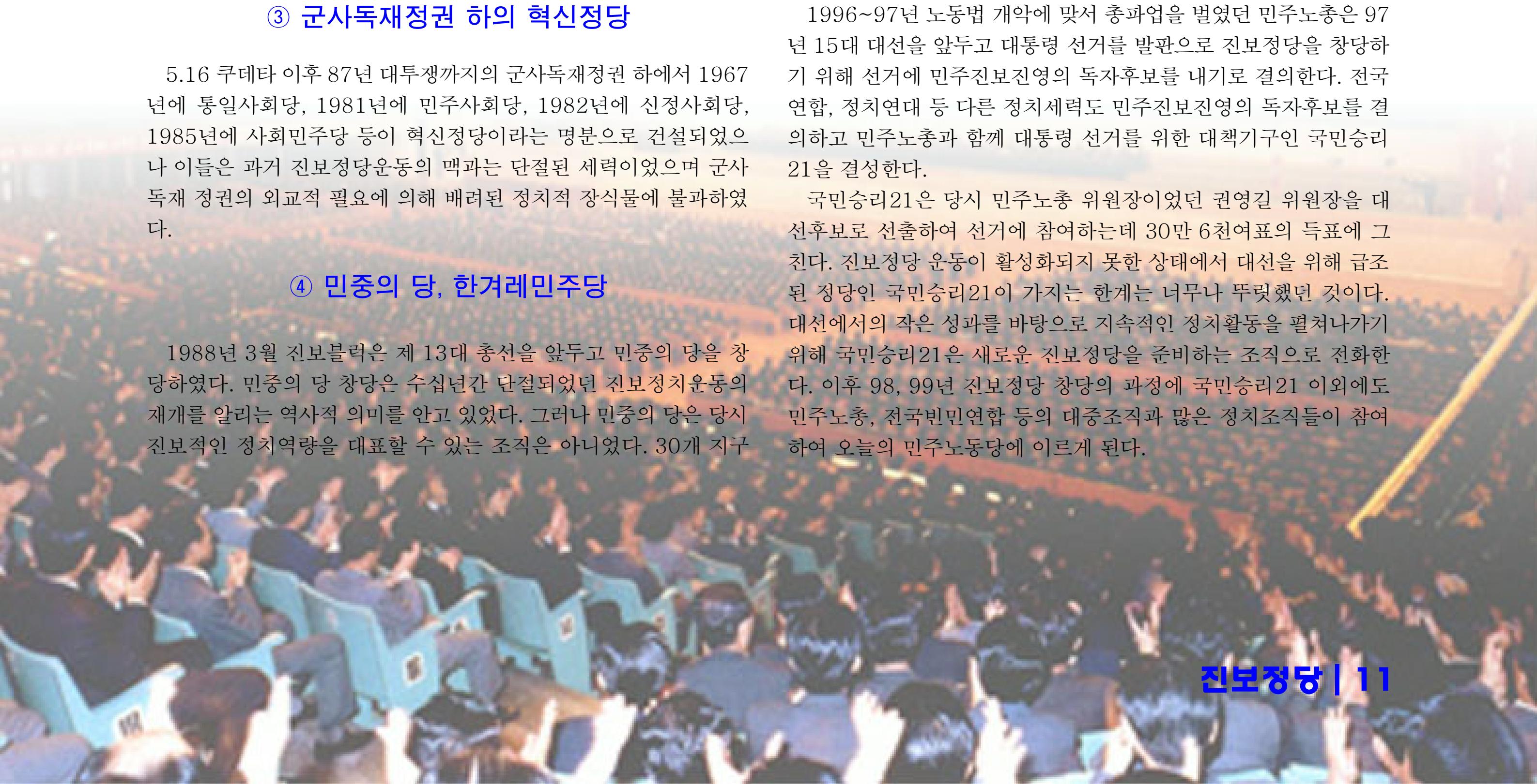
1992년 1월 합법적인 노동자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5천여명의 노동운동가들이 결집한 이 세력은 민중당이 노동자 등 하층계급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별도의 정당을 만들고자 했으나 1992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민중당과 통합하였다.

민중당은 1992년 3월 선거에서 51명이 출마하여 출마지역 평균 6.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한 석의 의석도 내지 못한 채 법적으로 해산 당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패배로 민중당이 해산된 후 4년만에 실시된 1996년 제 15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은 재건되지 못했다.

⑥ 국민승리21

19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발판으로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선거에 민주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의한다. 전국연합, 정치연대 등 다른 정치세력도 민주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책기구인 국민승리21을 결성한다.

국민승리21은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선출하여 선거에 참여하는데 30만 6천여표의 득표에 그친다. 진보정당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을 위해 급조된 정당인 국민승리21이 가지는 한계는 너무나 뚜렷했던 것이다. 대선에서의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국민승리21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전화한다. 이후 98, 99년 진보정당 창당의 과정에 국민승리21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등의 대중조직과 많은 정치조직들이 참여하여 오늘의 민주노동당에 이르게 된다.



통일전선론

통혁당(통일혁명당의 80년대 중반 문헌)

오늘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담보로 된다.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과 함께 혁명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계층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동원하여야 한다.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야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수 있다.

통일전선을 광범히 형성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략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사업은 지하당의 대중지도사업의 한 부분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혁명의 종국적 목적을 실현할 때가지 일관하게 견지하여 나가야 할 전략적 요구로 나선다.

남조선혁명에서 통일전선은 일시적 이용전술이거나 그 어떤 전술적 동맹, 전술적인 행동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혁명의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전선을 전략문제로 내세우고 통일전선 대상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보시켜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은 혁명의 당면목적뿐 아니라 그 종국적 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 동시에 **김일성**주의자의 숭고한 의무로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남조선혁명에서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전략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면 남조선혁명의 중대한 전략문제로서 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통일전선 노선과 방침은 무엇인가.

1. 통일전선의 노선과 방침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은 남조선혁명의 전략적 과업으로서 혁명의 승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혁명 승리의 근본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누가 누구를≫하는 판갈이싸움에서 승패는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가에 달려 있다. 더욱이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을 직접 대상하고 있는 남조선혁명은 전례없는 간고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힘만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 오직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역량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들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히 조직.동원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계층을 결속하고 투쟁에 광범히 조직.동원하는 것은 통일전선사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통일전선을 광범히 형성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혁명의 보조역량을 성과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한다. 통일전선사업을 잘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운다면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적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고 지하당조직들과 혁명가들의 활동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 수 있으며 통일전선의 엄호를 받으면서 혁명의 주력군을 성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 그리고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확대.발전시킴으로써만 각계각층 군중을 광범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도울 수 있는 위력한 보조역량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남조선혁명에서 승리의 근본조건인 혁명역량을 튼튼히 준비할 수 있게 한다.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다음으로 남조선혁명에서 전취할 인민정권의 정치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남조선혁명에서 전취할 정권은 친미, 친일 주구들을 제외하고 노동자, 농민, 인텔리, 민족자본가 등 일체 애국세력들을 총망라한 정권으로 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이러한 민중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적 기초인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또한 그 어떤 일시적인 전술이 아니라

1) 통일전선노선

남조선혁명에서 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노선은 반미구국의 기치 밑에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쟁취할 수 있는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동원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노선은 통일전선의 기본강령과 계급투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통일전선의 기본강령

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은 통일전선의 성격과 기본사명, 그 전략전술을 규제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은 노동계급의 당이 소여 혁명단계에서 내세우는 기본 정치적 주장과 구호이며 통일전선에 결속되는 각계각층, 각당, 각파의 공동투쟁목표이다.

통일전선을 위한 당의 강령을 옳게 드는 것은 이 사업을 정확히 조직.진행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위한 당의 정치적 주장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기본요구를 반영한 우리 당의 최저강령으로 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위한 무기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운동의 기본원칙, 전략전술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

통일전선운동에서 이러한 요구를 옳게 관철하자면 그의 정치적 주장과 구호에서 당의 최저강령을 들어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강령은 우리 당의 최저강령인 반제반봉건강령으로서 그의 기본내용은 반미,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① 통일전선강령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철거시키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그의 기본강령에서 반미투쟁과업을 무

엇보다도 중요하게 내세워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남조선혁명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 것을 기본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는 것은 민족적 억압과 약탈 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민중들의 가장 중요한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반미투쟁을 자기의 기본 정치적 주장과 구호로 확고히 내세워야 한다.

②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분쇄하는 것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옛 지위를 회복해 보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에 기어들고 있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종속적인 동맹관계에 있으며 조선과 아시아 침략에서 공모.결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자기의 기본강령에서 반미투쟁과업과 함께 반일투쟁과업을 내세워야 한다.

③ 통일전선강령에서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군사파쇼통치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남조선 민중의 공통적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군사파쇼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강령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울 수 있고 그들을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④ 통일전선강령에서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민중의 민족적 이익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는 남조선민중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단합시키고 반제민족해방투쟁에 궐기시키는 혁명적 기치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기본강령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상의 통일전선강령은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의 반제민주주의적 성격과 사명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서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조직.결속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 기치로 된다.

통일전선의 계급정책

통일전선의 계급정책은 혁명수행에서 노동계급이 어떠한 계급계층을 벗으로 삼고 그들과 어떻게 손을 잡으며 그들을 어떻게 영도하여 혁명투쟁을 벌여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해명을 준다.

① 통일전선의 계급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확고히 기초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통일전선운동에서는 우선 노동계급의 영도권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영도권 문제는 통일전선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나아가서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남조선의 통일전선은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며 남조선혁명을 영도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서만 형성.강화될 수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통일전선운동에서는 노동계급의 영도권을 확고히 실현하고 그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남조선의 통일전선운동에서는 또한 노동계급의 영도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

노농동맹은 통일전선의 정치적 및 사회적 기초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오직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확고히 기초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형성되고 강화.발전될 수 있다.

노농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우선 통일전선에 대한 노동계급의 영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남조선혁명에서 노동계급은 영도계급이며 농민은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다. 농민은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대중적인 계급으로서 노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력군을 이룬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은 농민대중을 쟁취하고 그와의 동맹을 강화하여야만 주민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 밑에 통일전선에서 자기의 영도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할 수 있다.

노농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또한 통일전선에서 광범한 계급계층을 끌어들이고 통일전선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노농동맹을 강화하여야만 이중성과 동요성을 가진 중간세력들을 통일전선에 효과적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으며 튼튼한 계급적 토대 위에서 통일전선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운동에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그 기초 위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② 통일전선의 계급정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계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 것이다.

노동계급과 그의 전위당이 통일전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반혁명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는 반면에 가능한 모든 계급계층, 정치세력들을 광범히 전취하여 결속하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통일전선운동에서는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부르조아지,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 등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계층 군중을 전취하며 결속하여야 한다.

우선 노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과의 연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남조선에서 민족적 압박과 멸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제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정치적 각성이 빠르며 따라서 노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과의 연합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을 돌려야 한다.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운동은 노동자, 농민들의 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진정한 혁명운동으로 될 수 있으며 혁명운동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상인, 수공업자 등 도시소부르조아지를 광범히 묶어세워야 한다.

남조선 도시인구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인, 수공업자들은 미.일독점자본과 그와 결탁하고 있는 매판자본가들의 압박과 괴뢰정권의 가혹한 수탈을 직접 받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처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권리하다.

남조선의 소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이러한 처지로 인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타도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들을 미일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히 끌어들이며 통일전선에 묶어세워야 한다.

또한 통일전선에 종교인사들을 묶어세우는 것은 남조선에서 종교가 광범한 계급계층을 망라한 홀시할 수 없는 사회세력을 이루고 있는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남조선에서 각종 종교를 신앙하는 하층교인군중의 대다수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 농민, 소부르조아 계층으로서 그들은 남조선혁명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 편견과 몽매로 하여 기만당하고 있는 대다수 교인군중과 애국적인 종교인 상층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 것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

또한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의 연합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자본가들은 주로 중소상공업자들로서 외래제국주의와 매판자본의 압박과 괴뢰정부의 과중한 세금수탈 및 차별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성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난관에 부닥쳐 부단히 파산.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매판자본가들과는 달리 정치적 권력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에게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며 식민지군사파쇼통치밑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치적 세력을 형성할 자유와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로부터 민족부르조아지는 착취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외래제국주의와 매판자본가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모순관계에 놓여 있으며 반제, 반매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들이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에 망라될 수 있는 객관적 기초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에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을 적극 끌어들여야 하며 그들과 제휴.합작하여야 한다.

또한 중산계층, 민족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나서고 있는 혁신 정당, 정파 및 개별적 민주인사들과의 연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혁신정당들은 소자산계급 및 민족자본가계급과 그의 영향하에 있는 일반군중을 자기의 사회정치적 기초로 하여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정치무대에 진출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부터 혁신정당의 영향 밑에 있는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 것은 통일전선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한편 혁신정당은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기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제국주의적 압박과 파쇼적 탄압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민중의 반제반파쇼투쟁기세에 합류하며 반제반보수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에 혁신 정당, 단체들을 적극 끌어들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반제민주주의운동에서 그들과 제휴.합작을 실현하여야 한다.

보수정당 안의 모든 반제민족적 요소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보수정당들은 철저하게 반혁명의 정치조직이며 그의 상층은 혁명의 대상인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의 중하층에는 적들에게 기만당한 소자산계급 출신들과 중간층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 수 있으며 또 돌려세워야 할 대상들이다.

그러므로 보수정당과의 관계에서는 그의 반동적인 지도 상층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의 하층군중을 쟁취하여 중산층 안의 반제민족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군중투쟁의 압력과 배합하여 그들을 반제투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보수정당 안의 반제민족적 요소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비록 크게 기대할만한 것으로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적극 쟁취함으로써 미.일 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성과적으로 고립.타격할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의 당의 통일전선노선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 노선이다.

2) 통일전선방침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방침은 혁명의 주력군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조건에서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전선방침의 기본요구

① 통일전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다.

통일전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의 지도적 역할을 높인다는 것은 그 주체인 혁명적 당의 영도적 역할을 보장하며 주력군의 선봉적이며 능동적인 역할과 작용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통일전선의 형성과 그 확대.강화를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

만약 혁명의 주력군이 약한 조건에서 중간층들과 일시적으로 통일전선이 형성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견고할 수 없다. 정세가 변하고 투쟁이 격화되면 중간층들은 투쟁을 포기할 수 있으며 적의 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오직 혁명의 주력군이 강한 조건하에서만 중간층들을 혁명의 편에 서서 싸우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통일전선을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혁명의 목적과 과업을 실현하는 데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② 통일전선방침의 기본요구의 다른 하나는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이다.

상층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주로 중간정치세력과 민족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 단체들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상층인물, 민주인사들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층통일전선이라는 것은 그 영향하에 있는 하층, 일반군중들과 단결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우선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여 혁명투쟁에 동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층통일전선의 실현을 촉진하며 그것을 튼튼히 할 수 있게 한다.

하층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형태의 기존 합법단체 안에 들어가서 기본군중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확히 듣고 투쟁을 적극 벌이며 투쟁과정에서 당의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방향에서 그들과의 행동통일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층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존 합법단체 안에 들어가서 하층군중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당의 요구를 접수하고 그 실현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층통일전선사업에서는 또한 하층군중을 동원하여 상층의 동요를 저지시키고 상층이 통일전서에 나서도록 작용하며 악질적인 상층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이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사업에서는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은 정당, 단체의 하층군중과만이 아니라 그 상층과도 연합을 실현화여야만 보다 폭넓고 강력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당, 단체들의 상층은 자기 조직에 망라되어 있는 하층군중들을

장악.통제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하층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없다. 상층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여야만 그것을 이용하여 하층군중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하층통일전선을 강화.발전시킬 수 있다. 상층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엄호 밑에 혁명세력을 성과적으로 확대.장성시켜 나갈 수 있으며 혁명투쟁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상층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여야 한다.

상층통일전선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층을 혼전시켜 그 우익을 고립시키고 군중이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상층좌익을 조장.진보시키면서 연합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정당, 단체 상층 안에서 혼전을 일으킴으로써 그 우익세력을 허물고 약화시키며 하층군중이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동시에 좌익세력을 적극 조장시키며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통일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진보시켜야 한다.

상층통일전선사업에서는 상층을 우리 당의 강령 실현과 하층쟁취에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상층통일전선의 목적은 하층군중을 쟁취하며 우리 당의 강령을 실현하는 데 상층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층과의 사업에서는 그들을 거머쥐고 그들의 간판과 허울을 이용하여 군중공작을 벌이며 상층들의 조직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한 군중을 발동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통일전선방침은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가장 빠르고 쉽게 형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지침으로 된다.

3)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이 가지는 특징

통일전선 노선과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이 가지는 특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일전선운동에서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에서 통일전선운동은 하나의 목적, 조국통일과 혁명이 전국적 완성을 위하여 복무하면서도 남북조선의 각이한 역사적 조건과 혁명발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북에서의 통일전선,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 남북통일전선으로 구별된다.

이북에서의 통일전선은 이북에서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주의를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이북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모든 역량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우며 그들을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에로 동원하는 혁명의 추동력이다.

남북통일전선은 국토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과 완전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남북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주체적인 역량에 의거하여 외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은 남북통일전선과의 대비 속에서 명백히 표현된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그 성격과 목적에서 남북통일전선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남북통일전선은 미제에 의하여 분열된 나라와 민족의 재통일을 위한 투쟁,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전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남북합작, 남북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이다. 거기에는 남북통일전선의 성격과 목적이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다.

남북통일전선과는 달리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하나의 사회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통일전선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정권을 쥐지 못한 남조선혁명조직들이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데 기초하여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군중과 정치세력들을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워 미.일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하고 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그 대상에서도 남북통일전선과 구별된다.

남북통일전선의 대상범위는 정세와 조건에 따라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은 말할것도 없고 남조선 집권층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정당, 단체까지도 망라될 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 혁명의 대상까지도 남북합작을 위한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인 것만큼 남조선집권층을 포함한 지배계급, 정당, 단체와의 통일전선은 제기될 수도 없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혁명의 동력인 계급계층 다시 말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군중, 중간세력, 애국적 민주역량과만 진행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그 단결의 기준과 원칙에서도 남북통일전선과는 다른점을 가진다.

남북통일전선의 대상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과거 여하를 묻지 않고 남조선의 모든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같이 손잡고 나갈 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남북통일전선과는 달리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만일 남북단합의 원칙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한다면 우경투항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통일전선운동에서 우경투항주의는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노동계급과 그 당의 영도를 거부하며 적아를 똑똑히 가려내지 못하고 혁명적 입장을 떠나 혁명의 원쑤들을 ≪동맹자≫로,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 무원칙한 연합을 실현하며 계급투쟁을 포기하는 길로 나간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대상을 언제나 계급적 견지에서 평가하고 당의 계급노선에 철저히 서서 원쑤와 벗을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 계급적 분석에 기초하여 투쟁대상과 단결해야 할 대상을 옳게 규정하여야만 원쑤를 고립시키고 군중을 최대한으로 쟁취할 수 있다.

그렇다 하여 지배계급 출신으로서 반제민족적 입장에 서서 싸우려는 개별적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원칙하게 경원하고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적 양심을 가진 개별적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미구국투쟁의 실천 속에서 각성.단련시키면서 손잡고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지하당의 통일전선운동으로서 이북에서 이미 정권을 잡은 노동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진행하는 통일전선과도 구별된다.

그러므로 지하당조직들은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이 가지는 이상과 같은 특성을 똑바로 파악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전략전술적 원칙들과 요구들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통일전선운동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형성.발전시켜야 한다.

2. 통일전선의 조직형태와 그 형성방도

각계각층 군중과 정치세력들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하는 통일전선운동을 성과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적용하며 그것을 옳게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 통일전선의 조직형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의 조직형태에는 기본상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와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당면하게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고 주체적 역량을 키우며 그에 기초하여 점차 다른 정당, 정파, 단체들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통일적인 연합전선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전선 형성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란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한 큰 덩어리의 군중단체(청년단체, 여성단체) 또는 통일전선적 당을 말한다.

남조선에서 당의 역량이 약한 현단계에서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는 것은 통일전선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이다.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연합전선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연합전선체는 그 주체세력이 강하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된 토대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서는 노동계급의 당역량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합법적으로 정치무대에 나서지 못하고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에서는 지하당이 당장 다른 정당, 단체들과의 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결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전선체는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이다.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인 통일전선적 합법당이나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는 정당, 단체들의 연합전선과 같이 그렇게 강유력한 통일전선체로는 될 수 없으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 통일전선의 합리적인 조직형태로 된다.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나 통일전선적인 합법당과 같은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는 어느 개별적인 계급이나 계층을 망라하는 계급계층별 조직과는 달리 공동의 구호, 통일전선적인 강령에 기초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민족자본가, 소상인, 수공업자,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군중을 하나의 조직에 통일적으로 망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당, 단체의 연합전선을 이룩함이 없이도 단일한 대중조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과 군중, 민주인사, 민족주의자들을 직접 연결시키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게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는 정당, 단체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지하당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도 될 수 있다.

남조선에서 지하당의 역량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는 당의 활동이 비합법적으로 전개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적인 정당, 단체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의 합법적 거점이 있어야 한다.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나 통일전선적인 합법적 당과 같은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체는 지하당의 합법적인 통일전선 거점의 형태로 된다.

특히 우리 당의 영향하에 있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당은 여러 정당, 단체들과의 통일전선운동을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당조직을 가지게 된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이러한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당면하게는 반외세, 반파쇼, 반독재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각 정당, 단체, 민주주의적인 당파들과 제휴.합작하여 보수정당 내의 반파쇼세력을 끌어들여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통일적인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운동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이용하여 통일전선형태의 합법적 군중단체와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내오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것이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란 전 남조선적인 범위 또는 중요 지역적인 범위에서 반미구국의 기치 밑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공동연합체를 말한다.

남조선에서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는 것은 통일전선운동을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가장 강력하고 전투력있는 통일전선형태이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무엇보다 여러 정당, 단체들을 망라하는 것만큼 이러한 정당, 정파, 단체들의 모든 조직들과 수단들을 발동함으로써 대중운동, 혁명운동을 힘있게 벌일 수 있는 강력한 조직적 힘을 가진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또한 그에 망라되어 있는 여러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물들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울 수 있다.

연합전선에 참가하는 정당, 정파, 단체들은 여러 계급계층들 속에서 조직되어 활동한다. 그러므로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여러 계급계층들 속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통하여 넓은 사회적 범위에서 정치적 영향을 미치면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게 된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특히 각이한 계급계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여러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는 만큼 그들을 발동함으로써 여러 방향과 측면에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조직.진행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정당운동의 경험은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가 광범한 대중과 정치세력을 묶어세우는 가장 강력한 조직형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

광범한 계급계층과 사회정치세력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여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의 기본조직형태는 정당, 정파, 단체들의 연합전선체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고 특히 지하당의 합법적인 통일전선 거점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반미구국의 기치 밑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 정당, 정파,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2) 통일전선체 형성방도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와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가 가지는 조직형태상의 특성을 정확히 구현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 건설방도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와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건설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방도

①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의 두 가지 방도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방도의 첫째는, 우리 당이 영도하는 청년동맹, 여성동맹과 같은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군중단체를 새로 내오는 것이다.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방도의 둘째는, 기성 단체를 전취하여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진보적인 강령을 든 청년동맹과 같은 군중단체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군중단체에 대해서는 지하당의 핵심을 박아서 그것을 전취함으로써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적들이 만들어 놓은 과제어용단체들에도 들어가서 공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 인입되어 있는 군중들이 적들에게 기만당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개조하고 전취하며 그 단체를 와해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어용단체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통일전선체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오든지간에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사업과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우는 통일전선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대중적 혁명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군중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내오기 위한 조직전술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정세와 역량의 준비정도에 맞게 분산적이고 지방적인 군중단체를 조직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점차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로 확대.발전시키는 전술적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처음부터 단번에 내오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적 조직을 내오자면 그에 필요한 핵심조직들과 군중토대가 갖추어져야 한다. 대중의 준비정도와 요구, 적들의 탄압책동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큰 규모의 조직을 한꺼번에 내올 수는 없다.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내오기 위해서는 계기를 잘 이용하여 도처에 적합한 형태와 규모의 군중단체를 광범히 내오고 점차 그것들을 큰 규모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공고히 하고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중 속에서의 정치사상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군중투쟁을 꾸준히 조직하여 투쟁 속에서 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을 튼튼히 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투쟁속에서 군중단체를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정세가 조성되는 데 따라 그것을 큰 규모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는 중앙적인 조직을 먼저 내오고 각 지방, 각 계층 속에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올 수도 있다.

어느 경우를 취하든지간에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내오는 데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이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를 조직하는데서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여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으며 통일전선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강화할 수 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영도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반일회, 반제청년동맹, 부녀회 등 여러 가지 형식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내옴으로써 빛나는 경험을 창조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건설하는 데서는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이룩된 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을 남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는 조성된 정세와 조건, 대중의 요구와 준비정도 그리고 연령, 성별 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로,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에서 그의 핵심적 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우선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에서 그의 핵심적 골간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 골간을 잘 꾸려야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확대.강화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당의 영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핵심을 육성하여 지도성원들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군중을 교양하여 그 속에서 우리의 핵심대열을 부단히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계급적 원칙을 관철하여야만 그 조직이 공고화와 전투적 위력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기본계급인 노동자, 농민을 묶어세워 통일전선적 군중단체안에 계급적 지반을 튼튼히 꾸리면서 그 기초 위에서 각계각층 군중을 광범히 결속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전선적 군중단체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군중단체를 건전한 정치적 토대 위에서 대중적 조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로,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에서 통일전선적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적 군중단체 건설에서 통일전선적 요구를 옳게 구현한다는 것은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각계각층의 이익을 옳게 결합시켜 공동의 투쟁목표를 정확히 내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중단체를 노동자, 농민과 함께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중단체 건설에서 통일전선적 요구를 구현하자면 우선 그의 투쟁강령을 옳게 내세워야 한다.

통일전선적 군중단체의 투쟁강령은 반드시 우리 당의 최저강령의 요구를 대중의 준비정도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군중단체의 구체적인 형식과 구성상 특성도 반영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동맹, 여성동맹과 같은 경우에는 그의 투쟁강령에서 우리 당의 최저강령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는 데 기초하여 각이한 계층의 청년 또는 여성들의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군중단체의 건설에서 통일전선적 요구를 옳게 구현하자면 또한 그의 조직적 지반을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군중 속에 확대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적 군중단체에는 정당, 단체의 소속여부와 정견, 신앙의 유무를 막론하고 남조선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미일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울 수 있는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다 망라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동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 청년들을 망라하는 청년조직으로, 여성동맹은 민주주의적인 각 계층의 광범한 여성들을 망라하는 대중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내걸고 조직되는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는 자기 대열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함으로써 반제민주주의적인 대중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들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하는 대중적 조직으로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공동투쟁조직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다.

통일전선적 합법당 건설방도

현 남조선의 조건에서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내오는 데에는 기본상 세 가지 방도가 있다.

첫째로, 지하당역량으로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새롭게 내오는 것이다.

이것은 지하당이 자기의 일정한 역량을 가지고 주동적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을 결속하고 새로 진출하는 진보적 혁신세력들을 망라하여 통일전선적 합법당의 내오는

방도이다.

둘째로, 진보적인 경향성을 가진 기성 합법정당 안에 진지를 구축하여 내오는 방도이다.

이 방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본래부터 있던 진보적인 경향성을 가진 합법정당의 양심적인 인물들을 장악하고 그 잔여세력들을 규합하여 지반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당을 복구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새 당을 내오는 형식으로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당을 건설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현재 있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당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 당의 당수, 상층 지도부를 쟁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우리의 핵심이 그 당의 하부조직에 들어가 아래로부터 자기 진지를 올려 꾸림으로써 그 당을 우리 당이 영도하는 정당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보수정당 안에 진지를 구축하여 내오는 방법이다.

이 방도는 지금 있는 보수정당 안에 우리의 프락찌야를 박고 그의 영향하에 보수정당 안의 비교적 진보적인 세력들을 규합하였다가 좋은 정세가 도래할 때 그것을 떼내어 우리 당이 영도하는 합법당을 내오는 것이다.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조성된 조건에 따라 각이한 방도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건설하는데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 요구들이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내오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진지구축에서 중요한 문제는 **김일성**주의 지도핵심을 포치하고 중심세력을 잘 꾸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들에 의거하여 통일전선적 합법당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조직.진행할 수 있고, 이 당에 대한 우리 당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광범히 결속하여 군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공고한 핵심진지와 함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에게 기초하는 튼튼한 군중적 지반을 닦지 않고서는 힘있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건설할 수 없다.

특히 노동자, 농민 속에 지반을 튼튼히 닦아야 한다. 만일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이 노동자, 농민 속에 지반을 닦지 못하고 상층 정객들, 도시소부르조아계층에나 의거한다면 당을 건전한 토대 위에서 힘있는 당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적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적인 합법당 건설에서는 계급노선을 확고히 관철하여 노동자, 농민들 속에 당의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면서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 군중들과 사회정치세력들에 지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의 강령과 구호를 옳게 제기하여야 한다.

강령과 구호를 정확히 들어야만 광범한 대중을 조직.결속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은 그의 통일전선적인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화, 평화통일, 자주독립, 생활개선 등 우리 당의 최저강령에 기초하여 조성된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강령과 구호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저강령은 남조선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통적인 절박한 이해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투쟁목표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정당은 우리 당의 최저강령을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여 제기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 형성방도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운동에 합법적 거점으로 되는 통일전선적 군중단체나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건설하여 합법적 주체세력이 마련되고 통일전선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면 지체없이 다른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는 방도는 조성된 정세와 조건, 대상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이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가 핵심이 되어 개별적인 정당, 정파, 단체와의 연합을 하나 하나 실현하는 방법으로 통일적인 연합전선체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이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연합전선체의 형성을 발기하고 그에 호응해 나서는 여러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의 협상회의를 통하여 연합전선체를 결성할 수도 있다.

통일전선대상인 정당, 정파, 단체에 대한 정치사업을 잘해서 그들로 하여금 연합전선체의 형성을 발기하게 하고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이나 통일전선적 군중단체가 그것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정당, 단체들의 연합전선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통일전선적인 성격을 띤 혁신 정당, 단체들의 기성 연합체를 전취하고 그것을 확대.진보시키는 방법으로 반미구국을 위한 연합전선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정당, 정파, 단체들의 연합전선체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도는 조성된 정세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당, 단체, 각계각층 군중과의 공동투쟁을 광범히 벌이며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동투쟁은 통일전선대상들로 하여금 실제투쟁을 통하여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을 통일전선에 성과적으로 묶어세울 수 있게 한다.

특히 정당, 단체들의 공동투쟁은 그들 사이에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며 공동투쟁조직을 내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정당, 정파,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의 연합전선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조성하여 준다. 그러므로 정세와 계기를 옳게 이용하여 공동투쟁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의 투쟁목적을 내세우고 공동투쟁조직을 내오며 통일전선대상들의 행동통일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바로 투쟁 속에서 연합전선체 형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정당, 단체들의 연합전선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계급적 처지와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고 혁명에 대한 이해관계와 적극성이 다른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군중을 처음부터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끌어들일 수 없으며, 더욱이 그들을 단번에 높은 수준의 연합전선에로 이끌 수는 없다. 따라서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당, 단체들의 연합전선체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처음에는 통일전선의 기본강령 중에서 부분적인 요구에 기초하여 연합을 실현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기본강령을 전면적으로 드는 연합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전선대상의 정당, 단체들은 그들의 정치사상적 제한성으로 하여 우리 당의 통일전선강령을 단번에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당, 단체들의 연합전선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의 부분적 요구에 기초한 연합을 먼저 실현하고 공동행동을 강화하면서 대상의 진보와 각성 정도에 따라 기본강령을 전

면적으로 내세우는 연합에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이다.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또한 지방적인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그것을 전 남조선적인 연합전선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적인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지방적 범위 즉 도, 시, 군 단위에서 민주주의적인 정당, 단체들의 지방조직들과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적인 연합전선체는 일정한 명칭을 가지는 상설협의체로 될 수도 있으며 각 정당, 단체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모여 앉아 협의하고 공동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방적인 연합전선을 공동투쟁, 공동행동을 부단히 벌이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점차 전 남조선적인 연합전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통일전선사업방법

통일전선운동은 사회계급적으로나 정치사상적으로 복잡한 계급계층과 정치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사업을 성과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능란한 방법과 전술이 요구된다.

지하당조직들은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업 방법과 전술에 정통하고 그것을 주어진 조건과 환경, 통일전선대상의 구체적 특성에 맞게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각계각층 군중과 정당, 정파,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교양.전취하며 그들과 합작, 연합하는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1) 정당, 단체,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방법과 전술

(1)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정당, 단체,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정확히 실현하며 통일전선운동을 혁명적 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그러면 통일전선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로, 당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독자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당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의 계급적 입장을 지키며 통일전선사업을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데로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당의 기본 정치적 주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통일전선사업에서의 당의 정치적 주장을 지키지 않고 중간세력의 요구에 무원칙하게 순응하며 피동에 빠져 그들의 뒤꼬리를 따르게 되면 결국 통일전선은 부르조아나 정상배들의 농락물로 이용되고 만다. 따라서 통일전선의 결렬이 두려워 당의 기본 정치적 주장을 저버리거나 혁명의 이익과 배치되는 그릇된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으로 무원칙하게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전선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당의 기본 정치적 주장과 요구를 반드시 다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들과 통일전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가서도 안 된다. 근본입장에서 당의 정치적 주장과 요구를 구체화한 부분적인 요구에 기초해서도 먼저 연합을 실현하면서 점차 그들을 진보시켜 당의 기본 정치적 주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접수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당의 독자적인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독자적인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당이 자체의 조직정치활동을 통하여 당역량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서 진행되는 통일전선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그 엄호를 받으면서 혁명역량을 확대.강화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을 합법적 활동무대로 삼아 혁명역량을 확대.성장시키기 위한 당의 독자적인 조직정치사업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킨다면 대중적인 혁명역량을 조성할 수 없으며 통일전선에 대한 당의 영도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전선 안에서 당의 독자적인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당조직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세워야 한다. 당의 독자적인 조직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여야만 통일전선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혁명역량을 성장시키고 혁명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다.

둘째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각당, 각파의 조직과 정견 및 신앙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제휴.합작하는 것은 통일전선운동의 본성적 요구이다.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우선 각당, 각파의 조직을 존중하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들과 연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조직을 하나씩 떼먹는 식으로 통일전선을 한다면 대상 정당, 단체들은 상층은 겁이 나서 통일전선을 반대해 나설 것이며 결국 통일전선은 결렬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망라되는 정당, 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동의 목적 밑에 그들과 행동통일을 이룩하여 제휴.합작하고 전면적인 연합을 실현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통일전선사업에서는 각당, 각파의 조직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또한 그들의 정견과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상 정당, 단체들의 정견과 신앙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반대.배격하고 억제하여 가지고서는 그들과 제휴.합작할 수 없으며 연합을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앙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에게 정치사상적 영향을 끊임없이 줌으로써 그들을 진보시키고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대상의 신앙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을 진보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통일전선을 공고.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상대방의 정견과 신앙을 침범하지 않는 동시에 그들의 그릇된 사상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인내성있는 설복과 교양 사업을 통하여 대상에게 부단히 혁명적 영향을 주고 혁명사상으로 그들을 교양함으로써 노동계급과 피압박민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끝가지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것이다.

민족자본가들이나 중간정치세력들은 일반적으로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부단히 동요하면서 혁명역량이 강할 때에는 노동계급의 편에 붙고, 반혁명세력이 일시 우세할 때에는 적의 편으로 기울어지며, 적아간의 역량이 상치될 때에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진출하여 정권을 쥐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중간세력, 민족자본가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는 그들의 반제국주의적인 측면과는 단결하는 동시에 기회주의적이고 투항주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통일전선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의 원쑤들과의 투쟁이 아니라 혁명의 동반자들과의 투쟁이며, 단결을 위한 투쟁인 만큼 설복과 폭로, 비판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통일전선대상들의 불철저성과 동요성을 견제하면서 그들을 부단히 진보시키고 개조하여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로, 관문주의와 우경투항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사업에서 관문주의를 극복하여야만 반혁명에 대한 혁명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고 대중적 혁명역량을 조성할 수 있다.

통일전선사업에서는 또한 우경투항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언제

나 당의 계급노선에 철저히 서서 원쑤와 혁명의 편을 엄격히 구별하며 벗과 동정자, 단결하여야 할 대상과만 단결하고 혁명의 원쑤들과는 사소한 타협도 없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좌우경적 편향을 다같이 반대하고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정확히 결합시켜야만 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형성.발전시킬 수 있으며 계급적 선에서 이탈함이 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다.

(2) 각이한 대상과의 사업에서 통일전선구호를 옳게 들어야 한다

구호를 바로 드는 것은 통일전선대상들을 공동행동과 연합에 성과적으로 끌어들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통일전선의 기본구호를 조성된 정세와 조건,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게 잘 구체화하여야 한다.

≪반미≫,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평화통일≫은 남조선혁명의 기본요구를 방영한 통일전선의 기본강령으로서 통일전선사업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구호이다.

그렇다고 하여 전략적인 기본구호의 전부를 모든 대상에게 한꺼번에 제기하거나 그것을 다 접수하는 대상들과만 연합하려고 한다면 광범한 통일전선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남조선에서 통일전선대상의 반미, 반전두환 감정은 각이하며 남조선혁명에 대한 이해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운동에서는 전략적인 기본구호를 견지하면서 남조선에 조성된 조건, 대상의 각성정도에 맞게 그것을 구체화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대상들의 각이한 준비정도를 충분히 파악한 기초위에서 기본구호를 대상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통일전선대상들이 점차 진보되고 객관정세가 성숙되는데 따라 기본구호를 전면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제기하고 제휴.합작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또한 전략적인 구호와 당면한 전술적 구호를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당면한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연합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일전선의 기본강령 수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통일전선의 구호를 드는 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구동존이의 전술적 원칙을 옳게 관철하는 것이다.

어떤 정당, 단체, 개별적인 인사들이 ≪남북협상≫, ≪민주화≫, ≪평화통일≫ 등은 지지하면서도 ≪반공≫을 들고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동존이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 면은 우선 합의를 보고 합작하여 행동통일로 발전시키며, 합의되지 않는 면은 보류해 두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교양을 주어 점차적으로 반공구호를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일 통일전선대상이 우리 당의 근본원칙을 계속 반대하고 반공구호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그를 고립시켜 타격하여야 한다.

구동존이의 원칙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통일전선대상을 아량있게 포섭하여 진보시키는 방법으로 그들과의 연합을 형성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능동자재한 전술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사업에서 구동존이의 원칙을 옳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3) 조성된 정세와 역량관계에 맞게 상하층과의 사업을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여 상층통일전선과 하층통일전선을 결합하는 것은 통일전선에 관한 당의 일관된 방침이다.

이 방침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매 시기 조성된 정세와 조건, 상층의 동향과 역량관계에 따라 상층과의 사업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하층과의 사업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상하층과의 사업을 배합함에 있어서 정당, 정파, 단체의 상층이 반동적이고 그 세력이 강할 때에는 하층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상층에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상층우익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하여 상층을 일률적으로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상층 안에는 반동적인 우익과 함께 그에 대립되는 좌파세력이 있으며 일부 양심적인 분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상층의 진보적인 세력을 쟁취하고 그들이 하층과의 사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하층사업을 배합함에 있어서 정세가 좋고, 대상 정당, 단체의 지도적 상층의 동향이 좋은 경우에는 상층통일전선을 먼저 실현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여야 한다.

상층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층통일전선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층의 동요를 극복하고 그들을 확고히 틀어쥘 수 있으며 그와의 연합을 보다 공고한 토대 위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4) 내부에서의 사업과 외부에서의 사업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통일전선사업에서 내부에서의 사업이란 대상 정당, 단체 안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외부에서의 사업이란 대상 정당, 단체의 밖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선 대상조직 안에 우리의 역량을 박아 진지를 구축하고 그 내부를 진보시키는 내부에서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내부에서의 통일전선공작에서는 지하당 핵심들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대상들과 접촉하면서 친교를 맺고 그들을 반제반독재, 반파쇼민주주의적 입장에 서도록 진보시키면서 묶어세워야 한다.

또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대상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외부에서의 사업을 잘 진행하여야 한다.

외부에서의 사업은 협상을 통하여 당과 당 사이의 연합을 실현할 수도 있고 개별적인 상층과 직접 접촉하여 그를 전취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통일전선사업에서는 내부에서의 사업과 외부에서의 사업을 잘 배합하여야만 내외협공으로써 대상들과의 연합을 성과적으로 촉진시길 수 있다.

(5) 통일전선대상을 둘러싸고 조성되는 여러 가지 모순을 옳게 이용하여야 한다.

모순이용에서 우선 미일침략세력과 민족적 요소 사이의 모순을 틀어쥐고 그것을 조장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질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한편 해설과 설복을 통하여 대상 정당, 단체의 반제민족적 요소를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리하여 대상들을 진보시키면서 그들의 반제민족적 측면과 제휴.합작을 실현하여야 한다.

모순이용정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남조선의 반동계급의 보수정당들과 중간혁신정당들 사이의 모순을 틀어쥐고 그것을 조장시키는 것이다.

보수정당과 중간혁신당, 단체 사이의 모순을 조장하여 양자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반보수, 혁신적 요소를 조장.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 정당, 단체와의 반독재민주주의적 연합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모순이용정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여당 내 각 파벌간의 모순, 여야당간의 모순 그리고 혁신 정당, 단체 상층 내의 우익과 좌익 사이의 모순을 이용하여 적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진보적인 요소를 조장하여 그와의 연합을 공고.발전시키는 것이다.

(6)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의 협상을 옳게 진행하여야 한다.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와의 제휴.합작은 구체적으로 그들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전선대상들과의 제휴.합작에서는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묶어세울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과의 협상을 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상들을 진보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협상을 위한 공동강령초안을 당의 최저강령에 기초하여 잘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협상대표를 옳게 선전하여야 하며 협상에서는 높은 정치도덕적 권위와 정연한 논리로써 우리의 정치적 주장을 대상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7) 통일전선사업에서 언제나 대상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통일전선대상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는 그들의 사회계급적 기초, 정치적 이념과 정강정책, 당면구호, 파별관계와 하층동향 및 조직내부실태, 다른 정당, 단체들과의 관계, 혁명운동과 노동계급의 당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 이해하고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과의 통일전선사업을 주동적으로 벌여 나갈 수 있다.

2) 개별적인 계층과의 통일전선사업방법

(1)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사업방법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통일전선사업에서는 반제민족적 입장에서 싸우려는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적극 포섭하고 그들과 제휴.합작하여야 하며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하층군중 모두를 혁명의 편에 쟁취하여야 한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양심적이 인사들을 적극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동시에 우익민족주의자들을 신축성있게 전술로서 타격하고 철저히 고립시키거나 혹은 좋게 나오는 경우 끌어당겨야 하며 그들이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고 하층군중들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영향하에 있는 하층군중을 혁명의 편에 쟁취할 수 있다.

반제민족적 입장에서 싸우려는 민족주의자들과 제휴.합작하기 위한 사업을 능숙하게 벌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의식적으로 접촉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반제애국주의사상, 당의 통일전선정책, 이북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사리정연한 해설과 설복으로 인내성있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가 당의 사상과 주장의 정당성을 깨닫고 그것을 바다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존중하고 끝까지 포섭하여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담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들과 일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그들이 반제민족적 입장에 서서 싸우는 한 끝까지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2) 민족자본가들과의 통일전선사업방법

남조선혁명에서는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제휴.합작하여 그들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워야 한다.

그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당의 정책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기의 장래를 우려하는 그들의 의구심을 풀어 줄 수 있고 반제민족적 입장에 서서 싸우게 할 수 있다.

그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의 반제적 측면을 조장.발전시키면서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옹호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민족적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인내성있게 진행함과 동시에 그들의 부정적 측면을 견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미일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실제투쟁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혁명의 편에 전취하여야 한다. 공동투쟁을 통하여 그들과의 제휴.합작을 발전시켜야만 그것이 공고한 것으로 된다.

(3)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사업방법

남조선에서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은 종교가 광범한 계급계층을 망라한 홀시할 수 없는 사회세력을 이루고 있는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의 특성과 종교인들의 각이한 계층을 계급적으로 옳게 식별하고 반동적 종교인 상층을 고립시키며 대다수 하층교인군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쟁취하여야 한다. 특히 하층교인군중을 그들의 계층별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의 대중조직에 묶어세워야 한다.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는 종교인들의 사상개조를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종교적 환상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교생활이 미신행위가 얼마나 몽매하고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야 한다.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파쇼, 반독재 민주주의 기치를 들고 그들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파쇼독재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요구하는 종교인들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반파쇼, 반독재 민주주의기치를 들고 종교인들과의 공동투쟁을 적극 벌임으로써 그들과의 통일전선을 투쟁 속에서 형성.발전시켜 나가며 그를 공고화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는 특히 그들의 심리상태와 준비정도에 따라 인내성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소심하고 완고하며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므로 종교인들과의 사업은 꾸준히 계속 반복하여 인내성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교인들 가운데서 신망있고 진보적인 분자들부터 먼저 교양하고 쟁취하여 그들을 내세워 다른 종교인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며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4) 지식인들과의 통일전선사업방법

남조선에서 인텔리들은 미일침략세력의 민족적 압박과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제민주주의적인 혁명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 각성이 빠르며 따라서 노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인텔리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은 혁명운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텔리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친미, 친일 주구로 전락된 극소수의 반동적인 인텔리들을 고립시키고 대다수 인텔리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인텔리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당의 외곽단체인 직업별 대중조직에 결속하여야 한다. 인텔리들을 혁명적 대중조직에 묶어세워야만 목적의식적으로 각성.단련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조직적 역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인텔리들과의 사업에서는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을 아량있게 포섭하고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인텔리들과의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반제반파쇼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광범히 끌어들이며, 이 투쟁에서 그들이 혁명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투쟁 속에서 인텔리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며 그들의 투쟁을 진보시켜 노동자, 농민들의 투





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남조선혁명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 * *

이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남조선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광범히 조성하고 반혁명의 때려엎기 위한 강력한 대중적 혁명역량을 꾸리는 중요한 전략문제이다.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노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계층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의 절대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으며 혁명의 주되는 대상인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모든 역량을 조직.동원할 수 있다.

지하당조직들과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전선문제에 관한 주체적인 전략전술적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를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한국청년전위의 임무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의 첫해가 밝았다.

세기와 세기가 교차되는 역사적인 오늘 우리 청년전위들은 지난 세기를 총화하며 새세기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열화같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세기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영광찬란한 **김일성**세기였다면 이후 21세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기, 영원불멸할 **김정일**세기라는 것이 우리의 총화이다.

. . .

3

한국청년전위는 위대한 장군님세기를 맞이하여 장군님당대에 투쟁하는 영예를 심장에 새기며 역사가 부여한 변혁임무를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한국청년전위는 주석님과 장군님을 심장에 모시고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한민전의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 청년지도핵심이다.

한국청년전위의 역사적 임무는 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나아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미제국주의의 제1생명선을 끊어버림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10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일곱째,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묶어세우고 변혁의 주체를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비결은 오직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건설에 있으며 이를 실현할 때에만 한국변혁운동은 승리의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바로 애국적 혁신정당이다. 여기서 주체세력이란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 조직을 건설하는 주체라는 뜻으로서 한국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대중지반이 있으며 통일전선운동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애국적 혁신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적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운동에서 전위조직의 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견지한다면 전위조직의 독자성은 사실상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의 반파쑈민중전선으로 잘 알 수 있듯이 본래 통일전선운동은 당대 당의 단합으로 시작하였고 4.19직후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는 한편 현재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많은 조건을 고려한다면 현단계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최적의 주체세력은 바로 애국적 혁신정당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연해진다.

애국적 혁신정당의 의의는 우선 대중운동을 당차원의 운동으로 비약시키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대중지반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선거 및 의회 공간 안에서 변혁운동대오의 합법정치부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 진보성과 정치성, 광범한 대중지반의 힘으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십개 정파가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민주노동당이 보여주듯이 혁신정당은 운동대오의 고질적인 정파적 분열상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애국적 혁신정당은 해방직후 이북에서 조선노동당이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대규모 통일전선조직으로 광범한 세력을 결집하여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97프로를 당선시키고 친일매국후보를 낙선시켰던 소중한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범민주진영의 통일성을 지향하며 민족민주후보, 민주후보를 당선시키고 반민족반민주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거만 되면 운동대오가 ≪독자후보론≫과 ≪단일후보론≫으로 분열하는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하는 상황이 되면 애국적 혁신정당은 민족민주진영의 합법정치부대로서의 변혁적 역할을 비상히 고양시킬 것이며 나아가 변혁승리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헤겔이 반동이라고 헤겔철학에서 변증법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되듯이 한국청년전위들은 지난 기간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내의 일부 개량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비약시키는 혁신정당의 의의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에 기반한 애국적 혁신정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한국의 청년전위들은 진보적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하여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준 민주노동당을 자주민주통일투쟁에서 응당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애국적인 혁신정당, 참다운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소파개정국민행동≫이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6.15통일연대≫와 같은 각각 자주, 민주, 통일 운동영역의 광범한 연대전선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 그 건설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연대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로 하루빨리 묶어세울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앞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이 대중화되고 그 성과가 조직화되며 민주노동당이 애국적 혁신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라 한국변혁운동의 최대숙원이며 최대무기인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자주민주통일투쟁이 대중화되고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가 수면위로 부상하는데 발맞추어 이란의 반미반황제항쟁과 우리의 광주항쟁, 6월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오늘에 구현한 범국민반미항전도 드디어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변혁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위업이 달성될 것이다.

2001년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의 원년으로!

이것이 바로 올해 한국청년전위가 들어야 할 주요구호 중의 하나이다.

. .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주체 90(2001)년 1월 20일
서울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7호)

오늘 9월 1일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다. 우리는 정기국회개원을 보면서 국회내에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는 정당도 국회의원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자주민주통일은 한국사회변혁의 기본좌표이다.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실현을 핵심과제로 하는 자주민주통일만이 한국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그러나 한국민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진보적≫이라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당론에 끌려다니며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국민중은 자신의 대표자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야 한다. 그들이 국회에서 자주민주통일을 당당히 피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진보정당을 건설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해서 광범한 국민대중에 기반한 애국적인 혁신정당이다. 또한 진보정당은 민족민주운동대오가 제도정치권에 파견하는 정치적 별동대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가장 적합한 주체세력이다.

진보정당은 변혁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는데서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한국민중을 자주의식화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진보정당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건설될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은 범국민반미항전의 추동력으로 될 것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의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가며 통일정세가 도래함에 따라 진보정당의 역할은 비약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이념과 전국적 대중지반을 가지고 있다. 그 정치적 잠재력은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바 있다. 향후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선명히 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에 기반한다면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장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연합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진보정당건설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전면적 참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총련도 민주노동당가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한총련, 일부 지역총련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이 이미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조건에서 전국연합과 한총련마저 가입한다면 향후 정세는 적지 않게 달라질 것이다. 민족민주운동권의 정치세력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의 양대 선거국면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도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아울러 운동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파간 분열상도 상당히 극복되리라 전망된다.

우리 민중이 위력한 진보정당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변시킬 수 있었던 역사는 여러번 있었다.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조국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격동적이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라는 무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진보정당의 건설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9월 1일
서울

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논설(편집국 보도 9호)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이후 급진전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그 변혁적 역할을 제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민주통일사상으로 교양하고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며 변혁적 역할을 제고하는데서 기본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세련되게 전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제 영역에서 주미철연대, 국보철연대, 민중연대, 시민연대, 통일연대 등 다양한 공투체들이 결성되어 있으며 장차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간고하고 장기적이며 복잡한 조직사상운동, 실천투쟁을 거쳐 다달은 오늘의 민족민주전선운동은 그러나 민족해방,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전진하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을 더욱 높은 수준을 강화발전하기 위한 예비는 바로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란 공산당이나 부르조아정당과는 달리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혁신정당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 당의 성격은 그 이념과 사회계급적 기초에 의하여 규정된다.

합법적 진보정당은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 반대로 부르조아이념이 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애국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한다.

또한 진보정당은 역시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변혁운동의 임무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계급정당이나 반대로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하며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계급을 대중지반으로 삼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전취목표는 사회주의정권이나 부르조아민주정권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권이 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투쟁방도는 대중투쟁이나 선거투쟁의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투쟁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선거투쟁, 의회투쟁을 적극 결합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세계변혁운동사와 특히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변혁세력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는 것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우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한 자주정권수립이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선거공간과 의회연단을 활용하여 대중을 교양조직하고 동원하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대중의식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비합법 전위조직이나 반합법적 대중조직, 통일전선조직과는 달리 합법적 수단과 공간을 통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의식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의식화의 위력한 수단인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교육기관을 일상적인 정당활동, 선전활동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정당은 자신의 강령과 정책을 국민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자제, 총선, 대선 등의 선거에 결합하거나 의회연단을 통하여 광범히 선전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당원을 대중조직이나 통일전선체에 파견하거나 대중조직의 핵심들을 인입함으로써 자신의 대중지반을 강화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을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에 결집시킨다.

진보정당은 통일전선사업을 최고수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정당형태의 조직으로서 국제통일전선운동의 경험으로 보아도, 한국의 60년대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건설하는데서 주동이 되었던 혁신정당의 경험으로 보아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진보적 이념과 광범한 대중지반에 기반하여 기본대중운동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운동단체도 결집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당들과의 제휴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조직력과 선전수단을 발동하고 선거공간 및 의회연단을 통하여 한국의 민족민주단체들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원호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투쟁의 원칙을 실천으로 구현하며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의 높이에서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건설은 제기될 수 있는 좌우편향을 경계하면서 원칙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자주민주통일을 그 지도이념과 강령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의 이념을 사회주의나 시민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기반하지 못한 그릇된 견해로서 각각 기성이론을 우리 사회에 기계적으로 대입시킨 교조주의적 좌편향과 변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량주의적 우편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변혁을 목표로 건설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은 응당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바탕하고 지난 수십성상의 간고한 변혁실천을 통하여 확증되고 내외에 공인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좌표, 자주민주통일을 그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층을 그 사회계급적 지반으로 삼아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소수정예분자들의 비합법적 전위정당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진보정당을 영도계급이라고 하여 노동자계급만의 계급정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편협한 좌경적 견해이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부정하며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으로 건설하는 것도 변혁적 원칙에서 일탈한 우경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한국변혁운동의 성격과 그 역량편성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양심적인 지식인의 기본동력만이 아니라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세력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그 기반 위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나 각계각층의 대중조직, 다양한 명칭의 전선조직은 조직형태와 포괄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긴밀히 연대하고 연

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이며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는 특성상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연계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건설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변혁운동은 대중조직, 전선조직만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견해와 반대로 진보정당의 의의를 절대화하며 대중조직, 전선조직의 의의를 폄하하는 편향들은 다같이 극복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그 어떤 시련과 탄압에도 끄덕하지 않으며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이라는 대중적 지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한편 그 실천적 성과를 조직하는 방향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실천투쟁의 열풍 속에서 그 성과를 조직하며 건설되는 진보정당만이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며 전투적인 정치부대로서 장성발전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대중투쟁에만 몰두하며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선거 및 의회 투쟁만을 정당건설의 동력으로 삼는 견해 역시 편향이 아닐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공동의 좌표를 지향하는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은 응당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에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거하여 건설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

지난 대선 시기의 ≪국민승리 21≫을 모체로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비록 원내진입은 좌절되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령에 내포하는 일정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전의 혁신정당들과 확연히 다른 진보정당이다.

50년대 진보당은 비록 200만표라는 상당한 득표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조봉암이라는 개인적 명망에 의거하였기에 이승만역적의 ≪간첩≫조작극에 무력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60년 4.19봉기 이후 건설되었던 사회당, 사회대중당은 40개단체를 모아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역시 대중적 지반이 취약하여 박정희파쇼도당의 탄압에 와해되었다.

8-90년대 한겨레당이나 민중당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며 선전하였으나 여러 한계를 노정하며 총선 후 해체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기본계급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대선, 총선 이후에도 갈수록 확대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는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성공가능성도 없으면서 ≪선거변혁≫의 환상만 심어주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는 민족민주세력의 우려를 크게 불식시켜주었으며 점차 민주노동당을 기본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노선이 대세를 이루게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와 혁신적 입장은 그간 진보정당건설에 소극적이었던 전국연합과 한총련 등의 민족민주세력으로 하여금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장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좌경적 부분을 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취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강령에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비과학적이고 교조주의적이며 좌경적인 목표로서 민주노동당이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는데서나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획득하는데서나 최대의 장애로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광범한 중간세력을 모두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기존의 부르조아정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역조직망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군중과 중간층을 폭넓게 인입하는 한편 부문조직망 체계를 완성할 때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연합이 지역간연합체의 한계를 조만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반해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 잠재력을 확인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중간층을 묶어세우는데서 우월하다는 점, 통일전선운동을 당차원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해서 향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데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며 주체세력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할 때,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지반축성은 질적으로 비약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원칙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전개함으로써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미자주를 주선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원칙적으로 견지하면서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조건에 맞게 신축성 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할 때 민주노동당은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민족민주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광범한 시민운동세력을 정치적으로 포괄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열풍속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만이 응당한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은 명백하다.

민주노동당이 당면한 내년의 양대선거를 발판으로 차후 총선에서 의회에 진입하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한다면 이는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고르게 승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민주노동당이기에 당선이 가능한 전략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전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제 민족민주세력의 합류가 실현된다면 민족민주대오의 정치세력화에 전환적 국면이 마련될 것이며 향후 선거국면과 정치정세는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을 인입하기 위하여 더욱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전환적 계기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격동적인 정세발전의 요구, 절박한 전선운동의 요구를 당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틀어쥐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애국적이며 통일전선적인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강화발전될 때,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승리를 향한 비약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

통일여명 편집국 호소문(편집국 보도 10호)

하반기 들어 진보정당건설논의가 민족민주세력의 최대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을 결의하고 지금은 이와 관련한 인입활동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전국연합은 역시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논의결정한 바에 기초하고 최근 중앙총회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며 결의한 사항에 의거하여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도 이와 관련한 지역총련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강연회, 간담회를 열며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진보정당건설사업은 6.15공동선언 이후 급변하는 정치정세와 내년의 양대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며 속도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총련운동가들이 조국의 운명을 진두에서 개척하는 선봉대, 주력군답게 자주적인 관점에서 책임있게, 창조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진보정당건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결집할 때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논의되고 추진되는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과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국민대중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는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입니다.

애국적인 혁신정당이자 통일전선적인 합법정당인 진보정당은 그간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해 왔던 한총련의 관점에서 볼 때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변혁적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보정당건설은 한총련의 강령이자 지향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자주민주통일의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상승발전시켜 광범한 대중을 자주의식화, 조직화하고 대중투쟁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일반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우선 자신의 우월한 조직체계, 선전수단들을 활용하는 한편 일상적인 대중정치사업과 선거 및 의회 연단을 통한 주동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민주통일의 이념과 강령으로 의식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또한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과 자신의 대중활동, 합법적 정치투쟁으로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60년대 혁신정당이 이룩하였던 성과를 계승하여 대규모의 위력한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데서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또한 정당이라는 우월한 조직 및 선전 체계를 이용하여 자체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 한편 민족민주단체들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적극 지지원호함으로써 운동의 대중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가며 선거 및 의회 연단을 활용하는 합법정치공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조건과 조미수교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역사적 전환국면이 도래하고 있는 정세로 보건대 진보정당의 의의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보정당건설은 한총련의 절박한 당면요구인 한총련합법화와 운동대중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한총련이 합법적인 진보정당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면 그간 파쇼당국과 매문언론에 의하여 조작되었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적 인상은 크게 극복될 것입니다. 물론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철폐하고 합법화의 숙원을 이룩하는 사업이 진보정당가입으로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공안당국이 무슨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학생운동을 탄압하려 할 경우에도 한총련은 이전의 대중조직체계 외에 당조직체계라는 위력한 수단을 가지고 탄압책동을 주동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십개 정파가 모여 공동목표를 가지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민주노동당으로의 결합을 계기로 한총련은 자신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민중민주계열을 비롯한 제 학생운동세력과의 연대활동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족해방계열만이 아니라 민중민주계열까지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광폭의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하는 사업이 매우 용이해 질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급을 망라하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합법적 진보정당에 한총련이 적극 결합한다면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학생운동과 기본계급운동과의 연대연합을 크게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연합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크지만 현재 위축된 학생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운동을 대중화, 합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은 명백합니다.

또한 진보정당이라는 당 조직 및 선전 체계를 통하여 기존의 학생운동, 곧 학생회 중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운동을 당차원의 높이에서 전개하는 전환적인 국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실현이라는 한총련의 강령을 진보정당이라는 합법적이면서도 위력한 조직선전체계를 통하여 학생대중에게 홍보하는 한편 이러한 이념과 강령 하에 학생운동을 전개할 활동가들을 합법정당차원에서 공공연히 모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학생운동이 대중적 지반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운동핵심들을 대대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학생회중심체계로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투쟁에 당차원으로 결합함으로써 세련되고 능란하게 선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거 때마다 ≪참여≫니 ≪보이코트≫니, ≪독자후보≫니 ≪단일후보≫니 뭐니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역량을 허비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방비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보정당건설은 한총련이 그간 악전고투하면서 견지하여 왔던 자주민주통일노선을 당차원의 운동으로 상승발전시키는 한편 현재 한총련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총련합법화, 운동대중화에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에 가장 근접하고 있으며 발전전망이 확고한 진보정당은 바로 민주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시기 한국혁신정당사에 명멸하였던 수많은 진보정당들과는 확연히 다른 조직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주민주통일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강령에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 건설되었으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무시못할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한편 갈수록 당세가 확장되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소유한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아직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정치강령이 있다거나 민주노총, 전빈련 외에는 이렇다할 대중조직을 인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 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조직세가 발전하는가 하면 내년의 양대선거를 앞두고 ≪재창당≫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이며 발전전망있는 진보정당이라는 점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참다운 진보정당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족민주세력의 기대와 희망은 한국민족민주세력의 대

표적인 연합체인 전국연합이 올해초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건설을 논의결정하고 최근의 중앙총회에서 결합을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민주전선체로서 현재 전농을 비롯한 여러 민족민주단체들을 내포하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전국연합이 민주노동당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됨으로써 이제 민주노동당은 비약적으로 강화된 조직력을 가지고 향후 대중 및 선거 투쟁에서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학생 또한 얼마전 충청총련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동당 관련 안건을 제출하고 그 구체적 추진여부를 대표자회의에 위임하였는가 하면 민주노동당가입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총련에서는 간담회를, 고려대에서는 강연회를 여는 등 전국의 여러 지역, 주요 대학에서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학생운동의 대표체인 한총련이 객관정세에 주동적으로 조응하는 한편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급히 조직적 논의를 결집하고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절박하면서도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총련의 조직적 논의와 결정은 전국연합과 충청총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진보정당건설과 결합이라는 중대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광범한 학생대중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한 측면과 반미반이회창투쟁 등 당면정세가 요구하는 기타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의 중대한 양대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는 대의원대회개최시기는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추석전이 불가능해진 현시점에서 대학선거일정과 대의원보위를 고려하여 볼 때 남북학생대토론회가 열리는 10월 20일이 마지막 계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총련의 민주노동당가입과 관련한 활동은 철저히 대중중심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공개적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한총련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며 제 사업을 주도하는 운동가들, 이른바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지금 학생대중들을 중심에 놓고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하고 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동하며 민주노동당과의 결합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뒤로는 민주노동당과의 ≪비밀간담회≫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데, 이는 비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작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당면정세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측면에서나 한총련운동의 차원에서나 전환적 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진보정당건설사업이 결코 대중중심의 원칙에서 속도있게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이 당면한 민주노동당과의 결합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업은 지난 기간 ≪민주노동당노선은 개량주의노선≫이라고 규정하며 학생운동가들의 민주노동당관련 관점을 왜곡시켰던데 대한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총화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총화가 선행될 때만이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을 따르는 일부 기층운동가들을 비롯해서 대다수 학생운동가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 견해를 긍정적 견해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올바른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그간 진행된 민주노동당과 한총련상집 간의 간담회의 내용조차 중집에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 올해가 다 가고 있는 지금까지 중상은 말할 것도 없고 중집에서조차 진보정당관련 논의를 단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허심하게 총화하여야 다른 운동가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의 양대선거와 그 시금석이 될 10.25 보궐선거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민주노동당을 공공연히 비판하던 전국연합까지도 그 결합을 결정하고 전면화하는 이 전환적 국면에 아무런 공식적 논의도 없고 구체적 일정이나 대책도 없는 오늘의 한총련상황을 보고 백만학도를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한국변혁운동을 진두에서 개척해 나아가는 한총련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한총련내 다른 일부운동가들은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이 10월 말에 중앙총회를 통해 민주노동당결합을 위한 정치위원회를 결성하고 한총련간부결의자들은 그 위원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에 동요하며 일정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대중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이 여전히 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업하기보다는 자파의 이익과 준비정도를 앞세우며 민주노동당관련 한총련일정을 잡고 소극적으로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에서 이들 일부운동가들의 동요와 협조는 결과적으로 ≪한총련주도운동가≫들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운동가들은 대중중심이 아니라 분파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항상 분파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유야무야되는 법이며 당면한 민주노동당결합문제와 관련한 약속 역시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추석이 임박한 오늘까지 중앙총회개최와 관련한 그 어떤 중집회의나 중상회의도 추진한 바 없으며 그들이 주최하는 대중적인 강연회나 공개적인 간부간담회가 열린 적도 없으며 진보정당 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무런 홍보선전활동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대중을 중심에 놓고 활발한 정치토론과 주도면밀한 정치사업 속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추진되어야 할 한총련의 진보정당건설문제, 민주노동당결합문제가 주인인 대중을 소외시키며 상층간부중심으로, 그것도 일부 분파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비밀리에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한총련이 10월이라는 마지막 시기까지 놓치며 올 하반기도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합의도, 결의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10월말 중앙총회를 은밀히 흘리다가 결국 이를 파기한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이나 이에 동요하며 협조한 다른 일부운동가들이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총련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업하지 못함으로써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는 사업에서 분파주의, 소극보신주의의 오류를 범하며 대중과 역사 앞에 응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진보정당이 90년대 초중반에만 건설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남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민족민주운동은 지금보다 훨씬 전진하였을 것이며 객관정세도 더욱 변혁에 유리하게 전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학생운동의 지도부들은 과학적인 정세인식과 주동성, 적극성의 부족으로 운동발전의 결정적 계기들을 놓쳤던 경험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중과 역사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관점과 태도에서 당면한 진보정당건설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급변하는 정세는 더더욱 청년학생운동가들을 비롯한 제 민족민주세력이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건설로 자주민주통일운동은 대중화, 합법화의 전기를 마련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며 민족민주세력은 향후 정치정세를 주동적으로 타개해 나아갈 강력한 변혁적 무기를 틀어쥐게 될 것입니다.

한총련운동, 한국변혁운동의 비약과 승리를 위한 전환적 계기인 진보정당건설에 한총련운동가들이 적극 떨쳐나설 것을 확신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9월 22일
서울

한총련운동가들을 위한 진보정당건설 관련 일문일답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편집국 보도 11호)

통일여명 편집국은 기간 한총련운동가들이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질의사항과 문제의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국 통일여명 편집국의 논설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와 호소문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에 간결하게 표현된 내용에 대한 다른 형식의 해설로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논문, 호소문에서 글의 종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지만 한총련운동가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의 피력으로도 될 것입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에 질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노동당의 강령이나 조직체계, 입당절차나 민주노동당전국학생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총학생회나 민주노동당학생지부와의 관계,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과의 관계 등은 민주노동당과의 간담회나 대중강연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의의가 크다면 우리의 견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당건설 관련 일문일답 1≫에서는 ≪통일여명≫의 성격에 맞게 주체의 사상과 전략전술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1. 진보정당을 소자산계급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국에서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계급적으로 성격규정 할 때 노동자계급의 변혁정당이라기보다는 소자산계급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인 맑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진보정당이 건설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여 노동계급의 변혁정당이 건설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소자산계급의 진보정당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건설되어 있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 건설되고 다른 부문을 적극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향후 정세발전에 따라서 성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란민중당은 이란회교혁명 이후 이란공산당으로 전화발전하였습니다.

2. 이전의 혁신정당, 진보정당이 실패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은 50년대 대선에서 200만표를 획득하는 등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나 이는 주로 조봉암이라는 정치인의 개인적 명망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역적의 ≪간첩≫조작극에 무력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60년 4.19봉기 이후 40개 단체를 결집하며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건설하며 대중운동,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사회당, 사회대중당 역시 대중적 지반이 취약하여 박정희도당의 파쇼적 탄압에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8-90년대 한겨레당이나 민중당 역시 광범한 대중조직력을 갖지 못하여 선거 이후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보정당건설의 중심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 추진되었다는 점, 총선에서 비록 원내에는 진입하지 못하였지만 무시못할 정치적 잠재력을 시위하였다는 점, 총선 이후 당세가 부단히 확대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혁신정당, 진보정당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국연합이 결합을 조직적으로 결의하는가 하면 한총련의 결합도 임박하였다는 점까지 본다면 민주노동당이 결코 이전 혁신정당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상승발전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단체나 전선조직만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통해서도 전개함으로써 한차원 높인다는 것입니다. 당조직은 조직발전의 최고수위에 있는 조직으로서 자신의 강력한 조직 및 선전 체계를 통하여 대중운동을 높은 수준에서 전개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선전수단들과 선거 및 의회 연단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국제통일전선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다른 정당까지 망라하는 대규모의 통일전선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자주민주통일운동이라는 말처럼 진보정당이 건설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중적인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상승시킨다는 말이 대중단체나 전선조직의 의의를 폄하하며 앞으로는 정당만으로 대중운동을 전개한다는 말이 아님은 상식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상승발전시킨다는 말이나 한국민족민주대오, 한국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한다는 말이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 곧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건설되면 향후 한국민족민주운동은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이라는 수단 외에 당조직이라는 위력한 무기까지 틀어쥐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한국변혁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전환적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의 대중투쟁을 선거 및 의회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며 운동의 대중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4. 왜 민족해방계열만의 진보정당을 따로 건설하면 안됩니까?

변혁운동은 본성상 단결을 지향하며 큰 덩어리로 단결할수록 커다란 힘을 발휘하며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비록 민중민주계열이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사상에서 교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민족해방계열이 우선적으로 연대연합하여 단결하여야 할 변혁운동상의 동지들입니다. 만약 민족해방계열이 자체세력만으로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면 민중민주계열도 자체세력을 결집하며 또 다른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한국변혁운동의 분열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변혁역량의 고립약화이며 공안파쇼당국의 탄압에 의한 와해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민주노동당이라는 계파의 구별이 없이 수십개 정파가 모여 건설한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족해방계열만의 진보정당건설은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내에 있는 일부 민중민주계열들은 전국연합과 한총련이 민주노동당에 결합한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하며 향후 민족해방계열의 당내 패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주시대의 향도이념과 과학적인 변혁이론으로 무장하며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

고 자부하는 민족해방계열은 패권적인 일체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허심하고 겸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운동의 주류이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총련이 민주노동당에 결합할 때 이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 입당하는 한총련운동가들은 먼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헌신적인 활동으로 오늘의 민주노동당을 만드는데 기여한 다른 계열동지들에게 예의를 다해야 할 것이며 절대 주도권을 다투거나 패권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5.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은 ≪선거변혁≫이라는 개량주의노선에 빠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전망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지난 기간 ≪전선무용론≫이나 ≪선거변혁론≫과 같은 개량주의노선을 배격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사상투쟁과 변혁실천을 통하여 민족민주세력의 절대다수는 선거를 통해 변혁을 이룩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오직 이란 회교혁명식의 범국민반미항전, 반미전민항쟁으로만 한국변혁이 가능하다는 변혁노선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향후 대규모의 강력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고 하는 견해도 결국 범국민반미항전만이 유일한 변혁적 투쟁노선이라는 견실한 사상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선거 및 의회 활동은 전민항쟁을 지향하는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화하고 합법화하며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비록 민주노동당의 일부 활동가들 중에는 여전히 ≪선거변혁≫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활동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변혁≫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민항쟁노선을 견지하는 견실한 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왜 그간 학생운동권에서는 민주노동당노선을 개량주의노선이라고 비판하였습니까?

이는 변절자 김영환을 비롯한 일부 운동권이 진보정당건설을 개량주의적 관점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개량주의세력과의 사상전을 중시하였던 학생운동권이 그 관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중반 쏘련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이북마저 제국주의포위환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때 민족민주세력의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그릇된 사상전략적 관점과 개인의 공명출세주의적 야심에서 개량주의적인 진보정당건설노선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총련을 비롯한 사람사랑계열의 학생운동가들이 이에 적극 동조하며 학생운동의 변혁성을 거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겔철학이 반동적이라고 그 변증법적 긍정성마저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개량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고 해서 진보정당노선자체가 개량주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총련을 주도하는 학생운동가들, 곧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오랫동안 ≪민주노동당노선은 개량주의노선≫이라는 도식을 고집하며 널리 퍼뜨림으로써 현재의 상당수 학생운동가들이 이러한 도식을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총련주도운동가≫들조차 입장을 선회하여 민주노동당결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지난 기간 왜곡된 견해를 퍼뜨린 책임에 대하여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허심하게 총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총화사업으로부터 민주노동당결합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응당한 순서로 될 것입니다. 한편 민주노동당내에는 ≪선거변혁≫의 환상에 젖어있거나 궁극적 변혁을 지향하지 않는 개량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대중화하고 한국민족민주세력, 한국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진보정당의 의의를 폄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전위당을 따르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상당수 운동가들이 개량주의노선이라고 비난하는 진보정당이야말로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하는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진보정당건설에 앞장서 왔습니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한국변혁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7.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면 향후 선거를 통해 변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한 변혁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세계변혁사와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입니다. 특히 브라질노동자당은 지자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그 당수인 룰라가 대선에서도 세번씩이나 참여하며 적지 않은 득표를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 후유증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거변혁≫이라는 환상속에 치루어지는 선거는 승리할 수도 없고 심각한 패배의식만 양산한다는 것을 중요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미제국주의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두고 생명선처럼 여기는 철저한 식민지반자본주의국가로서 선거변혁은 절대 환상입니다. 한국변혁운동의 승리는 이미 전위당과 주체의 변혁이론이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오직 범국민반미항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하는 무기입니다. 즉 민주노동당은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할 대규모의 강력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 향후 자신의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활동을 통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대중화, 합법화함으로써 범국민반미항전을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물론 이란회교혁명처럼 범국민반미항전이 이루어진 직후 수립될 임시적 성격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추후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 완전한 합법성을 띠는 공고한 자주적 민주정부로 전화발전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변혁적 제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성격과 임무를 변화발전시킬 것이며 전민항쟁 이후 민족민주세력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란회교혁명과 해방직후 이북의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민주노동당은 말그대로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며 전국연합은 이에 비해 반합법적인 전선조직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기본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고 광범한 대중을 지반으로 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을 지향한다고 볼 때 그 이념에서도 별 차이가 없지만 통일전선적 조직이라는데서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은 합법적인 진보정당과 반합법적인 민족민주전선이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상 민주노동당은 합법정당이며 전국연합은 전선조직입니다. 그리고 활동방법상 민주노동당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든 선거 및 의회 활동이든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한다면 전국연합은 제도정치권 밖에서 반합법적인 대중정치투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강령과 노농학기본군중과 광범한 중간층을 대중지반으로 한다는 공통성으로 하여 두 조직이 적극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필연이고 당연합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의 결합은 전국연합에게는 정치세력화의 숙원을 해결하는 계기로 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에게는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혁신정당, 진보정당 건설의 경험이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지 못한 진보정당은 식민지파쇼세력의 공안탄압 등으로 쉽게 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민주노동당이 각계 대중조직을 비롯하여 전국연합과 같은 역사 깊고 역량 있는 민족민주전선과 밀접히 결합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전국연합과의 결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재창당≫을 선언한 바 있으며 전국연합도 이에 화답하듯이 비슷한 시기의 대의원

대회에서 진보정당건설을 결의하고 최근에는 구체적 결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의 결합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에 결합하고 있는 전농의 연대연합만이 아니라 각각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으로의 교차가입을 추동할 것이라 예견됩니다. 향후 민주노동당은 전국연합과 더불어 대규모의 위력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투쟁을 활성화하며 결국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육박해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연합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서 최근 논의결정된 전국연합의 민주노동당에의 결합은 전국연합 관련한 활동가들이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다는 말이지 전국연합이 통째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입≫대신 ≪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9. 왜 민주노동당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사업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민주노총이 제한된 수자의 노동대중만을 포괄하며 시민단체들로부터 경원시되는 조건, 전국연합이 지역간연합체의 한계를 조만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향후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할 대규모의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장 적합한 주체세력은 바로 민주노동당이라는 견해입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 결성되고 진보적 이념을 소유한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시못할 잠재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선거 이후에도 당세가 부단히 확장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향후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한다면 국제통일전선의 경험을 보나 지난 60년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건설 경험을 보나 대규모의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최적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은 응당 변혁적 전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변혁적 전위당은 지하당의 형태로 비합활동만을 전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이나 노농학기본군중과 광범한 중간층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의 주동적 역할로 대규모의 위력한 민족민주전선체가 건설되는 과정은 곧 전위당의 지도가 관철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전위당이 비합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10.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 주체세력은 ≪원칙상 변혁적 전위조직≫이라고 하였는데 왜 민주노동당을 주체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민전이 90년대 초에 발간하였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지적한 대로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사업의 주체세력은 ≪원칙상 변혁적 전위조직≫입니다. 그러나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비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80년대 중반에 집필되고 회람된 통일혁명당의 내부문건 ≪통일전선론≫에 밝혀져 있듯이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통일전선사업의 주체세력으로 됩니다. 한민전의 강령인 자주민주통일을 정치이념으로 삼고 한민전의 대중지반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그리고 광범한 중간층에 의거하는 애국적이며 통일전선적인 합법정당은 비록 한민전처럼 철저한 변혁적인 전위정당은 아니지만 자신의 우월한 당조직체계를 통하여 통일전선사업에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년 4.19봉기 직후 결성된 사회당, 사회대중당이 당시 40개 단체를 결집하여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라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한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노동당이야말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사업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 비합법 전위정당과 합법적 진보정당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찌 비합법 전위조직의 성원이 아닌 우리들이 그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체의 변혁이론과 당건설이론에 의거하고 몇가지 사실을 근거로 추리해 볼 뿐입니다. 비합법 전위정당과 합법적인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은 그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합법형태와 합법형태, 정예분자들의 조직과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조직이라는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한민전이라는 전위조직이 비합법형태를 띠고 정수분자들만을 망라하는 지하당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란 점은 명백합니다. 한편 한민전, 곧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비록 전선적 명칭이지만 분명 전위당이며 민주노동당은 비록 정당적 명칭이지만 통일전선적인 조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변혁운동의 참모부로서의 변혁정당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수십년간 한국변혁운동을 편향없이 영도하여 온 한민전 뿐입니다.

12. 한민전은 왜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하여 민주노동당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은 미제국주의자들과 파쇼공안당국도 다 듣는 공개방송입니다. 전세계혁명사를 보아도 전위조직이 공개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전략전술을 다 공개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민주노동당이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절대화한다면 교조주의적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민전방송에 나오지 않는 견해는 무조건 오류라고 보는 것과 같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견해가 주체의 전략전술에 부합하고 한국변혁의 현실에 조응하는가 여부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한민전의 방송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무시하는 견해가 아니라는 점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가지는 이러한 결정적 의의를 부정하거나 홀시했다면 지난 1년 가까이 공안당국의 탄압을 초래하면서까지 위험한 방송녹취문건을 통신상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통일혁명당은 80년대 중반 ≪통일전선론≫이라는 내부문건을 통하여 통일전선에 대한 지하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문건에서 합법적인 진보정당의 의의를 강조하며 합법적인 주체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조선노동당창건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북했던 단체들 중 이북의 의견대로 맨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단체는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나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여러 단체와 민주노동당을 한차원에서 열거할 때 민주노동당을 앞세우며 강조하는 것도 자주 목격됩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노동당이나 한민전이 얼마나 민주노동당을 중시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왜 민주노동당의 이북의 상대역이 조선노동당이 아니라 조선사회당입니까?

잘 알다시피 조선사회당은 이북에서 소자산계급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신민당이 전화발전한 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상 소자산계급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조선사회당을 상대역으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 기간에서도 방북한 민주노동당의 대표들은 조선사회당을 상대역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천영세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간부들과 회담한 김영대축준위위원장은 바로 조선사회당의 위원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민주노동당은 다른 나라의 당들과의 교류에서도 자신의 성격에 맞는 상대역을 잘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성격은 추후 정세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란민중당이 회교혁명 이후 이란공산당으로 전화발전하였던 경험이 참고로 될 것입니다.



유시민의 100분토론

– 당면정세와 진보정당건설

노동운동가 김현준 투고문(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13호)

통일여명 편집국은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하여 통일여명의 애독자 한 동지가 투고한 글을 공개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풍자적 성격의 단편소설과 같은 것으로서 사실주의적 원칙으로 작성되었을 뿐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유시민씨나 최규엽씨 등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등장시킨 점, 널리 양해되기를 바라며 그분들에게 정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청년들의 유머라고 보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민 –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0일은 이미 예고해드린대로 당면정세와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정치인들을 모시고 100분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중있는 분들이 패널로 나오셨는데요, 제 오른쪽에는 가까운 데로부터 김중권전민주당대표, 이회창한나라당총재,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가 나오셨고요, 왼쪽에는 브라질에서 룰라브라질노동자당대표가 먼 걸음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최규엽민주노동당자통위원장이 나와주셨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화면을 통해서 지난해 민주노동당의 출범식장면과 국회의원총선거장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이 6.15공동선언에 합의하는 장면, 올해 부시정권이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 공식발표하는 장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장면,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와 방북대표구속장면, 그리고 최근 미국비행기테러사건 등이 나왔습니다. 다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중권전대표부터 해서 정세와 관련해 짧게 말씀해주시지요. 김전대표님은 최근 당무를 거부하다가 결국 당대표에서 물러나셨는데...



김중권 – 그간 당대표를 맡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몇마디 하지요. 당대표라고 하지만 디제이당에서 사실 실권은 없지요. 권력이라는 것도 청와대에 주 1회 직보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비서실장은 배석하지요. 8월초 보고시 말입니다, 10.25구로을보궐선거얘기가 나왔어요. 그 때 일단 한번 떠볼려고 한광옥실장에게 선거에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실장은 예상대로 고사했지요. 그러자 각하께서 저를 가르키면서 자네가 한번 수고해주지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뻤지요. 저는 그후 이것을 내락으로 알고 일을 추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망할놈의 청와대비서실에서 흔드는거예요. 뭐 제가 나가면 참신성이 부족해 떨어진다나. 김한길정도가 나가야 한다나. 그러니 제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당사에 안나가고 이틀은 당무를 거부하며 몽니를 부린 겁니다. 보궐선거를 계기로 대권에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청와대비서진들 때문에 꼬인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대구경북지역표를 고려한다면 디제이는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당대표에서는 쫒겨난 셈인데, 그러니까 한광옥이 대표하대요. 구로을은 예상대로 김한길로 결정되었고... 청와대비서진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디제이는 저 못 버립니다. 어차피 다음 대선도 지역선거 아닙니까. 정세에 대해선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권력욕밖에 없는데...

유시민 – 하하, 그렇게 된거군요. 다음으로 이회창총재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듣자하니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날 텔레비전을 끄고 골방에서 손자와 화투를 치셨다고 하는데...

이회창 – 아니, 그걸 어떻게...

유시민 – 뭘 그렇게 당혹해 하십니까.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에 나왔잖아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기도 하지요. 요즘은 인터넷에 인터넷 ≪구국의 소리≫라고 매주 꼬박꼬박 뜨는데... 인터넷을 할 줄 모르시나요. 보기보다 무식하시군요. 그건 그렇고 어디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죠.



이회창 – 요즘 그래서 운동권이 일제히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구만. 최근들어 더 심해졌더라고...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난 해 6.15선언 이후 어디 마음놓고 나다니질 못했습니다. 김영삼전대통령이 고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안에서 깡통에 볼일 볼 때만 해도 남얘긴줄 알았는데, 올해 내가 그 짝이더라 말입니다. 사실 내가 지은 죄가 많기는 하지요. 아버지가 친일검사였다는 것은 그렇다치자고. 그렇지만 약관의 25살나이에 박정희대통령 심복노릇하며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을 사형선고한것은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거지. 김영삼대통령시절, 그 밑에서 대북전쟁책동에 앞장선거나 아이엠에프신탁통치에 결정적으로 한건 한거나 다 역사에 남을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현정부 들어서는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군영구주둔을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개정불가론≫이니 ≪상호주의론≫니 ≪퍼주기론≫이니 다 내가 늘어놓은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욕먹어도 싸지요. 그래도 부시정권 들어서니 좀 살 만해집디다. 부시각하께서 김대통령의 6.15선언실현정책에 제동을 걸며 한미회담에서 망



신줄 때는 정말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부시각하께서는 내년 대선에 나를 밀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6.15선언파탄시키는데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지요. 민족앞에 죄를 짓든, 국민들이 뭐라하든 말입니다, 반북입장, 6.15반대입장만 확고히 틀어쥐면 대권은 따놓은 당상이예요. 최근 조선일보나 수구보수세력들이 모두 나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거 세상이 다 알지요? 다 부시각하께서 시킨거예요. 부시각하께서 방한하시는 10월 중순까지 우리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수구보수세력들이 더 날뛸거예요. 일종의 충성경쟁이지요. 김종필명예총재가 임동원이 친 것도 다 부시각하의 눈에 들려고 한거 아닙니까. 우린 해임될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뭐 우리가 장관해임안 낸게 어디 한둘인가요. 하여튼 각하께서 밀어주시니까 김영삼전대통령도 김종필명예총재도 결국 나와 손잡게 될 겁니다.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가요. 조선일보요? 그 신문은 ≪대쪽신문≫이예요. 왜 정부는 헌법에 나와있는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겁니까. 아무튼 세상이 혼탁한건 정치인들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법을 안지켜서 그런거예요. ≪법대로≫해야 합니다. 내가 출세한 것은 다 ≪법대로≫ 했기 때문이예요.

유시민 – 아니, 조선일보사주구속은 세금비리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헌법에 반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요. 이건 사회자가 보기에도 모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총재님, 이마에 땀 좀 닦으시지요.

이회창 – 음음, 당신도 정치해봐요. 조선일보는 사실 우리 당 기관지나 다름없잖아요. 조선일보 밀어줘야 내년 대선에서도 그 흑색선전덕을 볼게 아닙니까. 정치판에 뛰어든 후 는것은 궤변이요, 한것은 망동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김종필총재님.

김종필 – 유구무언이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마오. 허흠, 사오택일(四·五擇一) 잘 하라, 4는 1을 구(救)함이요, 5는 1을 육(戮)함이라. 4.19는 통일을 구함이요, 5.16은 통일을 죽임이라는 뜻이지. 나, 쿠데타 이래 5.16정신, 반통일정신으로 살아왔어. 오직 친미친일로 출세하고 반북모략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천하의 사대매국정치인이 바로 나야. 이회창총재, 아직 나 따라올려면 멀었어. 내공을 더 쌓아야돼. 이제사 얘긴데, 김대중대통령의 정권창출도 다 당시 미국의 지시 하에 내가 나서서 된 거야. 이총재 당신이 대통령됐으면 아이엠에프때 국민들이 가만있었겠어. 다 들고일어나서 뒤집어져도 몇번은 뒤집어졌어. 국민들이 민주투사라고 생각하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들에게 ≪고통분담론≫도 먹히는거고, ≪노사정회의≫이라는 개량조치도 가능한거야. 또 호남도 쥐죽은 듯 조용해진거 아닌가. 지금 외환위기 벗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단물 다 빼먹고 흔들 때로 흔든 국제자본이 이젠 됐다싶으니까 놔두는 거지 뭐 현정부가 한게 있나. 경제는 더 나빠졌어. 민심은 갈수록 험악하고. 김대통령이 노벨상이다 6.15선언이다 뭐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여론은 바닥이잖아. 이참에 공조깨고 나와야지 언제 나오나. 우리도 단물 빼먹을 만치 빼먹었고, 여태까지 사정도 충분히 피했고... 자민련의 정체성을 찾아야 선거에 한마디 할께 아닌가. 물론 부시각하의 말씀이 계셨지. 이젠 김대중과 끊고 이회창을 잡을 때가 됐다고 말이야. 8월초에 방미할 때 들었어. 미국이 확실히 믿는 것은 40년넘게 충성스런 나야. 친미친일이 나보다 더 골수에 박혀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그후 ≪제이피대망론≫이니 뭐니 하며 여론몰이하고 임동원이를 제물로 삼아 공조깬거야. 김영삼전대통령에게는 8월초에 밀사보내서 공조깬다고 귀띔해줬지. 8월 25일 자민련, 민주당, 민국당 3당합당기자회견 예정됐었다는 얘기 알지? 그 판 깨고 아침에 일본으로 출국한 것도 다 이런 속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나, 정치 9단이야, 정치 9단. 디제이도 눈치챘을거야. 눈치채면 어쩔거야. 부시각하가 시킨 일인데. 게다가 레임덕아닌가. 그래도 디제이는 디제이야. 그 와중에 이한동총리를 꼬득였어. 이한동이 배신자, 세상물정을 아는 나이인데... 방망이로 내 뒤통수를 쳤어. 어디 두고 보자고.



유시민 – 얘기가 험해지는데, 거기서 끊겠습니다. 듣고보니까, 머지않아 이회창총재님과 김종필명예총재가 손을 잡겠군요. 역시 공통점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최규엽자통위원장에게 돌리겠습니다. 원래는 권영길민주노동당대표가 나오시기로 했는데 대신 나오셨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이번 8.15방북사건부터 말씀해주시죠.

최규엽 – 우리 당의 권영길대표께서 올 상반기내내 있었던 10만킬로민생대장정을 하신 것 알고있지요? 저기 앞에 있는 정치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시지요. 그 후과로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일전에는 방청석에서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토론자로 자리에 앉고 보니 나날이 발전하는 민주노동당의 위상을 보는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합니다. 물론 이북 갔다 온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한마디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했습니다. 장성발전하는 노동자, 농민의 위세를 볼 때는 크게 감동했지요. 말많은 3대헌장이니 5대헌장이니 하는 기념탑앞에서의 행사도 노동자, 농민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처럼 제가 앞장선 것도 사실입니다. 앞장선거 당연하지요. 참관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황석영씨 왈, 자기는 뒤에서 말리기만 했다는데, 하하, 갔다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실제 말리는 것처럼 하면서 제 뒤를 민 게 황석영씹니다. 그 날 참관하는데 반대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아닙니까.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리인데, 그 돌멩이 앞에서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 식이라면 조선인민군이 깔아놓은 도로를 지나가는 것은 왜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까. 지난 해 노동당55돌행사에 참가했을 때는 이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요란한 것입니까. 우리 당 부대변인의 논평에도 나와있듯이 반북세력의 파쇼광란극에 현정권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예요. 저 앞에 계시는 이총재님 말입니다, 어디서 대권언질을 받았는지 요즘 완전히 반통일수구세력의 대장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선일보가 어떻게 ≪대쪽신문≫입니까. 비록 조선일보가 한나라당기관지나 다름없다고 해도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하여튼 한나라당, 조선일보덕분에 저도 오래간만에 공안당국의 밀실수사도 받아보고 참 세상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계기에 연방제 완전히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거 철폐시켜야 합니다. 연방제가 문제시되는 한 이런 마녀사냥극은 또 반복될 겁니다. 우리 당은 이번 기회에 연방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데 상호존중하며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는 연방제가 뭐가 문젭니까. 6.15정신이자 곧 연방제정신인겁니다.



유시민 – 역시 말씀을 재밌게 잘 하시는군요.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워낙 맺힌게



많아서인지 끊지 않으면 밤새도록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럼 국내정세 얘기는 이 정도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몰고온 미국뉴욕테러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딱 두 분의 얘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창총재님과 최규엽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 이번 테러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새뮤얼 헌팅턴인가 하는 미국교수의 문명충돌론, 그 얘기가 맞습니다. 물론 나 아직 그 책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 그 책 내용에 대해선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 미국을 상대로 감히 테러를 하다니 간이 부었어요. 이 기회에 이런 무리를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정보기관이 라덴을 지목했다는데 미국정보기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일각에는 음모론이니 뭐니 하지만 다 공산당빨갱이들이 하는 헛수작이예요. 미국과 같이 신성한 자유국가에서 그런 조작을 할 리 없잖아요. 하여튼 미 부시대통령께서 의회연설에서 천명하셨듯이 세계는 미국을 지지할 것인지 테러를 지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 대목 나오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이 다 나오데요. 역시 부시각하께서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물론 그 연설문은 나처럼 비서진들이 썼겠지요. 우리 당 비서진들 각성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연설문 못 씁니까. 어쨌든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서는 라덴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느니, 아프간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니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미국이 라덴을 찍었으면 그만이지요. 5천명이 죽고 미국의 자존심이 깨졌는데 빨리 희생양 만들어야죠. 아프간국민이 고생하는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왜 이슬람을 믿고 그래요, 기독교 믿어요. 그러면 문명국되고 천당갑니다. 우리 나라도 이번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본보세요.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합니까. 본받아야 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한바탕 무기소화하고 나면 미국경제 뜰거고 미국경제 뜨면 우리 경제도 뜹니다. 그러니 무조건 전쟁해야 합니다. 묵념하고 조기달고 다 이거 소용없어요. 무조건 참전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부시각하의 10월방한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셔서 저 한번 크게 밀어주셔야지 한나라당 통솔하기도 쉬워지고 후원금도 팍팍 들어오는데... 참, 텔레비전 보니 부시각하께서 라덴보고 ≪디스 맨≫이라고 하시데요, 야, 얼마나 통쾌하던지, 이 소리는 김대통령이 올해 미국가서 기자회견 때 들었던 소리잖아요. 역시 부시각하께서는 통찰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람 볼 줄 아십니다.

유시민 – 점입가경이군요.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다음 최규엽위원장님.

최규엽 – 이건 자민투위나 전국연합의 대변인이 가장 잘 코멘트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리지요. 이번 테러사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강경정책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인과응보지요. 부시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더욱 노골화되고 신냉전기류가 확산되었습니다. 엠디니 하는 것도 다 지배주의야심의 산물이지요. 물론 그 배후에는 군산복합체가 숨어있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이처럼 강경일변도로 나가면서 이스라엘만 밀어주니 이슬람세력이 왜 열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라덴이나 이슬람세력이 이번 테러사건을 저질렀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있다면 미정보기관들이 흘리는 이러저러한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무고한 미국국민들이 5천명이나 죽은데 대하여는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미국민들은 자신들의 팍스아메리카이념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미국민들은 그간 이라크전쟁, 유고전쟁을 햄버거먹고 콜라마시면서 영화보듯 즐기지 않았습니까.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도 전쟁때 미군에 의하여 수백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했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에이피통신이 밝힌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에이피통신은 그 기사로 퓰리처상까지 받았지않습니까. 우리는 테러를 반대합니다.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부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테러도 반대하지만 전쟁도 반대합니다. 지금 미국이 준비하는 전쟁은 무고한 아프간민중들을 학살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테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참전논의도 반대합니다. 만약 현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참전을 추진한다면 전민족적인 저항을 받을 겁니다. 한편 우리의 투쟁방식은 테러가 아니라 전민항쟁입니다. 비록 합법정당에 몸담은 저이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민항쟁입니다.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키고 불러일으키는 것, 그 무궁한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관적 노선입니다. 미국은 전민항쟁이 테러보다 천백배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엠디, 이거 완전히 허재비라는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부시정권은 더늦기 전에 엠디 때려치우는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용으로 추진중인 대북강경책도 걷어치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의 용단을 내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제발 저 이회창패거리 좀 충동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상식이하의 집단인데다 미국상전까지 강경하게 나오니까 덩달아 설치는거 아닙니까. 우린 미국이 90년대 내내 이북과 대결하다가 깨져가지고 조미공동성명 낸거, 그래서 2-3내에 조미수교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시작할꺼라는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시기가 문제지 부시의 대북정책도 바뀌는게 시간문제지요. 그때가 되면 열심히 미국상전 쫓아다니던 저 이회창총재와 한나라당은 꽝 될 겁니다. 말 나온김에 이총재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충고하는데, 빨리 기회 만들어서 이북 한번 갔다오세요. 갔다오면 정신이 번쩍 들겁니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설쳤구나 생각 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세요. 후대도 생각하셔야지요. 이완용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회창 – 어떻게 살긴, 다 잘 살고 있지. 지금 항일애국자들은 개죽도 못 먹는데, 친일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거 모르나. 나 봐라, 사실 내가 바로 그 전형이라. 우리 집안이 친일지주였고 아버지가 친일검사보라는거 아직 모르고 있었나. 김영삼전대통령도 봐라, 얼마나 잘 사나. 숨겨놓은 돈만 10조원은 될 거다. 나도 기필코 권좌에 앉고 말거다. 법대로만 하면 돼, 법대로만...

유시민 – 이제 그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역시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논쟁이 치열하네요. 그럼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이 문제는 역시 진보정당의 세계적인 대명사인 브라질노동자당의 룰라당수부터 말씀을 해 주시는게 순서일꺼 같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치신 손가락은 후유증이 없으십니까.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진보정당의 미래와 전망에 대하여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룰라 – 예, 괜찮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멀리 왔지만 역시 오기를 잘 했네요. 듣던대로 한국은 금수강산입니다. 그리



고 노동계급이 대단히 전투적이며 활동가들도 이론수준이나 작풍이나 모두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우리보다 분파주의가 심한 것이 눈에 띄는데... 우리 나라의 분파주의는 진보정당사업하면서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민주집중제원칙만 잘 지키면 분파주의는 배겨내질 못하지요. 우리 나라도 한국처럼 겉으로는 독립국가인 것 같지만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오죽하면 남미를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한국처럼 분단은 되지 않았구요, 그래선지 반공의식도 덜합니다. 그리고 비합법 전위당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합법적인 진보정당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브라질노동자당은 현재 수많은 주요도시와 농촌에 뿌리를 내리며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수도나 진배없는 상파울로 등 주요도시에 시장을 낸적도 있지요. 의회에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 힘에 기초해서 제가 대통령선거에도 여러번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패배했고 그 후유증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식민지사회에서 선거로는 변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선거변혁은 환상입니다. 세계역사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칠레의 아옌데정권도 하루아침에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거변혁이 불가능하다고 진보정당 그 자체에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우는데서나,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데서나 커다한 의의가 있지요. 선거와 의회를 활용하는게 얼마나 큰 의의가 있는지,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까 방송전에 최규엽위원장과 얘기할 때 알았는데, 한국에선 울산의 경우가 바로 그 실례가 됩니다. 말나온김에 민주노동당에게 울산과 같은 지역을 전략단위로 설정하고 모범으로 만드는게 참 중요하다는 조언을 하고싶습니다. 한편 한국은 수십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합법 전위당이 있는데다가 10년 넘게 활동해온 전국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민중이 진보정당까지 갖게 되면 변혁역량이 비약하게 될 겁니다. 진보정당이 전국연합 등과 힘을 합치면 지자제나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겁니다. 이건 제가 보증하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선거변혁은 불가능해도 진보정당의 의의는 지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우리 브라질노동자당이 보다 긴밀하게 교류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규엽위원장님.

최규엽 – 제게 그런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내에서 그 제안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민주노동당에 대해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브라질노동자당에 비해 매우 청소하다는건 사실입니다.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진보정당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해방직후는 별개는 치더라도 50년대 조봉암선생의 진보당이나 60년 사회당, 사회대중당, 그리고 8-90년대 한겨레당, 민중당... 비록 대중적 지반이 취약하여 파쇼탄압으로 와해되기는 하였지만 그 흐름은 죽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이전 진보정당들이 가졌던 한계를 많이 극복한 전혀 새로운 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하여 건설된 당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무시못할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도 부단히 당세가 발전하는 그런 당인 것입니다. 그래선지 지금은 그간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던 전국연합과 한총련의 활동가들도 속속 입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연합정책위원장 출신이라 잘 아는데, 전국연합내에 민주노동당노선을 개량이라고 비판하던 세력이 좀 많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인천연합 관련 70명이 입당하며 머지 않아 2차, 3차로 추가입당한다고 합니다. 아예 전국연합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와 최근 중앙총회를 통해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결정하였습니다. 한총련도 말입니다, 글쎄 민주노동당을 개량이라고 하던 그 세력들도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더군요. 다만 한총련주류는 비밀간담회를 선호하고 다른 운동가들은 대중강연회나 공개간담회를 추진하더군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제가 모를리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군요. 하여튼 내년의 양대선거를 앞두고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힘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6월 지자제선거는 볼만할 겁니다. 우리 당이 비록 역사는 짧아도 그 역량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지구당에 당원만 1만 8천명입니다. 그 중 4천명이 당비를 안내는데, 거 왜 안내는지 모르겠어요. 월 1만원밖에 안하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당에 전국연합과 한총련이 가세하면 내년 지자제선거에는 돌풍이 불 겁니다. 지자제선거에 바람이 불면 기존의 보수정당중심의 정치권에 대지각변동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년 대선에 독자후보를 낼 겁니다. 올해 민생대장정을 전개하였던 권영길대표가 아마 후보로 될 겁니다. 옆에 계시는 룰라당수가 노동자출신인데 반해 우리 대표는 명문대를 나온 인텔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을 노동운동에 헌신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1백만표정도 획득하고 2004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하면 진보정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겁니다. 후후, 앞에 계신 정치인들 표정이 굳어지셨군요. 두려우실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대하라는겁니다. ≪역사의 대하≫라는 제목의 이북소설도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밤에 잠이 안올 겁니다. 민중이 각성되고 나아가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필연이고 지금은 그저 시작단계 일 뿐입니다. 향후 북미관계는 2003년 경수로제공시한을 계기로 수교로 나아갈꺼고, 그렇다면 앞에 계신 정치인들이 그토록 매어달리는 주한미군의 철수도 시간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그런 의미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전민중적으로 벌여나갈 겁니다. 이회창총재님께 하나 물어보지요. 미군이 나가게 되면 의지할거라곤 국보법밖에 없지요?

이회창 –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하나.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우리 생명이야. 미군이 나가면 국가보안법밖에 더 있나. 그래서 적당히 개정할 수는 있어도 철폐는 절대로 안돼! 아니야, 개정도 안돼, 무조건 국보법은 손 못 돼, 절대로!.

김종필 – 그래서 내가 디제이와 공조를 깬거야.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만든 법인데,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꿔, 못 바꿔!

최규엽 – 하하, 그래 세상이 어디 두분 총재님 뜻대로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이 자리는 공적인 토론회 자린데, 반말투는 귀에 거슬리네요. 교양있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미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으로 사실상 끝장났지요. 글쎄 범민련과 한총련이 방북하는 날이 올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번에 조선일보 등이 방북대표사건을 열내며 조작한다고 한들 기차보고 짖는 개 이상 안됩니다. 하하. 그리고 지금은 이미 노동자, 농민이 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나서는 세상입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을 통해 자신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전선운동에도 앞장설 겁니다. 이남의 모든 운동단체, 시민단체를 망라하고 나아가 개혁적인 정치인들까지 포괄해서 정말 큰 덩어리의 전선체를 만들겁니다. 그래서 당이 좋다는거 아닙니까. 4.19직후 사회당, 사회대중당은 40개 단체를 묶어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열배가 넘는 단체를 묶어



세울 겁니다. 그러면 이란식의 전민항쟁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앞의 총재님들도 비행기편 걱정을 하셔야 할겁니다. 하하하...

이회창, 김종필 – 저런, 저런, 말, 말 조심해라!

룰라 – 하하하.

김중권 – 최위원장, 나도 비행기편을 걱정해야 하나요?

최규엽 – 글쎄요, 민중들 마음이겠지요. 그러니 앞으로 처신 좀 잘 하세요. 하하.

유시민 – 예, 예, 진정들 하시지요. 특히 이총재님, 김총재님 진정하세요. 뭐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안의 열기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여기오신 방청객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예, 저기 손든 여성 방청객, 먼저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방청객 – 예, 저는 연세대학교 99학번 오현아라고 합니다. 토론과정을 보니 누가 민족의 편이고 누가 외세의 편인지 확연히 드러나네요. 최규엽위원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진보정당에 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내년의 양대선거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어떻게 하면 한총련운동을 활성화하는가, 합법화를 이룩하는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총련운동가들 사이에서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건설과 한총련운동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엽 – 얼굴만 이쁘게 아니라 질문도 예리하네요. 왜 한총련이 진보정당건설에 동참하여야 하는가, 이거 최근 월간 ≪통일여명≫의 호소문,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조하자≫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읽어보았나요?

여성 방청객 – 예, 저는 ≪반비선≫이라 ≪통일여명≫에서 발표한 글들은 꼬박꼬박 읽어봐요.

최규엽 – 하하, 그래요, 제가 ≪반비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자민투위의 글이나 ≪통일여명≫은 꼭 봅니다.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비선≫에서도 많이 본다고 합디다. 그건 그렇고... 거기에 잘 나와있듯이, 한마디로 한총련운동과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하여 진보정당은 꼭 건설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총련이 그간 악전고투하면서 추진해온 노선이 바로 자주민주통일이 아닙니까. 진보정당은 바로 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당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말하여 한국민중,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거지요. 그 결과 운동이 대중화되고 나아가 합법화되게 될겁니다. 앞서 룰라당수도 밝혔듯이 진보정당은 운동을 대중화하고 활성화하는데 비할바 없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진보정당은 먼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수단까지도 활용할 수 있지요. 또 가가호호 방문하며 하는 일상적인 정치선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디 그뿐인가요.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에 정치에 쏠리는 선거 때는 완전히 진보정당의 판이지요. 선거, 이거 잘 준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각성시킬 수 있는 계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입하면 더 볼만할겁니다. 국회에 미군철수와 연방제의 목소리가 당당히 울려퍼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요. 자주민주통일, 이거 삽시간에 대중화, 합법화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은 민족민주세력이 제도권에 파견하는 별동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진보정당은 대중단체나 전국연합같은 전선조직들도 크게 엄호해 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총련과 같이 탄압받는 조직들에게 민주노동당은 든든한 우군이 될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이 나서면 큰 덩어리의 연합전선체를 만드는 것도 쉬워지지요. 특히 우리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가입해 있잖아요? 여기에 전농과 한총련이 가세하고 시민단체들까지 포괄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나서면 시민단체까지 망라해서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하는 큰 덩어리의 연합전선체를 만드는게 용이해질겁니다. 그러면 이란회교변혁같은 범국민반미항전도 꿈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당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한총련이 그가 지향한 바와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의의만 있는가, 아닙니다. 한총련이 가입하면 한총련에게 좋은 특별한 이유가 한둘이 아니지요. 우선 당국과 언론에 의해 조작된 ≪불법성≫, ≪폭력성≫의 이미지가 크게 해소되지요. 합법정당활동을 하는데, 이적단체니 폭력단체니 하는 음해모략이 국민들에게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또 피디계열과의 관계도 개선될 겁니다. 이거 무시할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엔엘인 한총련이 피디까지 품어안게 되면 학생운동 완전히 비약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학농학연대도 촉진될겁니다. 민중연대, 이거 한민전이 방송을 통해 청년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지적 중 하나 아닙니까? 각 대학마다 당지부가 건설되면 학생운동권은 학생회 외에도 당조직이라는 끝내주는 무기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겁니다. 학생대중들에 대한 교양사업이나 조직사업을 학생회조직말고 당조직까지 동원하면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연방제를 강령으로 하는 합법정당을 통해 공공연한 정치선전, 조직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때만 되면 ≪후보단일론≫이니 ≪독자후보론≫이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도 없어질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사회자가 시간없다고 자꾸 눈치를 주니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고려대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들었을거예요. 연세대는 왜 강연회 안합니까? 초청만 하면 저는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어요.

유시민 –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규엽위원장의 고대강연이 무척 인기였다고 하더군요. 정성희전사무부총장의 강연이나 간담회도 반향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후 진보정당 관련해서 많은 강연회, 간담회가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럼 다른 방청객의 질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의 남성 방청객이 해주셨으면... 예, 저기 손드신 분,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남성 방청객 – 예, 저는 구로청년회 회원 노동자 박철익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보니 누가 우리 노동자의 벗이고 누가 적인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역시 최규엽위원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말씀대로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 통일운동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상반기 내내 정권퇴진을 외쳤습니다. 잘 못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정말로 한국의 대표 진보정당이 되려면 뛰어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규엽 – 예,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극복해야할 점이 많지요.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사회변혁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령에 있고요, 대중지반도 민주노총과 전빈련이 전부입니다. 강령부터 자주민주통일로 선명하게 개정해야지요. 사회주의강령은 우리 사회의 성격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강령으로는 대중지반을 확 넓힐 수가 없지요. 전국연합이 결합을 결의하였습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이참에 전농문제도 풀어야 하는데 그건 그리 쉽게 안되네요. 그래도 멀지 않을 겁니다. 한총련가입, 이건 잘 될거라고 봅니다. 광범한 시민단체들과의 결합도 중요하지요. 내년 선거가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지구당조직만으로는 저 앞의 보수정당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민주노동당이 지역조직망만이 아니라 부문조직망을 고르게 갖춘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비약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기해도 좋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정권퇴진을 내건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그러니 대중적으로 고립되지요. 6.15공동선언이라는 남북정부간의 상층통일전선이 결성된 정세에 맞지 않아요. 대중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며 그런 정서도 아닙니다. 반정부투쟁이자 민주화투쟁은 아닙니다. 이런 도식은 이제 깰 때가 되었지요. 지금은 반정부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민주화투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말해 정권퇴진보다는 6.15선언을 파탄시키려 하는 반통일세력과 맞서 싸우고 국보법철폐투쟁을 힘차게 벌일 때입니다. 정권퇴진투쟁은 현정권인 6.15선언을 깼을 때 해야 맞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농민, 청년학생과 어깨겯고 자주민주통일로 나아가는 당당한 영도계급이지요. 노동현장으로 투신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가슴벅찹니다. 참, 가만 보니 낯익은 분이군요. 구로청년회와 우리 금천지구당은 가깝지요. 이따 이 토론회 끝나고나면 같이 술한잔 합시다. 박철익이라, 소설 ≪애국시대≫에 나오는 이름이네요. 가명 아닌가요?

룰라 – 거, 그 술자리에 나도 끼워줄 수 있습니까?

최규엽 – 물론이지요, 오늘 ≪백세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유시민 – 정말 분위기가 좋군요, 저도 이따... 그리고 가명얘긴, 사전에 신분을 확인했으니 본명이 맞습니다. 자,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 딱 2분씩만 드릴테니 진보정당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하시지요.

김종필 – 나부터 하지. 내가 미 시아이에이 지령에 따라 박정희전대통령과 야밤에 총들고 후들후들 떨며 한강다리 건널 때부터 해서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나. 그 동안 진보정당인지 뭔지 하는 빨갱이당이 한두번만 고개를 들지 않았는데, 다 내가 앞장서서 짓뭉개버렸지. 그 사회당인가 사회대중당인가 하는 것부터 해서, 노동이니 민중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는 당들말이야. 헌데,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잡초처럼 또 생기고 또 생긴단 말이야. 다 배후에 있는 공산당들때문이지. 저기 저 앞에 있는 최규엽이도 그 무슨 남부노동자사건인가 뭔가 하는 걸로 80년대 이미 크게 징역을 산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은 이북도 맘대로 갔다오고 텔레비젼토론회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민주노동당에 있는 핵심들도 대부분이 징역갔다 온 빨갱이들이야. 그저 80년대나 90년대 초중반만 같았아도 ≪간첩단≫사건 터뜨리며 박살내는 건데, 국가보안법도 예전같지 않고, 세상 말조야 말조... 아이구... 나도 말이지 피곤해. 이 나이에 널뛰기도 한두번이지. 언제는 김영삼에 붙었다가 김대중에 붙고 이제는 이회창에 붙어야 하니... 갈수록 자민련의 인기는 떨어지지, 뭐, ≪신동아≫의 조사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이 자민련을 제끼고 3위라나. 나 참 기막혀서... 창당된지 2년도 안돼 3위라니 앞으로 5년, 10년 뒤면... 눈앞이 캄캄해... 믿는 것은 오직 상전미국밖에 없는데, 미국도 이북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형편이니... 정말 비행기편 걱정이 든다니까. 차라리 일찌감치 총맞아 죽은 박대통령이 나은 팔자인지도 모르겠어.

이회창 – 아니, 천하의 제이피답지 않게 왜 그런 넋두리입니까. 역사를 보세요. 미국이나 우리에게는 빅카드가 있어요. 이승만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곧 죽게됐을 때, 터진게 6.25전쟁이고 미국이 90년대 내내 제2의 6.25전쟁을 추진한 것도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5027작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전쟁, 전쟁밖에 출로가 없어요. 미국이 아프간과 확 붙어버려야 하고, 한반도에서도 그 불똥이 튀어야 합니다. 그래야 6.15선언이다 민주노동당이다 뭐다 하는거 다 불질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미군영구주둔론≫이니 ≪이북주적론≫이니 퍼뜨린 것이지요. 두고보아요. 김영삼시절 정말 전쟁직전까지 갔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터뜨리고 말겁니다. 건곤일척, 아, 제이피 앞에서 문자써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면 출로가 없어요. 민주노동당, 내가 보기에도 위협적이에요. 빨갱이들이 얼마나 준비해왔는지, 요즘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예요. 당대표라는 사람은 10만킬로민생투어다 뭐다 하며 민중속으로 들어가지, 당세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어 가지, 이제는 재야운동권, 학생운동권마저 들어간다고 난리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내에서 개혁파들이 탈당한다고 연일 으름장인데... 이부영같은 사람은 탈당해서 민주노동당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만한 위인이예요.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나 할까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만약 내년 지자제선거에서 바람이라도 분다면 대선은 끝장,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안기관에서 찔러준 정보에 의하며 이번 8.15때 조선사회당당수라는 사람까지 이회창반대투쟁을 역설했다나요. 이북이 나를 비토하는건 분명합니다. 그간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왜 안그렇겠어요. 아, 예전에는 우리 군부가 디제이를 비토한다 뭐다 했는데, 이제는 이북이 이회창을 비토한다 뭐다 하는 세상이 됐어요. 국민들은 지금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해요. 저런 소갈머리없는 놈이 과연 화통하고 탁월한 **김정일**위원장의 상대가 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하긴 산전수전 다 겪고 노벨상까지 움켜쥔 디제이도 김위원장 앞에서는 어른 앞의 애잖아요. 디제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뭘 해보겠어요. 그저 대권이나 쥐어보자는 속심이지요. 그거 차지하면 온갖 부와 향락은 다 내손안에 있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되면 여비서부터 갈아 버릴거야. 흐흐... 그건 그렇고, 그래선지 요즘은 더더욱 밥맛이 없어요. 보다시피 내 관상은 말상이고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또 문자썼네. 미안합니다, 제이피. 근데 근심걱정으로 이 가을에 살이 안쩌요. 이 스트레스를 말입니다, 이번 추석에 손자놈과 화투치며 풀 계획입니다. 화투는 백만인의 두뇌스포츠라고 하잖습니까. 부시각하께서 방한하시면 화투를 선물로 줄까했는데, 김중권대표 어때요, 굳 아이디어였지요?

김중권 – 솔직히 대답하면, 생긴대로 논다고나 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이 체신머리가 없습니까. 그러니 지하철에서 여승객에게 망신이나 당하지. 참 그 야무진 여승객이 민주노동당원이었다지요? 역시 민주노동당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군요. 쯧쯧, 어찌 저런 사람이 야당의 대표가 됐을까. 하긴 김영삼같은 천하의 무식꾼, 난봉꾼도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니... 나, 짧게 얘기하지요. 어차피 내년 대선은 지역선거고 연합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만약 민주노동당이 지자제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약진한다면 우리 민주당도 달리 볼겁니다. 민주노동당과의 제휴를 적



극 모색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차기정권은 이북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만한 경륜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그만한 인물이 못 되는거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도 오십보백보예요. 다만 노무현이는 어떨까 싶네요. 그래도 보수세력과 손잡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일단 민주당에 들어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거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보정당이 무섭다는거 아닙니까. 만약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속에 확실히 자리잡으면 그때는 ≪비판적 지지론≫의 약발이 완전히 떨어질겁니다. 그때가서는 노무현, 김근태부터 해서 민주당내 적지않은 개혁인사들이 민주노동당으로 이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당이 민주노동당으로 흡수통합되지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 당의 태생적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고보면 결국 재야운동권이든, 개혁정치인이든, 시민운동가들이든 모두 진보정당으로 모이는거 아닙니까? 청와대비서실도 운영해보고 여당당대표도 해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가면 나도 받아줄려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거보다 힘들겠지요? 하여튼 나는 지금 대권밖에 생각이 없어요. 디제이는 나를 절대로 못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선거예요. 내 얼굴을 보세요. 이게 어디 대통령관상입니까. 그러나 얼굴이 무슨 상관입니까. 문제는 지역감정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비빌 언덕은 바로 그 지역감정입니다. 지역감정...

유시민 – 유심히 쳐다보니 정말 관상이... 뭐라 표현할 수 없네요. 그런 점에서 이총재님과 막상막하십니다. 구시대정치인의 전형인 김중권전대표의 진보정당가입이라, 정말 대단한 농담이군요. 김전대표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저도 느낀게 많습니다. 결국 모든 길이 진보정당으로 통하네요. 저도 늦기 전에 입당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다만 이 프로를 끝낼 때까지는 유보하는게 여러모로 좋겠지요. 하여튼 기운내십시요. 이회창총재는 저 관상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그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헌데, 보면 볼수록 관상이... 혐오... 자, 그럼 제 왼쪽의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말씀씩만 하시지요.

룰라 –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점을 느끼고 갑니다. 역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맑스의 금언은 진리입니다. 이제는 시대추이에 맞게 만국의 민중이여, 단결하라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모든 민중이 단결하여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운동권들은 만국의 노동자, 민중과 단결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민중들이 하나로 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결의 사상이 있는 한 한국진보정당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리와 대세의 편에 있는 한국민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최규엽 – 지난해 노동당창건 55돌 행사를 직접 참관하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이북민중들이 영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니 슈퍼파워아메리카도 꼼짝 못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비록 내외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이 극심하지만 다 거품일 뿐입니다. 6.15공동선언이니 조미공동성명이니 하는 자주의 대하를 되돌릴 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민족의 편에 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반공주의자였던 김구, 최덕신선생도 민족의 편으로 돌아서서 역사에 애국자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조국통일3대헌장의 하나인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마지막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나선다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도량입니까.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더욱 혁신하고 전진하여 기필코 한국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고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반드시 자주민주통일이 실현되는 자주의 세기로 역사에 빛날 것입니다. 끝으로 유시민씨, 그간 이 프로를 보며 유시민씨를 유심히 관찰했었는데 예전의 유시민씨가 아니더군요. 뭐, 지금 한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이게 어디 진보적인 세계사를 쓴 저자의 말이 맞습니까? 아무리 공개방송이라고 하지만 너무 오른쪽으로 막나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 최규엽위원장도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안 그러면 난리납니다. 나라고 좋아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하여튼 이따 술한잔 하면서 더 얘기해봅시다. 지금 시청자 한분과 전화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시청자 – 오늘 토론을 잘 보았습니다. 역시 이회창, 김종필은 천하의 몹쓸 인간말종들임에 틀림이 없군요. 룰라와 최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민중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극에 다달은 상황이지요. 문제는 기성정당들을 대체할 만한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운동권들이 대안세력인가 하면 엄밀히 말해 아직은 멀었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디제이라면 운동권들에게 당신들은 집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는 재야운동권도 대답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진보정당의 닻을 올렸다고! 저도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아침해와 같은 우리 민중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방제 얘기도 나왔는데, 얼마전에 제가 황광우연수원장님과 연방제문제로 설전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토론을 듣고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참, 인터넷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게시판에 내가 목욕을 한달에 한번 한다, 두번 한다 말이 많은데, 그런 얘기 좀 올리지 마세요.

유시민 – 아니, 왠 목욕얘기? 잠깐만,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시청자 – 깜박했군요, 예, 저는 남원에 사는 홍기표라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남원연수원의 상근간사지요. 최규엽위원장님, 남원에 한번 오신다더니 왜 아직 안오시는거예요.

최규엽 – 하하, 8.15때 바빴잖아요. 곧 내려가지요.

유시민 – 아, 그 유명한 홍기표씨군요. 저도 그 게시판에서 ≪홍기표와 아낙네들≫이라는 유머를 보고 유쾌하게 웃었었는데 정말 남원에 가보고 싶더군요. 하여튼 그 외지에서 황광우원장님과 함께 연수원을 세우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골학교를 기증받아 연수원으로 개조하는 것이나, 당원들이 이불과 책을 기증한다거나, 연수원을 고향가듯이 부담없이 찾아가도록 만든 것이나 역시 진보정당은 연수원운영도 다르더군요. 홍기표씨, 남원이 그렇게 경치가 좋다면서요?

시청자 – 두말하면 잔소립니다. 유시민씨도 한번 놀러오시지요.

유시민 – 전화에 초청까지, 하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대한 주제를 첨예한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토론하니 당연히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을 하루빨리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하는지,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진보정당건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중은 자신의 요구를 옳게 대변할 그런 참다운 정당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

한국민민운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족 점의 하나가 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일상운동에서 행동통일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상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과 행동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민민운동의 운명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은 모종의 패권의식에 사로잡혀 연대, 연합을 고의로 외면하거나 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각개 약진하면서 좌절과 시련을 거듭 불러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민민운동의 이 같은 중요한 결점을 극복하는데 일조 하려는 순수한 생각에서 필자는 그 동안 우리 민민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건설문제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한국변혁운동의 성공을 위한 중대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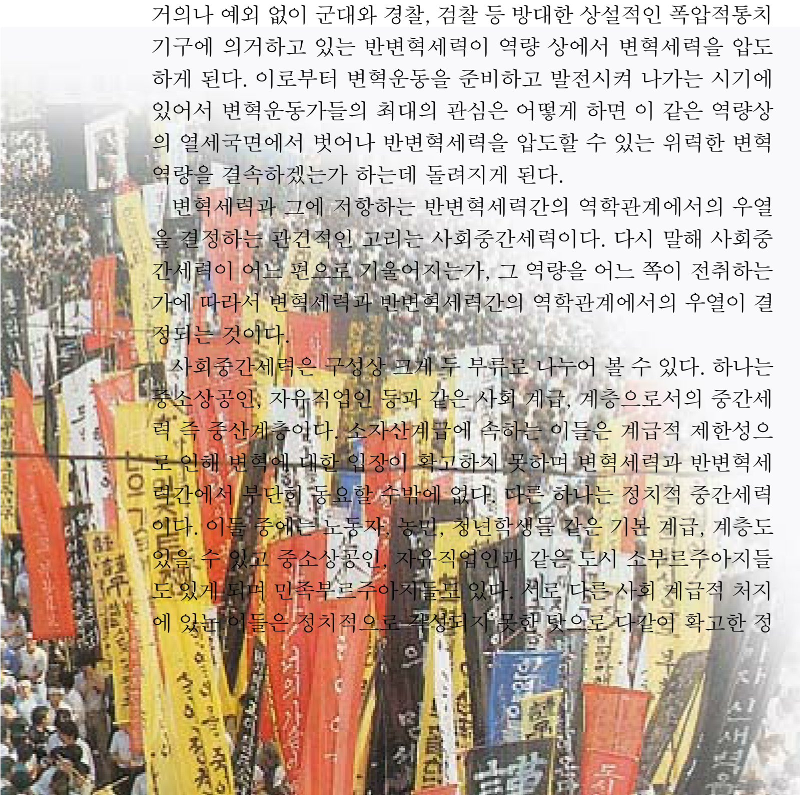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한국변혁운동의 발전과 그 승리를 위한 필수여건이다.

변혁운동은 궁극에는 변혁운동세력과 반변혁세력간의 역량대결로 귀착된다. 반변혁세력에 대한 변혁세력의 역량상 우세가 확고히 보장될 때 변혁운동은 성공을 이룩하게 된다. 이것은 장구한 인류변혁운동사적 실천경험에 의해 확증된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일반적으로 변혁운동이 출발 및 발전기에는 변혁세력과 반변혁세력간의 역학관계에서 변혁세력측이 열세에 놓이고 불리하다. 매개 나라의 사회 역사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나 예외 없이 군대와 경찰, 검찰 등 방대한 상설적인 폭압적통치기구에 의거하고 있는 반변혁세력이 역량 상에서 변혁세력을 압도하게 된다. 이로부터 변혁운동을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에 있어서 변혁운동가들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역량상의 열세국면에서 벗어나 반변혁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위력한 변혁역량을 결속하겠는가 하는데 돌려지게 된다.

변혁세력과 그에 저항하는 반변혁세력간의 역학관계에서의 우열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고리는 사회중간세력이다. 다시 말해 사회중간세력이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는가, 그 역량을 어느 쪽이 전취하는가에 따라서 변혁세력과 반변혁세력간의 역학관계에서의 우열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회중간세력은 구성상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소상공인, 자유직업인 등과 같은 사회 계급, 계층으로서의 중간세력 즉 중산계층이다. 소자산계급에 속하는 이들은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변혁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며 변혁세력과 반변혁세력간에서 부단히 동요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중간세력이다. 이들 중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같은 기본 계급, 계층도 있을 수 있고 중소상공인, 자유직업인과 같은 도시 소부르주아지들도 있게 되며 민족부르주아지들도 있다. 서로 다른 사회 계급적 처지에 있는 이들은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탓으로 다같이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정하지 못하고 변혁세력과 반변혁세력 사이에서 대체로 역량상 우세한 측에 편승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중간세력을 조직된 역량으로 만들어 변혁세력의 편에 확고히 전취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반변혁세력에 대한 변혁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은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청년학생들이 항쟁군중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던 초시기만 해도 역량관계는 반변혁세력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중간세력으로 이루어진 시민세력이 항쟁에 대거 합세하면서부터 역량관계는 항쟁군중측에 유리하게 역전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군 무력이 투입되기 전까지 지속됐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의 지역적 범위에서는 역량상 변혁세력이 반변혁세력을 확고히 압도했고 그로 인해 항쟁군중이 광주시를 10일 동안이나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또한 한국민민운동발전의 절박한 요청이다.

최근 10여년동안에 한국의 민민운동역량은 많이 성장했다. 민노총, 전농, 한총련, 민교협 등 계급, 계층별 민민운동단체들이 상당한 정도로 조직된 결과에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의 조직규모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민민운동의 총적인 역량은 아직 미약한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민민운동단체들 중 가장 힘있는 부대의 하나인 민노총의 경우만 해도 아직은 1천 여만 노동자중에서 그 20분의 1에 불과한 60만 내외의 노동자들을 결집하고 있을 뿐이다. 전농이나 한총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농민대중이나 청년학생대중의 극히 제한된 일부를 결집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한총련의 경우는 대오가 날로 줄어들고 갈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분열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해도 이에 참가하는 노동자수가 10만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총련이나 전농이 주관하는 대중투쟁의 경우에도 참가자수가 많아서 수천 명이다. 이 같은 소규모 대중투쟁으로써는 투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아니라 기득권세력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민민운동단체들의 조직규모를 당장 5배, 10배로 늘일 전망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당면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혁세력이 반변혁세력과의 역학관계에서 열세에서 벗어 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강고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크지 않은 몇몇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한다고 해서 그 역량이 전체적으로 반변혁세력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대, 연합을 통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반변혁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6대 총선 시기 울산북구의 경우가 그것을 잘 실증해 주고 있다. 울산북구로 말하면 현대자동차소속 노동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근 3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국연합, 민노총 등 민민운동단체들의 군중지반이 강한 지역중의 하나다. 따라서 선거전야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민노당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국연합산하 울산연합 운동가들이 패권의식에 집착해 현대자동차노조에서 경선으로 선출한 후보를 제치고 민노당 지역지부에서의 재 경선을 통해 지역적 대표성이 없고 당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자기측 후보를 내 세움으로써 민노당의 유일한 1석희망을 거품으로 만들었다. 4.13총선 당시 울산북구에서 울산연합측이 패권의식을 떨쳐 버리고 민노총과 선거연합을 이룩하고 공동행동을 했다면 이 지역구에서만은 한나라당후보를 제끼고 민노당 후보를 무난히 당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연대, 연합은 또한 어느 한 계급, 어느 한 단체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투쟁과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민노총은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부터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되는 것은 이 투쟁이 농민대중과 청년학생들, 중소상공인 등 다른 계급, 계층의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데 있다.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한 민노총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가까운 기간 내에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농의 농축산물시장개방반대투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0년대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거세지면서 시작된 이 투쟁이 노동자대중과 청년학생들, 광범한 도시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다른 계급, 계층,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계급, 계층 또는 어느 한 운동단체가 개체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과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반대로 연대, 연합을 실현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문민정부 초기에 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개악시도를 저지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농민대중과 청년학생들,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광범한 계급, 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노동자대중이 각계층과의 연대투쟁에 힘을 넣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측면에서 운동가들은 반변혁세력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DJ가 지난 15대 대선에서 JP와 연대하지 않았다면 집권을 못했을 것이다. 그처럼 이질적인 두 정치집단이 연대해 정권을 창출하는데 동일의 목적을 위해 나가는 민민운동단체들이 왜 연대, 연합을 못하겠는가.

한편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통해 변혁세력의 역량상 열세를 극복하는데서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연대, 연합에 참가하는 모든 민민운동단체들은 다 자기 고유의 군중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의 실현은 전반적인 민민운동에 대한 군중의 지지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결과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연대, 연합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강고할 수록 더 큰 상승적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중항쟁시기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의 대단결과 항쟁과정에서의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시민세력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민민운동단체들의 연대, 연합을 강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변혁운동정세의 요청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것이 전민족적이며 전세계적인 지지 속에서 적극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인해 우리 한국민중의 사회변혁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는 전예 없는 유리한 정세여건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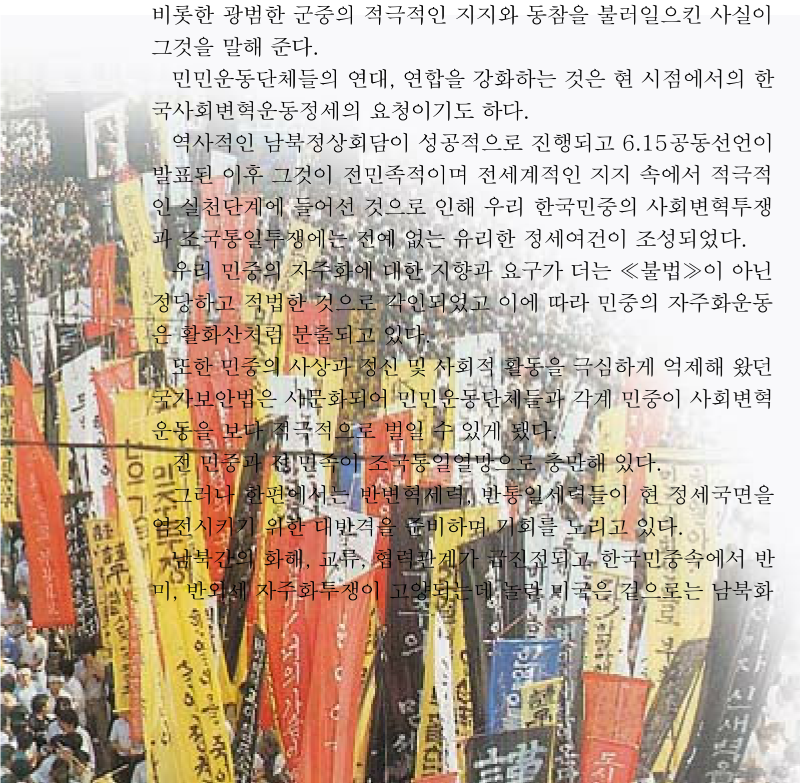
우리 민중의 자주화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더는 ≪불법≫이 아닌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각인되었고 이에 따라 민중의 자주화운동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사상과 정신 및 사회적 활동을 극심하게 억제해 왔던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어 민민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이 사회변혁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됐다.

전 민중과 전 민족이 조국통일열망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반변혁세력, 반통일세력들이 현 정세국면을 역전시키기 위한 대반격을 준비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

남북간의 화해, 교류, 협력관계가 급진전되고 한국민중속에서 반미, 반외세 자주화투쟁이 고양되는데 놀란 미국은 겉으로는 남북화해, 협력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며 6.15공동선언의 급속한 실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미 역사의 장막뒤로 물러났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타고난 불운아인 김영삼씨를 부추겨 내세우고 단말마적인 기를 돋우며 ≪대반격≫을 꿈꾸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여건에서 민민운동단체들은 신속히 전열을 수습정비하고 올바르고 공통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추진해야 성공을 앞당겨 나갈 수 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열을 수습정비하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곧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강화하고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박한 요청임을 실증해 준다.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내외 변혁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제시받는 필연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장구한 기간의 내외 변혁운동의 역사는 변혁운동가들에게 수많은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여러 변혁운동세력이 상호 연대, 연합을 이룩함이 없이는 그 어떤 변혁운동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반일민족운동사가 남긴 귀중한 교훈이다.

반일무장투쟁의 초시기 중국 동북지방 도처에 중국인반일부대(일명 구국군)들과 조선인 민족주의 독립군부대들이 할거해 있었다. 이들은 다같이 반일을 제창하면서도 **김일성**주석이 이끄는 반일인민유격대에 대해서는 나라도 민족도 모르는 ≪공비≫라며 극도로 적대시했다.

일제의 악선전과 모략책동으로 당시 반일인민유격대는 많은 경우 일제의 앞잡이취급을 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반일인민유격대에 대한 중국인반일부대들과 독립군부대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이 없이는 반일인민유격대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다.

김일성주석은 반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각이한 반일무장세력과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데 큰 힘을 돌렸다. 무지한 중국인 반일부대들이나 반일인민유격대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가진 독립군부대들과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는 시련도 많았고 가슴아픈 희생도 많이 냈다. 김주석이 가장 아끼는 전우이던 이광과 그의 수하 30여명의 유격대원들이 바로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연대, 연합을 위한 사업과정에서 반일부대들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

그러나 김주석은 반일인민유격대와 다른 반일무장부대들과의 연대, 연합의 실현여부에 반일무장투쟁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포기함이 없이 끈질기게 연합전선사업을 전개해 오의성부대나 위사령부대와 같은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양세봉 등 독립군부대들과의 연대, 연합을 성사시키고 반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에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운동자들은 많은 오욕의 자취를 남겼다.

이들은 본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로 분열돼 끝없는 파쟁을 일삼다가 나중에 동포들의 여론에 밀려 형식상 ≪국민부≫로 통합했으나 그후에도 파쟁은 지속됐다. 그 와중에서 독립군부대들도 흩어지고 지어 그 일부는 일제에게 투항했다. 참으로 그 말로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당시 이들이 파쟁을 지양하고 연대, 연합의 길로 나갔다면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교훈은 지난 시기 한국의 민민운동단체들의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사상 특기할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명망 있는 한 지성인은 그 본질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었다≫고 피력했다. 요컨대 민주세력의 대통합이 6월항쟁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항쟁전야에 각이한 민주화세력간의 연대, 연합 시도가 본격화 됐다. 지역운동세력과 부문운동세력이 하나로 결속되고 민민운동세력이 보수야당과 손을 잡는 등 전국적 판도에서 반독재민주화세력이 하나로 결집했다.

고립 분산적으로 움직이던 반독재민주화세력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도가 급격히 높아 졌다. 청년학생들을 선두로 사무전문직,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거 나섰다. 농민, 중소상공인, 도시영세업자들, 자유직업인들이 확고히 항쟁의 편에 섰다.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가 조직적으로 항쟁을 지지해 나섰다. 20여일 동안 지속된 항쟁에는 5백 여만의 대중이 참가해 ≪단군 이래의 대참여≫로 기록되었다. 그야말로 전민중적 항쟁이었고 그 위력 또한 파격적이었다. 얼마 전까지도 거침없이 ≪호헌≫을 고집하던 오만한 5공세력이 백기를 들고 직선제개헌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민세력의 대연합이 가져 온 거대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6월항쟁의 열기가 채 냉각되기도 전에 당시까지는 민주운동 지도자로 행세하던 두 김씨가 또다시 대립해 서로 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저마다 직선제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두 김씨중의 한사람은 ≪4자필승론≫까지 운운하면서 대통령당선을 장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 다르게 나왔다. 겨우 유효투표수의 36.8%의 지지표밖에 받지 못한 군부출신의 노태우씨가 1위로 당선되었다. 두 김씨의 득표율을 합치면 55.2%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양분됨으로써 그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만일 그때 두 김씨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가 되어 선거를 치렀다면 군부독재는 5공으로 막을 내렸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됐더라면 한국의 민주화과정도 훨씬 더 빨리 진척되었을지 모른다.

변혁운동에서 각이한 변혁세력간의 연대, 연합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 변혁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란에서의 반황제, 반미 회교운동을 보기로 하자. 이 운동은 2천5백여년동안 지속되어온 세습적 군주제를 청산하고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우 방대한 투쟁이었다.

당시 이란의 황제이던 팔레비는 친위병 1만 3천명, 비밀경찰 5만 4천명, 정복경찰 13만명, 특무 20만명, 헌병 1만명, 군대 43만명 등 막강한 폭압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팔레비황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이란에는 4만 3천여명의 미군사고문과 기술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CIA 요원만도 2천명을 넘었다. 또한 군사적인 위협을 목적으로 만 지역에 상시적으로 방대한 미해군무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팔레비황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자체의 방대한 폭압역량에 의거해 어떻게 하든 친미군주제정권을 온존시키고자 필사적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이란민중은 회교지도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아름찬 변혁과제를 1977년 5월부터 1979년 2월까지 2년도 못되는 단기간 내에 성공시켰다.

이란에서의 반미, 반황제 운동승리에 작용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든 반미, 반황제 운동단체들의 연대, 연합이 실현된 것이다.

당시 이란에는 이란인민당(공산당의 전신), 이란민족전선, 학생연맹 등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과 군중적 기반을 가진 반미, 반황제 운동단체들이 많았다. 각 단체들은 보수와 진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의 한계를 벗어나 호메이니의 왕조타도와 민주회교공화국수립노선을 일치하게 지지했으며 운동의 전기간 반미, 반황제 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견지했다.

팔레비는 각 반정부단체들의 연대, 연합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란애국자들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이란에 공산독재정권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미, 반황제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파탄시키고 특히 회교세력과 진보민주세력간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으려고 했다.



그러나 운동지도자들은 팔레비의 음모를 제때에 간파하고 그것을 분쇄함으로써 항쟁단체들간의 연대, 연합과 행동통일을 끝까지 견지했으며 이로써 반미, 반황제 운동에서 높은 대중성이 보장되게 했다.

반미, 반황제 운동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1978년 12월 10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 진행된 회교순교제기념시위투쟁에는 전국적으로 2, 500여만명(수도에서만 3백만명)이 참여했으며 항쟁이 결정적시기에 들어 선 1979년 2월 이후 투쟁에는 수도에서만도 매일 평균 4백만명이상의 시민들이 궐기했으며 그 와중에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시위군중편에 합세함으로써 결국 무장봉기로 발전했고 팔레비 친미정권을 타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란에서의 반미, 반황제 운동 외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제반 사실은 한국 민민운동의 현단계에서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변혁운동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전제임을 확증해 주고 있다.

2)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민족민주연합전선

연합전선조직체의 성격은 소여시기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구체적인 운동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오늘 한국에서는 사회의 자주화실현이 전반적인 변혁운동과제수행에서 관건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군부독재는 이미 제거되었지만 반민주적 군부독재잔재들이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의연히 한국사회발전의 근본걸림돌로 되고 있다. 이로부터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도 의연히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변혁운동에서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자주화운동이 계속 주축을 이루어 왔다.

이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마땅히 민족민주연합전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의 근본특징은 자주화과제를 근본적이고도 선차적인 것으로 내 세우고 그 과정속에서 민주화의 과제와 각 계급, 계층들의 요구도 해결해 나가는 연합전선조직체라는데 있다. 여기에서 자주화과제와 민주화과제의 상호관계는 전자가 기본과제, 전략적 과제라면 민주화과제는 그의 전술적 과제로서 이 두 과제를 다 수행해야만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로서의 주되는 목표의 하나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자주화와 민주화의 양대 과제를 안고 있는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는 지금까지 한국변혁운동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형태의 연합전선조직체들에 비할 수 없는 광폭의 연합전선조직체이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은 대중적변혁운동역량을 준비하는데서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놓는 것으로 된다.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는 단결과 공동투쟁의 기치로 되는 기본구호와 정치강령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오늘 한국변혁운동에서 민민연합전선조직체가 제시할 기본구호는 자주화이다. 자주화구호는 한국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적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자주화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자주화구호는 또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추이와 일치하는 구호이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변혁운동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자주화운동을 주축으로 해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속에서 그것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지향으로, 추세로 됐다.

오늘 한국민중에게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은 사회 정

치적인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생존권까지 억제 유린당하는 기본적이며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민중 속에서 미국이야말로 민족, 민중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날로 분명해 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자주화의 구호가 한국민중의 가장 근본적이며 공통적인 이익을 반영한 구호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본구호는 문자 그대로 극히 간명하게 표현되는 정치적 목표인 것만큼 각계층 민중의 다양한 요구와 지향은 정치강령에 반영해 실현해 나가게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정치강령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세력앞에 나서고 있는 3대과제인 민족자주,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현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총적인 활동방향과 정책목표를 명백히 밝혀 주는 것으로써 실천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이 3대과제를 구체화하는 민족자주문제에서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광범한 민중의 반미자주운동을 참작해 미군에 의한 주민대학살진상규명과 보상, 미군범죄근절, 미군기지사용료징수,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근절, 도심의 미군기지철수, 미군주둔비용 분담반대, ≪소파≫전면개정, 점진적 미군철수프로그램의 제시 등의 반미자주적요구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문제에서도 민중의 요구에 걸맞게 국보법의 즉각철폐, 준법서약제의 폐지, 군부정권에 복무한 정치권의 퇴출, 양심수 전원석방, 사상과 학문, 표현의 완전한 자유 보장 등 참다운 민주화를 위한 제반 요구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민중의 조국통일열기에 맞게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그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남북공동선언이행에 걸림돌로 되는 일체의 반통일적 요소들, 반통일적인 수구기득권세력들을 극복할 데 대한 투쟁과업, 일체의 반통일적 행위들을 엄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강령에서는 또한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반대(노동자), 농축산물시장개방반대, 농가부채탕감, 적정농산물가격보장(농민), 한총련 이적단체규정철회(청년학생) 등 현 시점에서 각계각층 민중의 절박한 요구들을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민노총, 전농, 한총련,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주요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강령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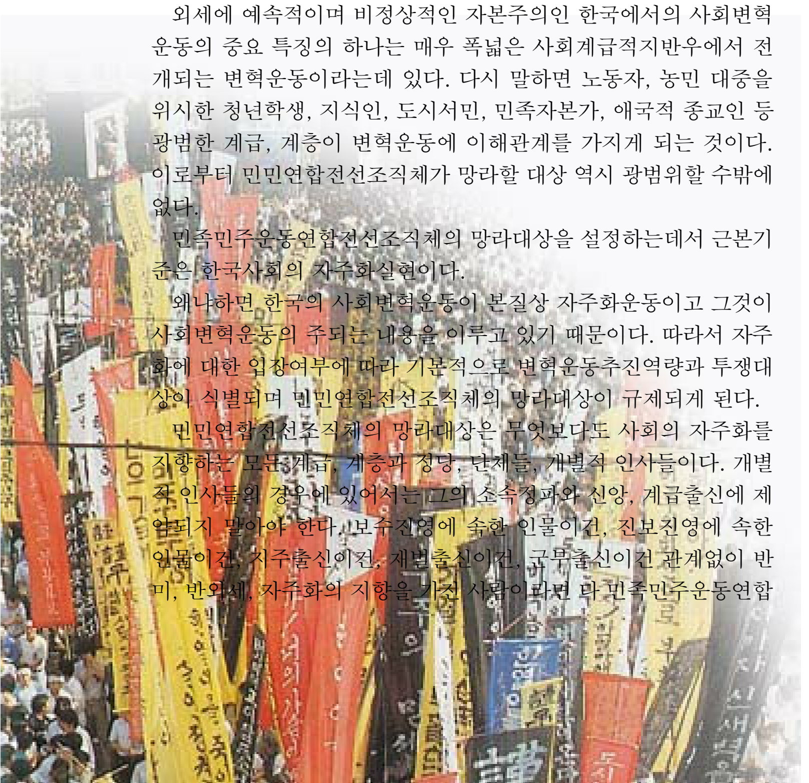
그렇게 함으로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결성에 범민족적인 관심이 집중되게 하며 전체 민민운동권차원에서 전개되게 해야 할 것이다.

외세에 예속적이며 비정상적인 자본주의인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의 중요 특징의 하나는 매우 폭넓은 사회계급적지반우에서 전개되는 변혁운동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 대중을 위시한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서민, 민족자본가,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계급, 계층이 변혁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민민연합전선조직체가 망라할 대상 역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을 설정하는데서 근본기준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실현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이 본질상 자주화운동이고 그것이 사회변혁운동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화에 대한 입장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변혁운동추진역량과 투쟁대상이 식별되며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이 규제되게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자주화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다. 개별적 인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소속정파와 신앙, 계급출신에 제약되지 말아야 한다. 보수진영에 속한 인물이건, 진보진영에 속한 인물이건, 지주출신이건, 재벌출신이건, 군부출신이건 관계없이 반미, 반외세, 자주화의 지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민족민주운동연합



전선조직체에 망라시킬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은 또한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세력과 자주화세력은 밀착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자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밀접한 연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세력은 그 안에 다수의 자주세력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변혁운동의 심화 발전에 따라 민주화세력의 일부가 대오에서 떨어져 나가 지배세력의 편으로 넘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주민주세력으로 발전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변혁운동가들속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의 자주화는 그것의 보편적인 정당성으로부터 지배세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발표이후로는 집권세력들까지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자주화에 대한 해석은 교묘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한편 민민연합전선조직체는 자주화와 민주화의 양대과제수행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민민연합전선조직체는 당연히 민주화세력을 중요한 망라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중요 망라대상은 사회시민운동세력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군기지철수운동, ≪소파≫개정운동 등 반미자주화운동에서 시민운동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운동가들은 시민운동단체들이 강령에 반미자주화문제를 또렷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실천투쟁에서 미군철수라는 근본요구를 접어둔 채 미군범죄문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 ≪소파≫개정 같은 전술적 요구들만 제기하고 투쟁한다는 부족점만 찾으면서 연합의 대상이 못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협애한 편견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전술적 단계의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 단계에 올려 세우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지난 4.13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실증한바와 같이 시민운동세력의 민주화에 대한 지향은 매우 높다. 이것은 시민운동세력이 한국의 중요한 자주역량인 동시에 민주화역량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세력은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주요 망라대상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한국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종교인들 역시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주요 망라대상으로 된다.

한국의 애국적 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근년간 그들의 자주화, 민주화 투쟁열의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애국적 종교인들은 마땅히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켜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켜야 할 대상으로서 여야정당안의 진보적 정치인들에 대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금 여야 보수정당 안에는 운동권출신을 비롯해 진보적 경향을 가진 인사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다. 그 중에는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로서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이들은 반제 자주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JP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에 취임한 것에 대해 JP를 한일굴욕외교의 장본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즉각적인 사퇴를 제기한 사실, 여야당내 40여명의 의원들이 ≪소파≫전면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회차원의 결의안채택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시기 보수파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일부 참가했다.

이러한 자주적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매국노로서의 전적이 없는 한 과거를 불문하고 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킬 대상으로 보고 그들과의 사업을 적극 벌이야 한다.

이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을 설정

함에서는 최대한의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일정정도의 반미자주적 지향이나 민주적 지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임으로써 명실공히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로 되게 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 발생발전한다. 연합전선운동 역시 그에 합당한 주체세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 주체세력은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실현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연합전선운동의 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전선운동에서 그 주체세력이 이 같은 역할을 담당 수행하려면 그것이 진보정치세력과 기층민중속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인정받는 정치조직이어야 하며 민민운동권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상이 인정되는 정치조직이어야 한다.

지금 한국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민노총이나 전국연합을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상술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민노총과 전국연합이 민민운동세력의 연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매우 정당하지만...

우선 민노총의 경우 그것은 노동자대중의 조직이지 각계각층의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아니다. 또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기득권에서 철저히 배제된 계급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그들의 투쟁이 노동대중을 비롯한 모든 진보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물론 1,200만의 노동계급이 똘똘 뭉쳐 한국사회의 합법적인 지도역량으로 부상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민노총의 활동은 노동자대중의 제한된 계급적 이해관계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얼마 전에 있은 서울지하철노조파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발을 묶는 지하철노조파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문제로 민노총과 시민운동단체들사이에 일정한 오해와 알륵이 생긴바 있다. 이것은 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에만 집착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민노총은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충분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전국연합은 어떠한가. 전국연합은 정치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민노총,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과 같은 유력한 민민운동단체들을 실질적으로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진보세력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민민운동권에서 지도적 권위도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전국연합이 민노총이나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을 망라시켜 위상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국연합 역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사회여건에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다.



본디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정당, 정파들간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세력으로는 마땅히 정당형태를 갖춘 정치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도정치권 안팎의 여러 정당, 정파와의 폭넓은 정치적 연합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면정권시기인 1961년 2월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결성된바 있다. 여기에는 근 40개의 민민운동단체들과 중간혁신정당들까지 참가했다. 당시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체세력으로 활동한 것은 사회대중당(대표 김달호), 사회당(대표 최근우)과 같은 합법적인 혁신정당들이었다.

제반 사실들은 연합전선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그 주체세력은 정당형태의 정치조직이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민운동권안에서 유일하게 정당형태를 갖춘 조직인 민노당은 아직 원내에 단 1명의 의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위상이 높지 못하고 또 당의 계급구성면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족 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부족점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 반동보수정치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민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해 민노당은 그 어느 민민운동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정치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결함들을 고쳐 주어서라도 민노당을 한국사회의 모든 진보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주체세력으로 내세워 모든 민민운동세력, 진보적 시민운동세력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련합전선조직체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3) 연합전선운동내에서의 주요 원칙과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

연합전선운동에서의 주요원칙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계급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주장을 가진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간의 정치적 동맹을 실현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이에 관한 일련의 원칙을 올바르게 관철해야 한다.

첫째, 독자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견지해야 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독자성은 본질상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이 견지해야 할 입장에 관한 문제이다.

이 원칙의 기본요구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연합전선운동의 전과정에서 그 주체세력이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일관하게 견지하는 것이다.

주체세력은 연합전선운동의 여러 대상 중에서 사회변혁에 대한 의지와 입장이 가장 투철한 정치세력이며 따라서 정치적 주장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다. 연합전선운동과정에는 다른 정당이나 단체들 속에서 주체세력의 진보적인 정치적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철회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합전선을 깨부수겠다고 하며 압력이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주체세력은 자기의 기본 정치적 주장을 양보하지 말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다른 정치세력의 정치적 주장을 자기의 진보적인 정치적 주장에 접근시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함으로써 연합전선운동의 변혁적 성격을 견지해야 한다.

다른 하나의 요구는 주체세력이 독자적으로 조직정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연합전선운동의 성패는 다수 경우 그 주체세력의 역할 여하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주체세력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 자체를 조직정치적으로 부단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합전선운동과정에는 일부 다른 세력들 중에서 주체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견제하려는 동향이 표출될 수 있다. 주체세력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조직정치활동을 벌이어 자기 대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자기의 위상을 계속 높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대방존중의 원칙이다.

연합전선운동에서의 대방존중의 원칙은 철저히 상호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연합전선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대방존중원칙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상호간에 대방이 신봉하는 신앙과 정견을 존중하고 자기의 신앙과 정견을 대방에게 내리 먹이려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종교인들과 연합하고자 하면서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노골화된 반종교선전을 진행한다면 연합이 실현될 수 없고 설사

일시적 연합이 실현되었다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연합이 깨지

고 말 것이다.

대방존중원칙의 다른 하나의 내용은 대방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그 조직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8.15직후 이북에서 **김일성**주석은 민족자본가계급까지를 포용하는 광폭의 연합전선노선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각계각층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당, 정권기관의 지도적 지위에 있던 이들은 중요 산업국유화 법령이 발표된 후 민족자본가들의 기업까지 국유화처리를 하는, 말하자면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연합전선노선관철에 큰 저애를 주었다. 그런가 하면 8.15직후 박헌영 공산당 패들은 여운형의 인민당 등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정당들과 연합하자고 하면서 그 당들에 프락치를 박아 조직비밀을 내탐하고 조직와해를 획책하는 등 대방존중의 원칙에 안 맞는 저속한 행위를 함으로써 연합을 결렬시켰다.

셋째, 구동존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동존이의 원칙이란 문자 그대로 차이점들은 일단 접어 두고 공통점을 찾아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동존이원칙의 기본요구는 공통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연합을 지향하는 각이한 세력간에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상 면에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공통점보다도 차이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차이점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보류해 두고 사소한 공통점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연합을 모색해야 한다.

1948년 망국적인 5.10단선을 앞두고 **김일성**주석이 김구선생과 손을 잡은 것은 연합전선운동에서의 구동존이원칙구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김구는 반공적인 민족주의자로서 8.15를 전후해 반공적인 전적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영구분단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북의 공산주의자들과도 합작해야 한다는 투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닌 사람이었다.

김일성주석은 김구의 반공적인 이념이나 반공적인 전적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하고 그의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를 소중하게 보고 그와 손을 잡음으로써 민족운동에서의 공산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간의 연합의 귀감을 역사에 기록했다.

넷째, 투쟁과 단결의 양자결합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상술한 구동존이원칙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연합전선대오는 그 주체세력을 비롯한 연합대상들간에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면에서 공통성과 함께 차이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 안에서 공통성에 기초한 단결이 모색되고 차이성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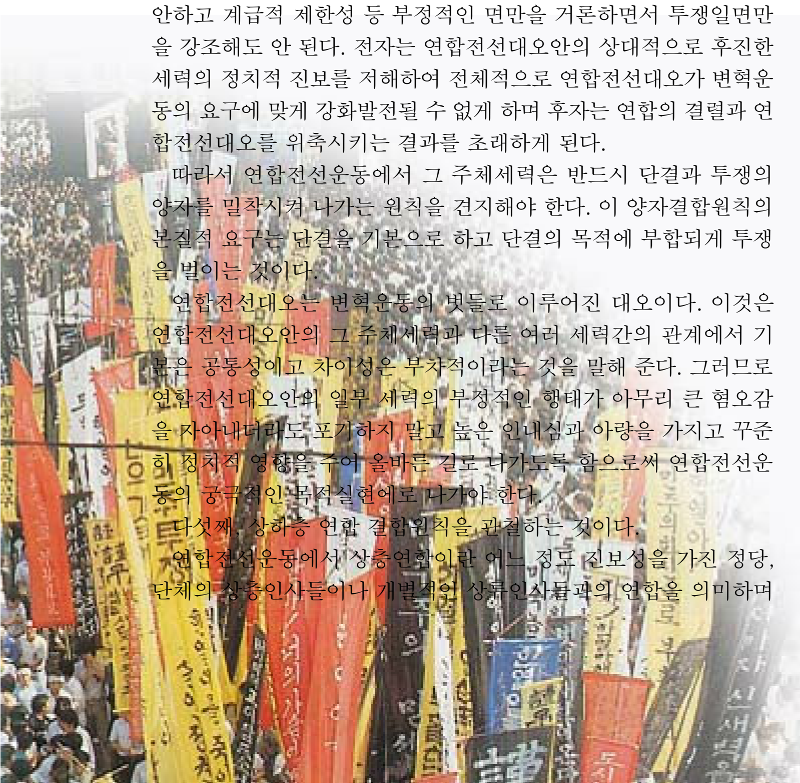
이러한 여건에서 연합전선대오안에서 그 주체세력은 연합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대방의 부정적인 면들을 그냥 덮어 둔 채 일면적으로 단결만을 강조해도 안되며 반대로 대방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려고 안하고 계급적 제한성 등 부정적인 면만을 거론하면서 투쟁일면만을 강조해도 안 된다. 전자는 연합전선대오안의 상대적으로 후진한 세력의 정치적 진보를 저해하여 전체적으로 연합전선대오가 변혁운동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될 수 없게 하며 후자는 연합의 결렬과 연합전선대오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합전선운동에서 그 주체세력은 반드시 단결과 투쟁의 양자를 밀착시켜 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 양자결합원칙의 본질적 요구는 단결을 기본으로 하고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게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연합전선대오는 변혁운동의 벗들로 이루어진 대오이다. 이것은 연합전선대오안의 그 주체세력과 다른 여러 세력간의 관계에서 기본은 공통성이고 차이성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연합전선대오안의 일부 세력의 부정적인 행태가 아무리 큰 혐오감을 자아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높은 인내심과 아량을 가지고 꾸준히 정치적 영향을 주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연합전선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실현에로 나가야 한다.

다섯째, 상하층 연합 결합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다.

연합전선운동에서 상층연합이란 어느 정도 진보성을 가진 정당, 단체의 상층인사들이나 개별적인 상류인사들과의 연합을 의미하며



하층연합이란 상층의 영향하에 있는 일반대중과의 연합을 말한다.

상하층연합은 상생적인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상층연합은 하층연합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반대로 하층연합은 상층연합을 용이하게 한다. 이로부터 연합전선운동에서 상하층연합의 결합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상하층연합 결합원칙의 주요한 내용은 하층연합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상층연합을 적중히 결합하는 것이다.

동요성이 심한 상층과의 연합은 그의 공고성면에서 많은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층과의 연합과 결합되고 하층연합에 의해 안받침되면 상층의 제한성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한편 하층연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고하며 또 그것은 대중적변혁운동역량을 조성하는 연합전선운동의 근본목적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연합전선운동에서 주체세력은 언제나 하층과의 연합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며 하층대중속에서 조직정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그들의 정치적 수준을 주체세력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그들 속에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층연합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의 현실적 방도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건설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민민운동의 모든 지역조직들과 부문조직들, 진보적 사회시민운동단체들과 진보적 종교단체들, 지어 제도정치권안의 자주적, 진보적 성향의 개별인사들까지 하나로 결집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로 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적 진행과 6.15공동선언의 실천으로 한국변혁운동발전에 매우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몇 개의 민민운동단체가 연합해 협소한 또는 한시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족시키거나 다소 그 폭이 크고 항구적 성격의 연합전선조직체라 해도 기층민중운동단체연합의 범위에 국한되는 연합전선조직체로서는 현시기 격동적인 정세를 올바로 활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으로 한국변혁운동의 저변이 전례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은 당면하게 대규모의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민민운동의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모종의 중간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성사시키는 방도를 택할 수도 있다.

그 하나의 방도는 몇 개의 민민운동단체들로 먼저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내오고 거기에 다른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 진보적 종교운동단체들을 연속 결집하는 방법으로 대규모의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연합, 민노총 등이 정치강령상 유사성이 많고 다 같이 연대, 연합을 강령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라고 볼 수 있다.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체 건설의 다른 하나의 방도는 이미 결성되어 있는 모종의 사안별 또는 한시적인 연합전선조직체를 상설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이다.

지금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과 같은 반미자주화를 정치강령으로 하는 연합전선체들이 여러개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는 민노총, 경실련, 녹색연합 등이 망라되어 있다. ≪국보법철폐 행동연대≫와 같은 민주화를 정치강령으로 하는 유사한 연합전선체들도 있다. 물론 이 단체들이 아직은 그 규모도 크지 못하고 또 개별사안해결을 목표로 하고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별 연합전선조직체들을 한데 묶는다면 그것을 폭 넓은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 이여의 다른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 진보적 종교운동단체들을 더 망라시켜 상설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전환시킨다면 얼마든지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상술한 두 가지 방도 외에도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는

여러 갈래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방도로 결성하든 그것이 대중투쟁과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의식개혁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지 않는 한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

널리 공인된 바와 같이 대중투쟁은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가장 힘있는 방도로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이 따로 있고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투쟁과정이 곧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과정으로 되며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서만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대중투쟁측면에서는 우선 소파전면개정이나 국보법철폐투쟁, 6.15공동선언 지지관철투쟁과 같은 사안별 대중투쟁을 전 민민운동차원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중의 참가 밑에 힘차게 벌이야 한다. 이것은 사안별 대중투쟁조직을 연합전선적 성격의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사안별 대중투쟁에서 다른 사안별 투쟁단체들과의 연대공동투쟁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안별 대중투쟁조직들을 전 민민운동차원의 연합전선적 투쟁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의식개혁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들이 민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에 관한 투철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말로써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나 실천에서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가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연합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이론으로 정신 무장하는 문제이다. 변혁운동에서의 실천은 언제나 변혁적인 이론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중요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을 공유하게 되면 그를 위한 실천활동에서의 의견상이나 마찰도 많이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연대, 연합이 한결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요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패권의식을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부차적인 문제 같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각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주도권욕망, 패권의식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되고 있다. 연합전선운동에 참가하는 모든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변혁운동의 운명보다 자기 조직의 위상부터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대상조직의 규모가 크건 작건, 사회적 위상이 높건 낮건 불문하고 모든 운동단체들이 동등한 자격에서 상호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지하게 단합을 모색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가장 절박한 요청으로 나서고 있는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을 성사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다.

2000년 9월

한백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운동진영 일각에서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기고가 정진(正進) 2000년 11월

들어가며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참다운 민주사회를 세우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 바로 한국민족민주운동이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이어 온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일소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지난 기간 적지 않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발전의 올바른 궤도를 따라 전진해 오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역량인 노동자계급이 운동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매김되었으며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운동의 대중화가 실현되어 나가고 있고 대중의 정치의식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00년 한해만 보더라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세 차례의 민중대회와 5월 총파업, 나날이 고양되고 있는 여러 갈래의 반미자주화투쟁 등 각계 민중의 투쟁이 꾸준히 힘있게 전개되었다.

특히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이남의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에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의 현실은 동유럽 사회주의의 좌절과 이북의 일시적인 경제적 난관으로 인해 ≪한국의 운동권이 지리멸렬되고 있다≫고 주장하던 일부 ≪운동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운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운동진영 일각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해야 할 한국민족민주운동의 당면한 기본과제를 외면하고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함으로써 운동발전에 적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변혁운동가들이 민족과 민중을 위해 올바른 길로 매진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부터 운동진영 일각에서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의견을 밝히려고 한다.

1. 일부 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함으로써 한국사회변혁운동에 끼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

고대 플라톤의 ≪공화국≫이나 중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류는 어제도 오늘도 자유, 평등, 풍요를 꿈꾸며 그것을 이상으로 간주해 오고 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인류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단 없이 투쟁해 왔으며 지금도 역시 투쟁하고 있다.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역사에 거대한 흔적을 남긴 것이 한때 ≪유럽을 떠도는 유령≫으로 불리기도 했던 마르크스주의였으며 그것을 현실로 전환시키려 했던 것이 동유럽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과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절차와 방법에서는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자간의 모순이 사회의 기본모순, 주되는 모순이었던 유럽의 자본주의 나라들은 자본주의 단계로부터 사회주의 단계로 이행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나라들에서는 각기 다른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했다.

1953년 7월 26일 카스트로가 이끈 100여명이 청년들이 몬카다 병영을 습격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쿠바혁명은 상당한 기간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전개했으며 바티스타독재정권을 전복하고 정권을 세운 다음에도 계속해서 민주주의혁명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쿠바민중은 미국의 전면적인 경제봉쇄에 맞서 마침내 사회주의노선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북에서도 해방 후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이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제를 수행하다가 1955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사회주의혁명노선(일명 55년 4월 테제라고도 한다 – 필자)을 선포하고 그 실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인류의 염원이고 이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실현방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해당 사회의 구체적 현실과 민중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회의 경위에는 어떠한가.

이에 관한 한 우리는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엄밀히 직시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아직 주권자로서의 응분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미국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에 싸구려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마저 갖지 못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미풍양속은 미국, 일본 등 서구 자본주의의 저질퇴폐문화가 제한 없이 유입됨으로써 퇴색, 변질되다 못해 이제는 사회전체가 양풍왜색으로 완전히 도배된 상태이다.

실로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문화도 철두철미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한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바로 이처럼 그릇된 현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중은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으며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의 민족민주운동이다. 이로부터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참다운 민주사회를 세우는 것을 근본과제로 제기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운동가들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민족민주운동의 현 주소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려도 없이 당장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늘 이남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의 발전에 적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변혁운동에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들을 조직동원할 수 없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를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자는 주장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외에는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그 기본과제로부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된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이며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 등 실로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그 실현에 이해관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변혁운동이다. 이로부터 그 동력이 최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족자주권의 확립과 민주주의적 변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마도 극소수일 것이다. 내용해석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집권자들까지도 ≪자주≫를 내놓고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자주를 최우선순위에 내세운 6.15공동선언이 나왔는가 하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이라는 유엔총회 공동결의안까지 채택되고 있다.

현실투쟁을 살펴볼 때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과 같은 단체들은 주로 중산층 또는 사회중간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들 단체들은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소파(SOFA)개정문제, 노근리양민학살사건, 매향리문제, 한강독극방류 및 춘천, 인천 폐유방류사건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자주화투쟁이 여타의 투쟁들에 비해 그 민중적 지반이 넓고 사회계급적 기초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한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그 투쟁대상을 최소화한다.

주체적인 변혁운동이론에 따르면 민족의 자주권 확립과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투쟁대상은 주한미군을 핵심으로 하는 외세와 그에 야합하고 있는 반동적인 관료집단 그리고 매판자본가와 매판지주계급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민족적 자주권 확립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다수 민중들을 제외한 극소수 사대매국세력만이 극복해야 할 투쟁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혁운동의 동력은 최대화하고 투쟁대상은 최소화하게 한다는 여기에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근본과제로 하는 우리 운동의 과학성과 정당성이 있고 그 승리의 필연성이 있다.

그런데 만일 사회주의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는 경위에는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회주의혁명은 착취 받는 기층민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혁명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혁명의 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빈민, 근로인텔리들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투쟁대상, 극복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도, 도시와 농촌의 소자산가들도 모두 타도대상으로 되고 만다.

더구나 군 통수권이 미국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미국의 지배와 간섭 아래 놓여 있는 한국사회에서 과연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세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과거 냉전시기부터 반공세력의 선두주자를 자처해 온 미국이 과연 우리더러 어서 사회주의혁명을 하라고 팔짱끼고 앉아서 구경만 하겠는지 의문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빈민들만의 힘으로 강대한 투쟁대상인 미국침략세력과 사대매국적인 관료집단, 매판자본가와 지주 세력, 도시와 농촌의 소자산계급까지 모두 청산해 낼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느 모로 따져봐도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를 민족민주운동의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이자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궤변이며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회주의 실현≫은 오늘 한국 민중에게 있어서 당면투쟁과제로 제기될 수 없는 구호이다.

게다가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 이후 한국민중들 속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다.

해방직후 **김일성**주석은 이북에서 일제의 악선전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북민중들의 인식이 극도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무리하게 서둘러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일성**주석은 1945년 10월 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에서 당시 ≪소비에트≫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해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소비에트사회주의도 아닌 조선식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제시해 압도적인 지지찬동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한다는 것이 도대체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 만약 현 시점에서 변혁운동의 당면과제로 사회주의혁명을 제기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뒤를 따라오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지난날의 실천적 경험을 보더라도 사회주의혁명을 하자는 주장에 동조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1989년 11월 12일에 결성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은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조직≫, ≪정치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사회적으로 소수의 독점재벌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조직≫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당시 ≪사노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백태웅은 잡지 ≪말≫1991년 10월호에 기고한 ≪사노맹의 21세기 사회주의구상≫이라는 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회주의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나날이 사회주의운동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실제상황은 어떠했던가. 절대다수의 운동가들과 민중들은 ≪사노맹≫에 대해 무시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태웅의 주장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사회주의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되었던가. 서글프게도 ≪사노맹≫은 1992년 4월을 기점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히 와해붕괴되고 말았다.

변혁운동은 반변혁세력의 탄압에 의해 소멸되는 법이 없다. 일시적으로는 반변혁세력의 파쇼적 탄압으로 다 소멸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들불처럼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변혁운동이다. 그러나 어떤 운동도 광범위한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3년이 아니라 1년 또는 한달, 심지어 하루아침에도 소멸돼버릴 수 있다.

백태웅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노맹≫대열에 합류했다면 ≪사노맹≫은 어째서 3년이라는 단명을 기록하는데 그쳤는가. ≪사노맹≫이 당시 반공이데올로기의 폭압 속에서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을 밝힌 것만큼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광범위한 민중들의 지지를 모아내지 못해 붕괴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노맹≫의 사례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격과 근본과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해 나설 때 각계층 민중들을 광범위하게 조직동원할 수 없게 되고 민중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사회주의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족민주운동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둘째로, 반변혁세력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변혁운동역량을 분열,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지금 민족민주운동진영 안에는 사회주의혁명을 하자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일부 노동운동가들을 비롯해서 일정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부분은 노동자들로서 이들은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자주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진보적인 사회라는 것만 보면서 미국침략세력과 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세력을 먼저 척결하지 않으면 사회주의혁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혁명 제창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을 당면과제로 제기하자는 주장은 전체 변혁운동대오를 분열시킬 뿐 아니라 매개 운동단체 내부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 한 실례로써 최근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대립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18일 민주노총은 근 1년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노동운동발전전략검토초안≫이라는 것을 공개했다. 이것은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 년간의 노동운동을 분석평가하고 변화하는 세계정세, 한국노사관계를 분석한 데 기초해서 새로운 노동운동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초안에서는 기존 자본주의체제와 국가사회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를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임금, 고용, 경영, 정책참가, 사회복지 등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측을 비롯한 민주노총내의 다른 일각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으면서 ≪사회주의를 이념적 지향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가 제시한 ≪풍요로운 평등사회≫와 그 실현을 위한 과정 및 방도로서 제시된 ≪경영참가≫, ≪정책참가≫ 등의 내용에 대해 ≪사회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 발상≫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회주의를 이념적 지향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나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나 다 같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과제와 성격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그릇된 견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또다시 의견상이가 발생하고 심지어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진보적이고 정당한 제안이라고 찬동하면서 현 집행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면서 대오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불순한 의도마저 감지되고 있다. 극히 좌경적인 언행을 앞세워 자파세력의 ≪변혁성≫을 과시하면서 헤게모니 쟁탈을 시도하는 것은 파쟁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 편향은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기본역량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을 지향하고 그것을 근본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이 한사코 사회주의 구호를 들고 나옴으로써 아직은 건실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역량을 분열, 약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폐단은 주로 창당준비과정과 창당직후시기에 많이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준비과정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손석형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민주노동당은 이념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적이고 변혁적인 노선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적 입장이 확고하고 사회주의이념이 명백한 당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사회주의적인 주장들을 공공연하게 고집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당의 진로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민주노동당은 정강을 밝힌 주요 문서들에 ≪노동자의 해방을 목표로 했던 사회주의이념과 전통을 계승한다≫는 문장을 비롯해 사회주의적인 주장들을 일부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상당수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자주화, 민주화 운동의 견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창당준비 당시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갖고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사업에 합류했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사회주의적 주장을 강변하고 그에 맞게 당을 구성해야 한다고 고집함으로써 자주화, 민주화의 의지를 갖고 합류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창당전야에 대거 떨어져나가 결국 당이 초기의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역량으로 조직되었고 당의 대중적 지반도 협소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변혁운동역량을 분열, 약화시키는 심각한 부정적 작용을 한다.

어떤 변혁운동에서나 출발적 단계,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변혁운동역량이 반변혁세력에 비해 열세에 놓이게 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세력과 자주화, 민주화 운동을 지향하는 세력을 다 합쳐도 반변혁세력에 비해 볼 때 아직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아직은 미약한 변혁운동역량을 사회주의혁명을 하자는 세력과 자주화, 민주화 운동을 하자는 세력으로 갈라놓는다면 결국 이도저도 다 실패를 면할 수 없다. 즉, 현 시점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반변혁세력에 비해 아직 미약하며 성장단계에 있는 변혁운동역량을 분열,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운동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족민주운동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셋째로, 반변혁세력에게 변혁운동을 탄압할 빌미를 제공해줌으로써 변혁운동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오늘 한국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성스러운 과업이다. 그것은 자주화, 민주화 운동이 현 단계에서 광범위한 근로민중의 근본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 이남당국자들도 남북사이의 화해분위기에 떠밀려 공개적으로는 자주, 민주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당국이 제정한 현행법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자주화, 민주화 운동을 함부로 막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려는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를 내놓고 탄압하며 억누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광범위한 민중에게 그 당위성이 인식되어 있지 못하며 사회주의적인 주장은 미국의 식민통치를 떠받들고 있는 한국의 수구기득권세력과 집권세력에 의해 유지, 온존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불법≫으로 매도당할 수밖에 없고 정권의 탄압마저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만에 하나 우리 운동진영이 사회주의 실현을 당면투쟁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면 수구기득권세력들은 때를 만난 망나니들처럼 쏟아져 나와 반공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북한과 연계된 체제전복세력, 사회주의제창세력을 일망타진한다≫는 허울좋은 구실 밑에 한국판 매카시선풍을 또다시 일으키고 자주화, 민주화 운동세력 즉, 변혁운동세력 전반에 대한 광기 어린 탄압을 마음내키는 대로 자행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시기 우리는 그런 경우를 한두 번만 당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애국민중들이, 얼마나 많은 우수한 변혁운동가들이 폭압무도한 탄압광풍에 휘말려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그도 아니면 육체적으로 혹은 사상정신적으로 불구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던가.

≪사노맹≫사건 하나만으로도 500여 명이 구속되었고 형량을 다 합치면 2천년이 넘는 가혹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밖에도 ≪해방노동자통일전선≫(1991년), ≪전국학생정치연합≫(1994년), ≪8백만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청년회≫(1996년), ≪서울대학생연대≫(1997년), ≪국제사회주의자그룹≫(2000년) 등등 수많은 사회주의운동단체들이 탄압을 받아 와해됐고 그 과정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변혁운동가들이 운동대열에서 제거되거나 희생당하고 말았다.

물론 어느 단계에서든지 변혁운동은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수구반동세력을 타파해야 하는 심각한 투쟁이므로 그 과정에 반변혁세력과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하며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변혁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맞지도 않는 사회주의혁명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희생까지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노맹≫관계자 80여명이 지난 8월 ≪사노맹관련자동우회≫를 결성하고 또다시 ≪조직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니 이들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민족과 민중을 향한 진실로 뜨겁고 순결한 사랑과 열정에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외치는 사회주의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고 이제 또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만족하겠느냐고.

모든 변혁운동가들은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현 단계 이남의 민족민주운동에 엄청난 장애물로 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 운동진영 일부에서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게 되는 근원

운동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변하고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반변혁세력의 집요하고 교활한 사상모략책동과 일부 운동가들 속에 역병처럼 만연되어 있는 공명주의 또는 패권주의, 기성이론에 대한 교조적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

편의상 한가지씩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우선 미국과 집권세력을 비롯한 반변혁세력의 사상모략책동에 한 원인이 있다.

한국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성장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세력은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친미사대매국집단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민족민주운동의 성장은 곧 저들의 명줄을 조이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 이로부터 그들은 언제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과거 폭압일변도의 강경탄압은 오히려 변혁에 대한 민중의 지향과 투쟁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 민족민주운동의 정당성을 보다 뚜렷이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러자 식민통치세력은 군부독재통치를 ≪민간≫통치로 바꾸는 교활한 기만술책을 부렸으며 이 과정에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고립, 약화시키려는 저들의 의도를 일정정도 실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날로 각성되어 가는 민중들의 진출을 원천봉쇄할 수 없었고 또다시 민중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통치세력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운동진영을 내부로부터 분열,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모략책동을 파쇼적 탄압에 배합해 적용하는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프락치활용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1982년 12월 20일 내무부훈령 제764호 ≪좌경의식화정보망 운영규칙≫에 따라 식민통치세력은 대학가, 종교계, 노동계, 민주인사들 속에 ≪진보적 인물≫로 위장된 프락치들을 은밀히 잠입시키고 계통적으로 내부분열와해책동을 벌여왔다고 한다. 또한 노태우의 6공 시절에도 기존의 프락치망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FR(오른)작전≫을 고안하고 재야에 184명, 학원에 289명, 노동계에 368명 등 도합841명의 ≪특수요원≫들을 ≪운동권≫으로 위장시켜 활용해 왔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수법을 보면 저들의 끄나풀로 하여금 한국사회현실과 민중들의 지향에 잘 맞지도 않는 사회주의혁명 등 과격한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어 그 주위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한 다음 그들을 한 그물에 건져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양심선언사건≫, ≪치사사건≫, ≪양심선언번복사건≫, ≪자살기도사건≫ 등 프락치관련 사건들이 연발했고 김영환, 김쾌상, 백태웅 같은 인물들이 그 대표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오늘 당장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단순히 운동가들 상호간의 견해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민족민주운동이 발전할수록 반변혁세력의 탄압수법도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운동진영의 일부에서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은 또한 일부 운동가들의 공명주의, 패권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운동의 현 단계가 사회주의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명주의,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들고 나옴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지나온 민족민주운동사를 돌아볼 때 운동의 대하 속에는 언제나 거품과 같은 공명주의자, 패권주의자들이 존재해 왔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강점 초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 안에서는 ≪화요≫파요, ≪엠엘≫파요 하는 각종 파쟁꾼들이 공명과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자파세력확장과 패권확보를 추구하면서 양보없는 파벌싸움을 벌였다. 1930년 만주지역에서 벌어졌던 5.30폭동은 파쟁꾼들이 불순한 목적 밑에 좌경모험주의적인 투쟁을 인위적으로 조직하고 수많은 군중을 무모한 투쟁으로 내몰아 일제군경의 총칼에 무참히 학살당하게 만듦으로써 항일독립투쟁발전에 막심한 피해를 안겼던 사건으로 파벌주의의 해독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김일성**주석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많은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항일투쟁 전기간 그리고 8.15해방 이후에도 올바른 사회역사발전을 위해 좌경모험주의자들과 파벌분자들의 책동을 극복하는 데 많은 힘을 돌렸다고 한다.

우리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어제와 오늘의 실태를 조금만 헤쳐보더라도 5.30폭동과 유사한 양상의 투쟁들이 적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운동진영의 일부에서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다음으로 우리 민중들이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투쟁역사에서 창조하고 체계화한 주체적인 변혁운동이론을 체득하지 못하고 기성이론에 대한 교조적 입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일부 운동가들이 강변했던(혹은 지금도 강변하고 있는) ≪당장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저에는 대체로 지난 시대의 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자리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대부분은 자본의 철폐와 계급해방에 관한 주장들로 일관되어 있다.

물론 운동이념과 방도, 전략전술을 모색하는 과정에 다른 나라의 경험과 이론을 통해 우리 운동의 해법을 찾는 연구도 필요하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롯해 지난 시대의 변혁이론에는 식민지적이며 전근대적인 요소,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나라들에서의 변혁운동에 관한 이론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대의 이론을 절대화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에 교조적으로 적용해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고 이론적 타당성이 없는 견해이다.

더구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이미 이론실천적으로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지 오래이다.

단적인 예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변혁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노자간의 모순이 첨예화되어 그것은 마침내

사회혁명으로 폭발한다고 했는데 그같은 이론을 가지고는 생산력이 지난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오늘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어째서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어디까지나 지난 시대에,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나라들의 환경에서 필요했고 합당했던 이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대의 발전은 사상이론의 발전을 동반한다. 오늘의 현실은 오늘의 잣대로 보아야 하며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잣대가 주어져 있다.

우리 민족, 민중은 장구한 기간 시련에 찬 변혁운동발전과정에 자신의 고유한 운동경험을 얻었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고 체계화한 지극히 정당한 변혁운동이론을 갖게 됐다. 우리 민족, 민중 스스로 창조한 주체적인 이론에 의거해야지 남의 경험과 이론을 여과 없이 교조적으로 우리 운동 토양에 직수입하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고 운동의 단계를 뛰어넘는 주장과 같은 좌경적인 언사들도 나오게 되며 그런 경우 운동발전에 커다란 저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초혁명적인 구호를 남발하던 사람들의 이면을 투시해보는 과정에 신념의 부재를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이에 대한 ≪민≫지 박세길 편집부장의 지적을 겸허하게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민≫ 2000년 10월호에 실린 ≪세상을 바꾸는 열쇠는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사노맹≫은 맥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사노맹≫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노맹≫은 ≪적의 탄압에 의해 무너졌다기보다는 내부로부터 허물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은 ≪사노맹≫ 맹원들이 수감되었을 때 흔히 보여준 모습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처럼 자기의 신념체계에 대해 완고(?)했던 ≪사노맹≫ 맹원들이었건만 감옥 안에서의 모습은 혼란에 빠진 채 극도로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이다.≫

교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 맹목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요란스러워 보이던 ≪신념≫이란 폭압세력의 회유와 고문 앞에서 사상누각처럼 너무도 맥없이, 너무도 쉽사리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사노맹≫의 백태웅이 보인 비참한 행태도 그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3.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현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좌편향의 극복

민족민주운동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로 되고 있는 좌편향을 극복할 방도는 무엇인가.

우선 운동가들이 우리 민족, 민중의 사회변혁운동과정에 창조된 주체의 변혁운동 이론과 전략전술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우리 민족, 민중이 장구한 민족해방투쟁역사 속에서 창조한 주체의 변혁운동 이론과 전략전술은 실천투쟁과정을 통해 그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이 유감없이 검증된 현 시대의 유일무이한 변혁운동이론이며 전략전술이다. 주체의 변혁운동 이론과 전략전술로 무장해야 반변혁세력의 사상모략책동을 타파해나갈 수 있고 교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명출세주의적, 패권주의적 행태도 일소할 수 있다. 이로부터 주체의 변혁운동 이론과 전략전술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 변혁운동가들 앞에 제기되는 선결적 과제로 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적인 변혁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민중들은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같은 요구를 포함해 오랜 변혁운동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 민중 자신의 지향과 의지를 일반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바로 자주적인 변혁사상이다.

익히 들어 알고 있다시피 자주적인 변혁사상은 민족의 자주권확립과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각계 민중의 참다운 삶을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하는 민족, 민중의 지도이념이다.

자주적인 변혁사상은 개량이 아니라 변혁적 투쟁으로 외세의 예속과 전근대성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민중들의 제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해나갈 것과 민족자주와 범민족적 대단결에 기초한 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지향하는 애국애족애민의 사상이다.

또한 자주적인 변혁사상은 민중의 자주성 실현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계급, 계층, 정당,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며 세계적 범위에서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자는 자주, 평화의 사상이다.

우리 운동의 현 단계에서 자주적인 변혁사상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지도적 지침이다.

지난 2000년 2월 미국의 센 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노동자공개포럼≫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주장한 것을 놓고 보더라도 자주적인 변혁사상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자주적인 변혁사상은 민족민주운동과정에 우리 민중 자신에 의해 정립되고 민중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구한 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축적되고 전수된 위대한 사상과 과학적 노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 박세길 ≪민≫편집장의 지적을 우리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우리 변혁운동가들은 오로지 자주적인 변혁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유일한 잣대로 삼을 때 한국사회변혁운동에 대한 높은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변혁운동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운동가들은 선행이론에 대한 교조주의를 반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선행이론에 대한 교조적 태도는 정상적이던 사람도 머저리로 만들며 변혁운동을 실패와 좌절로 몰아넣게 한다. 지난 시기 일부 운동가들이 교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쿠바혁명의 이론과 경험, 중공의 모순론과 그 실천경험, 남미의 종속이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등 많은 변혁이론과 경험들이 수입되었지만 어느 하나도 우리 운동에 자그마한 기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다.

변혁운동에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 수 없다. 있다면 변혁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중의 이익과 이 땅의 풍토에 맞게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공식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도 배워야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씹어보고 ≪위≫에서 받으면 삼키고 받지 않으면 뱉어버려야 한다≫는 명언은 오늘의 이남 민족민주운동실천과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선행이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진정한 운동가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사이비운동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있으면서 머리는 영국이나 독일 혹은 러시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운동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벌여나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운동가들은 선행이론에 대한 교조적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철두철미 한국의 토양에 발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탈선과 실패를 모르고 승리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민족민주운동진영에 적지 않게 만연돼 있는 분파주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참다운 단결을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운동은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치유해야 하는 거창하고 복잡한 대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으며 운동가들의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여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견상이를 원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운동가들 상호간의 반목과 질시를 부채질하고 전체 운동발전에 적지 않은 장해를 조성하게 된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식민통치세력이 풀어놓은 끄나풀들처럼 근본적으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변혁운동 이론과 전략전술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설익은 발상을 주창하거나 유식을 뽐내며 겉멋을 부리는 것을 운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없지 않다. 이들은 방법상 견해와 주장이 다를 뿐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과 사사건건 대립해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결속시켜야 변혁운동이 발전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치이다. 또 정말로 몰라서 덤비는 사람들의 경위에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변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주의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자기소모적인 불화와 분쟁에 끌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와 단합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이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우리 민족, 민중의 운명을 두고 나름대로 고심하는 사람들간의 의리문제이기도 하다. 서로의 견해와 주장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워놓은 투쟁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먼저 힘을 쏟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참다운 운동가의 자세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반변혁세력의 사상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을 위한 운동은 그를 저지하려는 반변혁세력의 악랄한 도전에 상시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나날이 성장해 가는 각계 민중의 변혁운동에 제동을 걸고 압살하려드는 이들 세력의 선두에는 언제나 정보기관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은 프락치활용전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운동권은 과거처럼 소수 지하운동가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락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다만 분파간 갈등이 프락치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평한 어느 일간지의 지적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변혁운동가들은 민족민주운동을 탄압말살하려는 정보기관의 눈초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번뜩이고 있으며 운동대오에 자그마한 틈새라도 보이면 프락치공작과 같은 간교한 모략책동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일부 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민족민주운동의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오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변혁사상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할 때 한국사회변혁운동 즉, 민족민주운동이라는 열차는 반드시 승리의 종착역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2000년 11월)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실천

(자유기고가 차민철)

우리 한국변혁운동은 수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의 고비를 넘으면서 부단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우리 민중은 60년 4.19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의 6월항쟁, 96년말~97년초의 총파업 등으로 자주적, 민주적 지향과 민족적 기개를 과시한 것을 긍지 있게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자랑찬 투쟁노정에서 한국변혁운동은 자체의 역량을 크게 성장시켰으며 귀중한 경험과 교훈도 많이 축적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격열한 거리데모, 과격한 양상의 투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학생운동과 같은 일부 부문운동들이 저조해 진 것을 보고 변혁운동의 위기와 후퇴설을 내 돌리면서 변혁운동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변혁운동을 과학적 시각, 주체적 시각에서 분석판단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소견에 불과하다고 본다.

지금 한국민중의 자주의식고양으로 미군의 양민대학살의 진상규명과 매향리사격장철폐, 미군기지문제 등으로 도처에서 반미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제주 4.3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법,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 등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진전이기는 하나 민주화투쟁에서도 많은 전진을 이룩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결코 집권세력의 그 어떤 선사품이 아니며 민중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물이다.

한국민중은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로 오늘 한국땅은 통일열기로 차 넘치고 있다.

제반 사실들을 본다면 한국민중의 사회변혁투쟁과 통일운동은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한국변혁운동에서는 아직도 타개해야 할 난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의 하나가 일부 변혁운동가들, 운동단체들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올바르게 내세우고 그 수행에 사색과 열정, 투쟁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무엇인가.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과제는 한국사회의 구체적 환경과 현실적 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의 변혁운동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선차적인 과제로 되는 것은 민족, 민중에게 있어서 자주적 요구 실현이 생명처럼 귀중하기 때문이며 민족의 자주적 요구 실현이 개별적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급, 계층의 자주적 요구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은 사회에서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는 사회집단이며 운명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개별적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급, 계층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민족적 범위에서, 민족의 운명 속에서 개척되게 된다.

민족이 자주권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 하에 있게 되면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개별적 사람들, 계급, 계층들도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개별적 사람들, 각이한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면 민족적 자주권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런데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적 여건은 실제로 어떤가.

미국의 한반도지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국에 진주한 미군이 포고문에서 ≪38선 이남지역은 오늘부터 본관의 지휘를 받는다. 미군정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만약 미군정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는 일방적인 점령군통치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군은 한국땅에 주둔한 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나라의 정치, 경제 체제를 재편하고 한반도를 갈라놓았으며 이로부터 우리 민족이 동족상쟁이라는 유혈참극을 겪게 했다.

최근에 조사되어 폭로된 것처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한 일이란 우리 민족을 멸족시키는 살육전을 벌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 6.25전쟁초기 1년간에만도 영동과 평택, 대전과 담양 등 한국도처에서 100만 명 이상의 양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미제의 인간살육만행은 6.25종전 후에도 그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여성들에 대한 만행은 그 어떤 말과 글로써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것이었다. 이러한 살육만행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십년 세월 계속되고 있으니 과연 우리 한국민중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오늘도 우리 한국땅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노골적인 지배와 간섭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은 IMF를 직접 조종해 한국의 금융위기를 조작했다.

한국경제가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예속적 지배의 필연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경제가 파국적 금융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게 된 것도 미국의 지배에 기인한 것이며 금융위기가 폭발하도록 방아쇠를 당긴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저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재조정할 목적밑에 파국적 금융위기가 폭발하도록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1997년 10월 스탠더드 푸어스를 내세워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엄청나게 격하해 평가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투자해 있던 외국자본이 일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했다.

결국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폭발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금융위기를 조작하고 IMF를 통해 구조조정을 강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구조를 저들의 국익에 맞게 또다시 재편했으며 그 결과로 우리 민중의 생활은 도탄속에 빠져들었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이 군사적 강점, 지배 정책이며 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후 초조해 진 미국은 정세에 관계 없이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 <미군주둔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 고 하면서 식민지지배자로서의 본색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도 마치 저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쇼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미국이 한국민중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민족, 민중의 존엄을 짓밟고 한국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준다.

최근 우리 나라 각계 인사들이 한국은 미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 감기에 몸살을 앓으며 드러눕는 미국의 식민지이며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유지온존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52

번째 주가 된 것 같다. 그것도 2등, 3등의 차별대접을 받는 주가 된 것 같다고 규탄하고 있듯이 미국의 식민지지배하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이것은 미국의 지배 밑에 있는 우리 민중 스스로의 체험이고 55년간에 걸치는 미국의 한국지배역사, 주한미군의 범죄역사가 보여 주는 현실이다.

그러니 다가오는 21세기를 민족의 자주시대로 맞고 한국 민족,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한국변혁운동가들과 변혁운동단체들중에서 누가 반대하겠는가. 현실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변혁운동단체가 없다고 본다.

우리 민중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 오면서 오매불망 민족자주를 얼마나 갈구해 왔는가.

8.15후 백범 김구선생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 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 민중은 그토록 민족자주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으나 오늘도 그 소원은 미국에 의해 유린말살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 한국사회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인가.

YS의 문민정권과 DJ의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절차상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참다운 민주주의와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다.

한국민중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참민주주의를 향유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민중의 주된 구성원인 서민에 대해서는 죄 아닌 죄에도 매우 엄한 법을 적용하면서도 미군이 저지른 범죄, 가진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지난 20년간 한국법원이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율은 겨우 0.7%로서 우리 민중에 대한 법적 취급과는 너무도 차별적이었다.

그리고 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다.

한국의 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지어 국제대사령까지도 그 철폐를 부단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어 6.15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많은 학자, 언론인, 법계 인사 등 각계 인사들과 지어 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도 국보법 개페를 주장해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보법을 적용해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 사실만 보아도 정치생활면에서의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중을 위한 참민주주의가 아니고 지배자들과 가진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차별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경제생활에서의 민주주의도 민중을 위한 참민주주의와는 먼 거리에 있다.

한국은 지금껏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혈족관계에 의한 족벌경영방식, 과도한 정경유착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제에 의해 근로민중의 이익은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다.

최근년간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으로 민중의 초보적 생활권마저 위협당했다. 민중의 초보적인 생활권마저 유린하는 그런 정부의 경제시책을 놓고 경제생활에서 참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현실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으로 제시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운동권의 일부에서 자주, 민주, 통일 3대과제를 말하는데 조국통일 역시 한국민중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투쟁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변혁운동만을 고찰할 때에는 조국통일이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은 상호보완관계, 밀착연관된 문제이면서도 일정한 차이성이 있는 별도의 문제이다. 즉 조국통일은 전민족적 과제이며 따라서 그에 망라되는 투쟁역량, 투쟁대상, 투쟁방법에서 일련의 차이성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은 한국사회변혁운동내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변혁운동과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문제이다.

이상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이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의 일부에서는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적 실천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한국사회의 자주화실현문제를 근본과제의 하나로, 핵심적이며 관건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편향된 발상은 자주화투쟁이 영원불변한 진리도, 도덕성도 아니다, 자주화는 지금 세계사적 흐름에서는 더이상 통할수 없다, 자주화의 내용이 변했다. 그 색채가 희미해 졌다는 등의 논조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계급해방의 일면적인 주장과 지어 사회주의혁명을 제창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민2000년 4호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핵심적 과제로 직시하지 않는 그러한 발상에 대해 식민지, 반식민지 삶에 어느덧 길들여 진 양심의 패배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또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근본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주되는 문제, 선차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의 자주화가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 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적 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의 상호관계는 매우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면서도 사회의 자주화는 민주주의적 변혁을 규제하는 위치에 있다.

이로부터 사회의 자주화문제를 선차적인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면 변혁운동의 근본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변혁의 제반과제도 수행할 수 없고 운동의 파멸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관한 편향된 실천은 사회의 자주화를 변혁운동의 기본과제, 선차적인 문제라고 하면서도 실천투쟁에서는 다른 문제들에 치중하는 것이다.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투쟁에 있는 것이다.

변혁운동권의 일각에서는 주로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권력구조의 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정치참여활성화 등을 근본과제인 것처럼 내 세우면서 민주화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생존권투쟁 일면에 치중하는 경향성도 발로되고 있다.

또 어떤 운동가들은 통일운동 일면에 치중하고 통일운동에서도 남북교류에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고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구성원치고 누구나 다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려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열망의 흐름속에서 민민운동단체들이 저마다 단체별로 북과의 직접적 관계밑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사업을 제안하고 그를 조직하고자 하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여러 갈래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민민운동단체, 통일운동단체들이 북과 교류만 하면 통일이 되겠는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발표와 함께 당국이 통일문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온 겨레가 통일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의 변혁운동단체들이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위치를

명백히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민족의 통일을 위한 장엄한 흐름속에서 운동단체들이 차지해야 할 자기 몫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어느 때보다 빨리 확대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부 운동단체들이 민중의 힘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주장하며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당국에게 빼긴데 대해 분개하는데 부분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중에 의한 민중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운동역량이 빨리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당국이 주도하는데 뒤꼬리를 따라 가는 꼴이 아니라 진보적, 민중적 통일운동이 통일운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부 운동가들처럼 집권세력에게 통일운동에 대한 주도권을 빼겼다는 그 자체만 생각하며 너도나도 북과 크고 작은 여러 갈래의 교류를 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그것으로서 과연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민중적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결집하지 않고 단체별로 저마다 교류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운동단체들 호상간 또 한 갈래의 주도권쟁탈전을 초래하는 외에 별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이러한 편향적 실천은 결국 통일운동 뿐아니라 한국사회변혁운동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운동가들은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참다운 통일운동이며 그러한 전제밑에 북과의 필요한 교류도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민족통일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진보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궤변을 떠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으로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속에서 울려 나오는 궤변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재영정책국장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절대로 통일되면 안되겠다느니,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배타적인 민족주의발호속에 파시즘체제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망발을 줴쳤다. 또 민주노동당부대표 노회찬은 연방제는 현실성도 없다고 하면서 남북간의 현 체제하의 통일은 올바른 통일이 아니라는 식의 망언을 했다.

온 민중이 자주통일열기로 들끓고 온 세계가 환영하며 지어 전통적으로 수구기득권에 몸 담아 왔던 보수우익정객들도 그런 반통일적 망언을 삼가하고 자제하는데 이른바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다는 사람들이 반통일을 줴치고 반북을 줴치니 그 저의를 크게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누구인가. 한국에서 식민지지배권을 유지하고저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수구기득권세력 뿐이다. 그렇다면 민노당의 이재영씨나 노회찬씨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민중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레닌이 1918년에 변절자 카우츠키를 비판할 때 한 말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부르죠아지에 대한 세련된 하인행위도다. 오, 자본가앞에 엎드려 신발을 핥아 주는 문명한 행위로다.>

한국의 모든 통일운동가들은 통일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된 실천을 극복해 나가면서 반통일분 자들에 대해서는 입추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된 실천이 초래하는 후과에 대해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냉정히 분석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변혁운동역량에 대한 견해를 세우는데 혼란을 조성하고 변혁운동역량을 최대한으로 묶어 세울 수 없게 한다.

변혁운동의 성패는 당연히 운동역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운동역량은 근본과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다.

예로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기본과제로 제시한 경우라면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자들만 변혁운동의 역량으로 될 것이다.

결국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잘못 제기하면 변혁운동역량을 올바르게 결집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운동의 실패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혁운동의 현실을 보면 무슨 <NL>이요, <PD>요, 제3의 길이요 하는 각 계파별로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서로 다르게 제기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실제로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만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일치시키려 하지 않는 경향성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이 당은 현재 강령에서 사회주의원칙과 정신의 계승발전, 사회적, 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 보장,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본주의의 극복 등의 사회주의변혁적 요구를 적지 않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강령의 요구가 한국사회발전의 현단계와 민중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는 문제인가.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문제인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강령의 요구는 한국의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 단번에 사회주의에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압박 제 계급들의 해방도 참다운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없으며 지어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초보적인 요구조차 올바로 실천할 수 없기때문이다.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이 사회주의적변혁을 주장한다면 그에 동참할 민중적역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만약 민주노동당이 강령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주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지 않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을 근본과제로 명백히 제시했더라면, 또 그에 따라 역량결집을 호소했더라면 보다 광범한 민중적 역량의 지지를 이끌어 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된 실천으로 해서 총체적으로는 변혁운동역량이 크게 성장했지만 그것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하고 응당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의 후과는 다음으로 투쟁대상에 대한 견해를 혼란시켜 옳은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을 세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따라 변혁운동의 투쟁대상이 규제된다. 따라서 근본과제를 잘못 제기하면 투쟁대상에 대한 견해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그것은 근본과제의 설정에 따라 투쟁대상을 동맹자로 볼 수도 있고 동맹자를 투쟁대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변혁운동은 무슨 난리판으로 될 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적 판도에서나 우리 한국변혁운동에서 그런 예가 적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 한국변혁운동에서도 그런 폐단이 있고 그로 해서 변혁운동발전이 크게 지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부 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에서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지위와 역할, 미국에 의한 한국사회의 예속성 등을 외면한 채 계급해방을 일면적으로 근본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첫째가는 투쟁대상,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국을 투쟁대상이 아니라 우호관계에 있는 동맹자로 보고 마땅히 동맹자로 전취해야 할 민족자본가, 중산층 단체들과 대립하고 결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투쟁대상과 동력의 선을 올바로 가를 수 없게 하며 변혁운동을 올바른 전략전술에 기초해 확산발전시킬 수 없게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변혁운동가들은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운동방향을 혼란케 하고 투쟁역량을 결집하는데 장애를 조성하며 투쟁대상을 올바로 식별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변혁의 주되는 대상에 투쟁의 예봉을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함으로써 변혁운동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면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 편향적 실천이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요인은 우선 한국사회가 처한 구체적 환경과 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남의 이론에 교조적으로 추종한데 있다고 본다.

교조적 사고방식은 사물과 사회현상에 대한 창조와 사색이 아니라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방법과 형식이다.

우리 한국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발로되게 된 것은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 환경여건에서 나온 이론들을 기계적으로 한국현실에 적용하려는 교조적 사고와 입장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에 동참하고 변혁이론을 모색하던 일부 운동가들은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쿠바변혁운동의 이론과 경험, 모택동의 모순론과 그 실천경험, 남미에서 발상한 종속이론에까지 기대를 걸고 그것을 한국변혁운동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들은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수입해 한국변혁운동에 대한 처방을 내리려고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지배 밑에 있는 구체적 환경과 여건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조적 사고방식에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가져 왔다. 교조적 사고방식은 한국변혁운동에서 민족적 과제를 무시하고 계급해방을 일면적으로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변혁운동역량을 규정함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을 왜소화했고 변혁운동의 대상도 불분명케 했다.

교조주의에 빠지면 창조성이 마비되고 정세와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력도 잃게 되며 과학적인 전략전술 적 방도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교조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변혁운동조직이 교조주의에 빠지면 변혁운동을 실패에로 이끌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이론에 따라 한국의 변혁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다른 나라의 투쟁방법을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는 교조주의적 사고와 입장, 바로 이것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초래한 중요한 사상적 근원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나타나게 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운동권에서의 주도권확보와 공명추구에 집착해 기본과제를 외면하거나 망각한 데 있다고 본다.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 과제인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미국을 투쟁대상으로 하는 것만큼 힘겨운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이 어려울수록 변혁운동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변혁운동을 한 방향으로 지향시켜야 승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래서 단결은 곧 승리라는 말이 있다.

지난날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변혁운동의 성격과 과제, 변혁투쟁의 대상과 운동역량의 강화 및 결집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상호 협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표출되었다.

현 시점에서도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주도권장악을 위해 자기 조직 밖의 다른 사람들, 다른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질시하며 운동과 관련한 견해차이들을 협조적으로 풀거나 운동의 발전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다른 운동단체를 기회주의, 절충주의, 수정주의 등으로 매도하고 이로부터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행세식 운동가들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말끝마다 자기만이 올바른 운동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파 헤쳐 보면 예외 없이 변혁운동의 발전과 성과적인 전진보다는 운동의 주도권이나 공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국제당안에서 벌어진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 조류와 반동적 수정주의 조류사이의 투쟁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투쟁대오의 정치사상 적 통일과 순결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종파와 분파가 허용된다면 그 틈을 이용하여 음모가, 야심가들이 나타나 변혁운동을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온다.

우리 나라 변혁운동의 역사에도 이러한 비극적 현상이 예외로 되지 않았다.

1925년 4월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이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인해 1928년 여름에 있은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에서는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 국제당 대열에서 제명했다.

그 후 행세 식 마르크스주의자들,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저마다 3인1당, 5인1파 식의 공산당을 만들고 국제당의 비준을 받으려고 감자도장을 만들어 들고 다니며 온갖 추태를 부렸으니 조선민중 치고 이 이상 통분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또 어데 있었겠는가.

변혁운동권내에서 주도권과 공명추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벌주의자, 종파주의로 전락해 변혁운동대오의 단합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변혁운동을 통채로 말아먹는 심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변혁운동의 성장,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추구에만 집착하는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 운동의 기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발로되는 것이다.

이상의 제 요인들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초래하는 운동권 자체의 내적인 요인이라면 여기에 외부적 요인까지 작용해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운동권에서 누구나 다 잘 알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과 수구 기득권세력들의 운동권에 대한 사상이론 적 모략과 와해공작은 날이 갈수록 더 교활하고 집요하게 감행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 한국변혁운동권이 변혁운동에 반대하는 수구기득권세력, 지배세력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모략과 와해책동으로 많은 손실을 당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변혁운동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육성 파견한 프락치들은 운동권에 침투해 운동가 적인 언행으로 자체의 본색을 분장하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상이론 적 모략과 와해로 운동권의 단합을 파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반 변혁세력, 지배세력의 사상모략과 와해책동으로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적극 조장되고 그 결과 변혁운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한다.

변혁운동가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변혁운동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가를 깊이 자각하고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내 세워야 하며 모든 실천투쟁을 근본과제수행에 지향시키고 이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주적 민주사회를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통일실현을 더욱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첫째, 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확고히 정신무장하고 그에 준해서 변혁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이란 일제강점시기 반일민족해방운동과 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한국변혁운동을 포괄하는 근 1세기에 이르는 우리 한국민중의 자주독립투쟁, 민주화투쟁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을 종합일반화하고 체계화한 사상과 이론, 다시 말해서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 이론이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는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 이론보다 더 잘 부합되고 더 우월한 사상,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다른 나라에 의한 예속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 분단의 문제가 없는 나라의 환경과 여건을 전제로 제시된 사상이론이 우리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모든 변혁운동가들은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 이론,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확고히 정신무장해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변혁운동사상, 이론으로 무장하자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늪에 빠지면 자기 민족, 자기 민중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온갖 창조적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자기 민중의 사상, 이론,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할 수 없다.

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깊이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 세우고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 탐구를 목적의식 적으로 조직 진행해야 한다.

과학적인 사상,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 변혁운동이 올바로 전진할 수 없으며 또한 사상이론 적 빈곤이 운동의 좌절과 운동가들 속에서의 패배주의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당연한 진리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의 적지 않은 변혁운동가들은 90년대 중엽이후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백화점 진열 식으로 나열해 벌이면서 엄청나게 무사 분주히 달리는데 치중하고 사상이론 적 탐구, 사상이론학습에 등한히 한다는 것이 주 객관의 일반적인 평이다.

적지 않은 변혁운동가들이 90년대 이후 변혁운동의 일부 부문과 일부 측면이 저조 또는 퇴조한 원인을 동구권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일시적인 경제난관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 고찰이다.

왜냐 하면 앞에서 고찰했듯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은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인데 동구권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북한이 일시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권에 사회주의자들도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구권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적 난관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동구권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적 난관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저조 또는 퇴조하게 만든 근본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90년대 이후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부분적인 저조의 근본원인은 변혁운동가들의 사상이론적, 전략전술적 빈곤에 있는 것이다.

우리 변혁운동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 이론 탐구와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변혁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근본방략으로 직시하고 여기에 큰 힘,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변혁운동가들은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주인 된 자각과 숭고한 사명감을 높이 발양해야 한다.

변혁운동가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민족과 민중을 위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고심 참담한 변혁운동의 길에 나선 가장 정의롭고 숭고한 민중투사들이며 애국자들이다.

애국, 애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부터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이에 생을 바치는 변혁운동가들에게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은 욕망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추구하고 집착할수록 멀어 지는 것이다.

민족, 민중에게 충실하고 변혁의 대업에 헌신하면 자연히 민중이 따르게 되고 주도권도 차례 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변혁운동가들은 애국, 애족의 숭고한 뜻과 변혁운동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을 자각하고 실천투쟁에 헌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변혁운동가들은 운동의 모든 실천투쟁을 근본과제 수행에 지향시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변혁운동가들은 우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사회의 자주화문제를 전면에 내 세우고 반미자주화투쟁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투쟁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반미문제는 당연하게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각계 민중이 반미요구를 전면에 들고 적극 투쟁하고 있다.

변혁운동가들은 민중의 반미자주화요구에 부응해 반미자주화투쟁을 당면한 실천투쟁으로 적극 밀고 나감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미국에 의한 양민대학살만행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을 받아 내는 문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 주한미군범죄문제 등 광범한 민중의 생활상 요구와 직접 결부된 요구들을 제기하고 반미투쟁을 적극 확산해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 단계에로 올려 세워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민중들 속에서 반미기운이 확산되는데 따라 그에 맞게 점차 미군철수를 비롯한 전략적인 단계의 반미구호들을 제기하고 반미투쟁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은 당국자들로 하여금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적 조치들을 더 많이 취하도록 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극우익수구세력들을 고립 약화시키는 것을 근본방향으로 제기하고 민주화투쟁과 생존권투쟁도 지속적으로 적극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 운동단체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통일 지향적인 측면은 지지하면서도 사대주의적이며 반민중적인 시책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극 문제시하면서 민주화투쟁을 계속 벌이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당면해서 국가보안법의 철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요구들과 민중의 생존권보장에 관한 요구들을 제기하고 투쟁을 벌이어 실제적인 민주화조치들을 하나하나 받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나 현 시기 민중의 고양된 조국통일열기와 변혁운동의 발전적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단말마적으로 발악해 나서고 있는 극우익수구기득권세력들을 제압하고 사회적으로 매몰해 버리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이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은 다음으로 6.15공동선언이 정확히 이행되게 하는 방향에서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벌이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DJ정권에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반통일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야 할 것이다.

민중적 통일운동조직체들은 반 외세 자주화와 연방제통일을 명백히 주장함으로써 민중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운동조직역량을 보존하고 견지하면서도 대승적인 자세와 입장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한 반 관변, 관변 통일운동단체들과도 공통점을 찾아 통일운동에서 연대공동행동을 적극 벌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빨리 확대강화하고 그것을 하나로 크게 결집하며 그 역량에 의거해서 참다운 민중적 통일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변혁운동가들은 사회발전의 선각자답게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민족, 민중을 위하는 대의를 굽히지 말고 민중의 앞장에서 온 민중을 사회변혁운동에로 힘차게 이끌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공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다.

2000/11/14



창당선언문

우리는 오늘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한 민중의 열망을 담아 민주노동당 창당을 선언한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에는 지난 한 세기동안 이어져 온 한국 민중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평화 통일, 평등 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우리 당의 주인은 바로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지난 세기는 민중이 배제된 소수 특권층의 정치, 시장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풍요와 다수의 빈곤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이 만들어나갈 새천년은 민중 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제를 통하여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다.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을 부패와 지역주의로 얼룩진 후진적 정치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참여와 자율에 의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고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장악되지 않는 평등사회, 개인의 창조성과 성과를 존중하면서 제도화된 인간과 인간의 차별을 극복하는 평등사회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이다.

민주노동당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과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호혜와 평등, 자주성에 기초한 국가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조국의 건설을 통해 남북한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창당은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위를 누리며 결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새 시대를 알리는 우렁찬 북소리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진보세력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개인의 총화를 이루어 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와 군사적 위협,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 세력과 굳건한 연대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새 시대, 새 세상을 여는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미 보수정치의 벽은 변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 앞에 균열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부패와 억압, 차별을 낳는 보수정치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나아가자.

2000. 1. 30
민주노동당

강 령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전세계적인 자연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정치≫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

오늘날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온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 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보정치를 세우는 일은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인간적 반이성적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남북간 협력적 상호공존을 기조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평화적 수립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우리는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구시대 정치인, 낡은 법과 제도와 구조를 전면 청산하고 참된 민주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내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첫째,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 속에서 향후 수립될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노동자와 민중의 의사가 권력구조와 운영에 가장 잘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생산현장, 생활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정치를 실천해 낼 것이다.

≪경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절대시하는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한국의 지가총액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투기성과 기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자의 장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

둘째,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규제 완화에도 반대한다. 외환금융위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조급한 대외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대책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대량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을 민주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등 세제를 도입한다. 역진적 성격을 가지는 간접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세 징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고,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세출에서는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적 지배,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남용, 외국 자본에의 종속 강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기업간의 자원 배분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기관을 재벌과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하는 민주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셋째,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립한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점점 지구화되면서 상호의존적인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 경제관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고착시켜 잉여가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이전되게 만들고, 투기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무한대로 보장하여 개도국에 외환 위기를 가져오면서 전세계적으로 투기 자본주의를 만연시키며,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격차를 날로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적인 재생산구조를 최대한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대외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통제를 강화한다. 자본주의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WTO 체제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독점이윤과 기술이용료의 형태로 잉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인류 공영의 지식이 상품화되어 자본의 사유재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자본주의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교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동 제한 외에도 준비금 비율 규제나 외환거래세 등에 의한 간접적 이동 규제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직접투자자본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국민경제 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경영 지배는 국민경제의 중핵이 아닌 부문에서 일부만 허용하고, 잉여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경영 내용에 대해서 감독한다. 개도국과 연대하여, 자본주의 강대국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 등 각종 국제협약을 개정하여, 호혜적인 협약이 되도록 노력한다.

≪통일≫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재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이 주체로 나서 수행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화합적인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을 고양시켜 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분단.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한다. 곧,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지향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통일 배제적 경제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국가가 통일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국민경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민족통합성을 고양할 것이다. 식량 및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농업.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여러 부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이끄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군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킨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 미군을 단기적으로는 감군 및 후방 배치하여 공격형보다는 방어형 등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철수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와 아울러 동북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외교≫

자주 호혜 평등의 국제평화 체제를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모든 민족이 자주권을 확보하는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조하는 국제관계와 핵전쟁 등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국제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동 지역의 걸프전쟁으로부터 발칸반도의 코소보전쟁에 이르기까지 냉전 이후 터져 나온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분쟁은 평화의 정착이 인류에게 여전히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무력사용의 포기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폭력, 착취,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적극적 차원의 평화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정책은 경제, 환경, 문화, 인권 등의 문제에서 국제적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의 자주성이 존중되는 호혜 평등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하고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불평등한 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둘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적 협의기구를 결성하고 군축 및 지역 평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셋째,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특정 국가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이해를 위해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국제기구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국제적 차원의 민주적인 분쟁조정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그 동안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 분쟁조정기구가 책임 있게 국제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약소국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넷째, 어떤 군사적 블록에도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비동맹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나라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또 이 나라들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세계적 차원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인류의 지속적 평화는 오늘날과 같이 날로 커지는 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의 상황 아래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격차가 전지구적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결과이자 현상임을 직시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국가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양산 확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국방≫

합리적인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대비형 국방건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온 공포의 균형이라는 시각이나,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군사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국방의 개념을, 적정 규모의 방어 능력 확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장, 사회 복지의 실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고 남북한이 함께 군비를 축소하여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국방 체제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군대를 감축하고 방위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예산 가운데 20%나 차지하는 방위비는 5% 이하로 줄여 가고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은 교육 예산, 사회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보≫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국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것이다

첫째, 방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방위 예산 확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방위비의 집행과 무기 도입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국회와 민간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외 의존적인 국방 체계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꾼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한 무기 도입을 중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하고 무기 구입처를 미국 중심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 다양화한다. 또한 주한 미군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고 미군이 우리 땅을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한다.

셋째, 병력을 감축하고 우리 군을 과학화, 현대화, 정예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한 군축 협상을 통하여 군 병력의 감축을 시도하여 남북

한 각각 30만 명 규모로 군대를 감축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더 감축해 나가 각 10만 명 규모로 만든다.

넷째, 우리 군을 정예 병력으로 실질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게 만들 것이며, 안정성을 갖고 발전하게 할 것이다. 지상군 위주의 전력 구조를 기술 집약형 소수 정예 병력으로 재구축하고, 인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형 군대로 전환해 갈 것이며, 무기 체계를 첨단화, 과학화, 기동화할 것이다. 정보와 경보 능력 등 현대적 군사 능력에서 내실을 갖추어, 정보 수집, 조기 경보, 지휘 체계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의 군축 과정에 맞추어 병역 제도를 혁신하여 징병제를 직업 군인 제도와 모병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직업 군인 제도를 더 확산하고,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군 병력을 충원하면서 군의 전문화를 이룬다.

여섯째, 현행 향토 예비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정예 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하여 예비군 선택 지원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예비군 선택 지원제란 징집 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역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과 차별을 두며 유사시에 예비군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강화한다.

≪노동≫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을 위하여

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모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역량과 애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이러한 노동의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통해 관철되는 착취 구조는 노동자를 자기 완성의 주체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고, 노동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한낱 생계비를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개발 독재 시대에 치른 노동자들의 희생은 보상받지 못했고, 뒤이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을 위한 근거조차 부인하였다.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수치는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함께 나아지지 못했다.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산업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필요한 자율성과 권한은 부정되고 있으며 여전히 전근대적인 억압적 통제 방식 아래서 생산성의 책임만 강요당하게 하고 있다. 불평등한 성별분업논리는 오늘날까지 온존하여 여성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치적 절차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보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는 자본과 결탁한 국가에 의하여 저지되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은 철저히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착취적인 생산관계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룩하여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주체가 되며, 노동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활동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과업들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상정한다.

첫째,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하여 노동력의 교육 훈련 및 수급을 조정한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기술 습득과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생애에 걸쳐 자기 계발의 길을 열어간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가사노동과 여러 가지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체계를 수립한다. 또한,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온존시키고 여성에 대한 이중 착취를 정당화해 온 성별분업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모든 정책에 반영한다.

셋째,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현한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점차 고용 창출 없는 경제성장의 유형을 지속하며 실업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사회 보장 비용 지출, 가족 해체.생활 범죄.실직자 자녀의 교육 및 영양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고령화 추세는 이러한 고용 기회 부족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 창출 노력과 더불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요청된다. 노동 시간 단축은, 재생산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지기 위해서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 시간 단축이 가치의 향유와 창출 및 사회적 연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문화적 공간과 설비를 확충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노동 현장이 직업병과 안전 사고로부터 자유롭고, 일을 하며 자기의 역량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다섯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악법들을 폐지하고 생산현장의 부당 노동 행위와 각종 억압을 없애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 행동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한다.

여섯째, 노동자 간의 평등과 연대를 실천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기술, 역량,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별.국적.지역.종교.신체 조건 등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차별도 금지한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도록 하고, 산업 유형이나 기업 규모, 기업의 이윤율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들도 금지하며 그들이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고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받도록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해 간다.

일곱째, 노동자 자주 관리를 지향한다. 노동자에게 그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노동 배제적 경영 방식은 착취 관계와 함께 종식되며, 노동자와 경영자가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 결정제를 실시하되, 노동자와 그 대표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는 자주 관리를 지향한다.

여덟째,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완수한다. 노동이 자아 실현의 활동이 되고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생산 현장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노동계급의 의지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국가권력의 형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여성≫

여성이 해방된 진정한 인간 해방의 세상을 위하여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늘 종속적이었다. 성에 기초한 가부장적 억압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해왔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억압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성 억압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억압이자 복합적인 사회 구조임을 직시하고, 억압받는 여성 대중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성 억압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녀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여성이 해방된 사회, 그리하여 진정한 인간 해방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함께 투쟁해 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격적 예속은 불평등한 성별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이다. 또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결혼 제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성억압의 실질적 기초이다. 여성은 남성 가장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모성애를 강요받고 있다. 여성은 항상 노동해 왔지만 그 노동은 언제나 평가절하 당해 왔다.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언제나 주변적 노동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고통받아왔다. 출산과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하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은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서 온갖 성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마저 전담함으로써 이중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회경제적 조건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실질적 장애물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조차 소수이자 비주류이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학문과 언론 및 대중매체에서도 여성은 수적으로 내용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 내부의 모든 성차별을 일소함은 물론,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평등하고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한다.

첫째,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상품화하는 모든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제도와 가치체계에 맞서 싸운다. 성폭력과 성매매를 근절하고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임신, 출산, 낙태 등에서 여성이 성과 육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둘째, 평등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유롭고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모색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및 독신가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핵가족 형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과 제도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가부장적 성별 분업을 폐지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쟁취하고, 공적 노동에서 모든 성차별을 철폐한다.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남성 가장만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박탈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바로잡고, 노동의 대가가 각자에게 귀속되며 아동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

넷째, 시혜가 아닌 사회적 연대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소외되고 배제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우리 사회에는 빈민여성, 매춘여성, 장애여성, 노령여성, 탈북여성, 외국인 여성노동자, 여성 동성애자 등 다양한 조건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여성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실행에 앞장선다.

다섯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킨다. 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고립되어 있던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우리는 여성억압에 대한 다양한 투쟁들을 더욱 폭넓게 조직하여 정치세력화 한다.

여섯째, 모든 사회.문화적 여성억압을 철폐한다. 남성중심적인 법.제도와 규범을 변화시키고 생활과 문화의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성평등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든다. 또한 학문, 언론, 과학기술, 정보통신, 대중문화,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억압을 종식시키려는 모든 투쟁에 함께 한다. 나아가 우리는 진보적인 여성운동세력,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억압받는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다.

≪농어민 도시빈민≫

농어업보호정책으로의 전환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

한국 경제는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펴왔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농업 재생산 위기에 빠졌으며, 농어민들은 큰 희생을 당해야 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고 WTO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 지향적 농업자립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가격 정책의 뒷받침을 결여한 채 농업구조개선정책을 강행한 결과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과 농가부채 누적을 초래했다.

한국 농업은 공황 상태에 있는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를 수용하고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에서 중간 상인의 역할을 높이는 등 시장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하지 않은 채 농축협 중앙회의 단순 통합 등으로 정부가 협동조합을 계속 장악하고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구 환경 위기 속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식량 안보를 이룩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사회가 생기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 속에서 농어업의 역할을 높여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끌어올려 도시사람 못지 않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농산물가격정책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실현한다.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농산물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한계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도농간 소득 균형을 달성하도록 한다. 벼, 보리, 밀, 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해서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여 생산비 보장과 농가소득 보장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상업 농산물의 경우 협동조합이 생산 조절이나 출하 조절을 통하여 가격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업 구조 정책은 소수의 상층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동력과 토지, 농기계, 농업 시설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식량 자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농업 조직화≫의 길을 추구한다.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농민 생산자 조직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도와 교육,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게 하고 농지 보전을 추구한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를 환수하여 농민들에게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농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 진흥 지역을 확충한다. 이에 맞게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한다. 모든 농지의 경지정리사업을 국가기간산업의 차원에서 실시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인다.

셋째,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 강화한다. ≪농림수산업 산재 안전법≫을 제정하여 농어민들이 일하다 겪는 사고를 보상하고, 농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농가가 재해 지원 대상이 되게 하여 대부분의 재해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농어민 연금으로 농어민들이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문화,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도시 학생들을 농어촌의 작은 학교로 오도록 하고 작은 학교, 작은 학급에 맞는 질높은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넷째, 협동조합을 정부 통제에서 해방시켜 농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조직으로 전환시킨다. 중앙회를 통합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로 전환시키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며, 전문조합의 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협동조합이 당면한 핵심 과제인 경제사업에 주력하도록 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단체, 농민단체의 농정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농업정책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다.

다섯째, 농가 부채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낮추어 농가의 빚이 줄도록 적극 지원한다. 농업자금융 상호금융 대출금 이자율을 농업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한다. 특히 부채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농업을 계속 경영할 뜻

과 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채 일부를 탕감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여섯째, 어업의 진흥을 위해 해안선의 무분별한 간척을 중단하고 청정 해역에서 양식 어업을 발전시키며, 남획을 방지하여 어족 자원을 보호한다. 이웃한 나라들과는 호혜 평등주의로 어업 협정을 맺되, 우리 어민들의 생존이 되는 어업구역을 보호한다. 수협을 어민들의 조직으로 민주화하여 대자본의 수산물 유통시장 지배를 막아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어민 소득을 증대시킨다.

한편 개발독재시대의 저곡가정책에 의한 대량 이농과 저임금 구조로 인해 도시에서 일용노동자, 노점상, 파출부 등 빈민이 양산되었다. 도시빈민들은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 기능을 해왔다. 도시빈민들은 사회복지정책이 부재하는 가운데 권력자들의 얄팍한 시혜에 휘둘리어 자신의 권익을 주체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다.

WTO 뉴라운드 협상, 한미.한일 투자협정 등 초국적 금융자본의 강요와 국내독점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시직.일용직이 양산되어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또 임금이 삭감되는 가운데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의 20%가 빈민인 상태에서 ≪빈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단순하게 노동과 복지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궁극적으로는 도시빈민이 존재하지 않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되,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의 빈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첫째, 일용건설노동의 하청구조를 청산하고 건설업 공영화를 실시하며 불완전 고용의 노동에 대해 실업급여와 생계비 보조를 실현한다.

둘째, 노점상에 대한 무리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한다. 노점상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점상에 대한 무분별한 법적용과 일방적 단속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질서 수립을 전제로 자치단체의 조건에 맞게 노점상을 합법화하되 도로의 공공성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사업체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을 창출한다. 빈민가장 및 자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며, 이 기간동안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 관리한다. 영세 하청공장 및 가내수공업, 가정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빈민여성과 연소노동을 보호한다.

넷째, 도시빈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한다. 저소득 도시빈민을 위한 주택보조금 제도를 실현한다. 불량주거지를 재개발할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일시주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절대 빈곤층과 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섯째, 빈민지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법제화한다. 빈민지역에 정부가 공부방, 놀이방, 탁아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여섯째, 도시빈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시빈민 밀집지역에 공공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며, 보건소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인권≫

억압과 차별의 타파와 민중의 인권 보장

해방 이후 우리 나라 자본과 국가 권력은 국가 안보를 적극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빌미삼아 민중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기구들을 두어서 민중의 기본적 인권을 억눌러 왔다. 그러나 생존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열렬한 투쟁은 계속됐고 1987년 6월 민중항쟁은 반민중적인 체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고문 금지와 같은 초보적 인권 보호 조치마저 부정되고 있어 인권 보장을 위한 길은 멀다.

이제 우리는 민중의 자유권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자본의 폭압에 맞서 사회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투쟁해 갈 것이다.

첫째, 우리 나라의 주권 주체인 민중을 배제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민중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중적 억압 구조를 청산할 것이다. 민중 배제적인 각종 반인권 악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관련 기구를 탈바꿈시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삼는다. 나아가 민중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정치적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인권 악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각종 국가공안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제도와 장치를 만들 것이다. 또한 민중의 참정권 실현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혁하고 사법 제도 민중의 관점에서 개혁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에 맞서 민중의 정당한 사회권을 확립하고 지켜냄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들을 도입할 것이다.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는 현재 전세계 민중의 삶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쟁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세력은 빈부 격차를 더한층 벌려 가고 있으며 민중이 쟁취한 모든 사회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노동 시간 단축, 일할 권리 보장, 해고 제한을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 실업 대책을 펴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해 갈 것이다. 또한 농어민과 도시 빈민 등의 생존을 보호할 것이다. 나아가 빈부 격차의 해소와 사회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세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의료, 주택, 공적부조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셋째, 소수자가 고통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보장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형자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권을 적극 보장할 것이다. 외국인과 난민이 우리 나라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도 고통받지 않고 이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넷째, 과거의 인권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한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찾아내 뿌리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고문과 학살, 기타 이에 준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며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을 금지할 것이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 관련 국가 기구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 또는 민주 탄압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청산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인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다섯째,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인권 보장 체계나 국제적 인권 보장 체계가 다 충분히 인권을 보장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권력 분립 제도만으로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며,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제도는 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미흡했다. 침해가 인정된 사례에 대한 구제 제도 역시 복잡한 절차를 보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사건을 폭넓게 다루고 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행하며 인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일을 맡는 독

립된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사회복지≫

사회정의 연대 평등에 입각한 복지공동체 구현

인류의 역사는 시민권 확대의 역사이다. 18세기에는 공민권이, 19세기에는 정치권이 권리로서 인정되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는 사회권이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가 권리로서보다는 시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이러한 정책 경향은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사회복지는 절대적 빈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국민 모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만 시혜로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사회보험 제도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또 분야에 따라 분리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상대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품위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성, 연령,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연대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사회 정의란 모든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으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평등이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가치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 안에서만이 아니라 계층을 넘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 식구로서 함께 손잡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국민 복지 기본선을 설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주택.보건.교육 등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1/5에 도달하도록 확대하여,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하는 주택으로 개념을 변화시키고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셋째, 사회 연대와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는 모든 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단일한 국민보험으로 통합한다.

넷째, 모든 국민의 사회 참여를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들이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정으로부터 벗겨주고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공급하는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기회평등을 실현한다. 또한 어린이 수당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제도의 운영, 특히 사회 복지 관련 기금의 운영에 공익 대표와 당사자 대표를 참여시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보건의료≫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과 보건의료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권리이다. 사회구성원 모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건강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져 있다. 보건의료는 소수의 손에 독점되고, 상품으로 거래됨으로써 빈곤 계층은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노약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더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적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계는 상품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값비싼 장비를 이용한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팽창하고 있지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 민중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의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통제 아래 둘 것이다.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양질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음을 당면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보건의료 재원 조달은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의료 재원은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로 마련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임신한 여성과 영유아,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는 무상 의료를 실현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의료보장 급여범위를 예방 서비스까지 대폭 확대하고, 의료보호와 건강보험을 통합 운영하여 단일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의료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한다. 현재 민영 의료기관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비영리 의료기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국영보건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모든 국영보건의료기관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단일체계로 관리.운영하도록 재편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넷째, 국가와 노동자의 통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과잉진료,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현행 의료보수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지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인두제로 전환하며, 2.3차 의료기관은 총액예산제로 전환한다. 병원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을 사회적으로 통제한다.

다섯째, 노동자.농민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산업보건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한다. 생산현장에서 건강장애요인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

교육의 공공성의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민주적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 노동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인 인간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 내맡겨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지배 이념의 재생산에 교육을 동원하고, 교육민주화를 억압하였으며 민중에게 교육비 부담을 떠넘겨 왔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역할을 변질시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만을 양성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인간해방을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우리는 기존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보적 교육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간다.

민중의 교육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재정을 튼튼히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식적 보장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를 이룩한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 취학전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다. 유아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핵가족화의 상황에서 유아의 공동체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3~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포함시키며 단계적으로 이를 현실화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중등교육을 무상 통합학교로 한다.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사회생활과 노동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을 통합학교체제로 개편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후기 중등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이 개발되고 고등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학교체제를 골간으로 특수목적학교(기술고, 과학고, 예술고 등)를 설치하여 저마다의 관심과 능력의 발달에 조응하여 알맞은 교육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1-5-5-4(2) 학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셋째, 대학 서열화를 바로잡고 종합대학체제를 개혁한다. 학력주의와 대학 서열화는 대학간 균형 및 학문간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을 왜곡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혁파하기 위하여 서울대를 포함하여 국공립대를 통합하며 대학간 수강교류를 활성화한다. 재벌처럼 비대해진 종합대학체제를 기초학문에 기초하여 기능별, 분야별 핵심단과대학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역사회의 학문 중심인 지방대학과 고등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위상을 튼튼히 하며 균형 발전을 이루어낸다.

넷째, 사학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리 사회의 중등교육의 상당 부분과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은 독자성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사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바꾸어가며 부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강화하고 공립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성인 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교육을 국가재정과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보장하며 이를 통해 노동과 교육의 순환과 결합을 현실화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양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실현한다.

여섯째,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돕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한다. 사회의 민주적인 일원으로 성장하고 저마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교과 지식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예술 교육, 문화 교육, 힘써 노력하여 스스로 깨치도록 하는 노작(勞作) 교육 등 비교과 교육과정을 늘리며, 과도한 학습수준과 학습량을 조정한다. 대학 교과과정 역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이해를 기초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한다.

일곱째, 교육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혁한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요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이양한다. 민주적 교육자치제를 확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고 활성화한다. 학교장, 대학 총학장의 선출보직제를 실시하고 학생회의 자주적 활동과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한다.

여덟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GNP의 7% 수준으로 확충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낮추고 학교당 학급수를 줄이고 한 학년을 6학급 이하로 낮추며,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계속 운영되도록 한다. 또한 학교 시설과 설비를 현대화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원 처우를 개선한다.

≪문화≫

문화 사회 건설은 사회 발전 전략의 핵심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문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과 억압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서 서로 돌보고, 가꾸고, 보살피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인간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가치다. 인간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의 결핍을 의미한다. 인간 발전이란 부의 증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은 각자가 개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건강 개선, 수명 연장, 지식 확장, 교육 확대, 사회적 차별 축소, 정치적 자유 확대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또 권력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동 및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며,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들을 더 많이 확보할 때 인간의 발전을 위한 기회는 더 넓어질 것이며,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우리는 사회적 창조성을 확장하고, 모든 문화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윤리를 공고히 하며, 문화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유시간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화 사회는 인간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한 사회로서 개인들의 문화적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사회이다. 이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는 삶의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삶의 여유는 오늘 만연하고 있는 소비 문화나 여가 문화만으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여유는 이윤 창출을 위한 상업적 활동과는 분리된 비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곳, 권력 독점을 위한 투쟁보다는 평등과 평화, 자유가 넘치는 곳, 공존의 지혜가 넘치는 곳에 있다. 돌보기, 가꾸기, 보살피기 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함께 적정한 양의 자유시간이 필요하다. 예술의 창작, 환경 보존이나 공동체 삶의 터전을 가꾸는 자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로운 시간이다. 의미 있는 자유시간과 소득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시간을 크게 단축해야 한다.

둘째,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문화적 역량은 인간의 지적.윤리적.감성적 능력이 강화될 때, 그리고 이들 능력이 모아져 사회적 창조성이 강화될 때 생긴다. 사회적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 토양이 필요하다. 이 토양에는 자유로운 표현을 포용하는 개방적 사회 분위기, 안팎의 압박이나 불의에 굴하지 않는 국민적 기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실험 정신과 그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적 능력, 그리고 실험 정신과 지적 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기획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런 민주적 토양을 만들어 내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사회적 창조성과 문화적 역량

의 강화를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셋째, 임금 노동과 소비 생활에 일상 전체를 소모하는 자본주의적 삶과는 다른 삶의 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자율적 삶의 조직과 호혜적 인간 관계가 가능한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 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오늘날 자율적이고 호혜적 삶은 국가에 의해서도, 시장에 의해서도 보장받지 못한다. 새로운 삶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자유시간을 보상 없이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삶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 삶이 국가와 시장의 규제나 요구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새로운 공공 영역을 구축할 것이다. 이 공공 영역을 구축할 때 개인들의 활동, 시간과 물품의 교환이나 사용은 이윤이나 권력 창출보다는 필요와 꿈과 욕망과 자유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

넷째,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와 예술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중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일이며, 전근대적이고 폭압적인 문화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화 민주주의의 실천은 문화적 삶에 대한 대중의 참여 민주주의를 유도하는 생활 정치로서의 문화적 실천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 주민, 시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대중이 스스로 자율적 문화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문화의 발달을 도모하면서 문화적 복지를 증진한다.

다섯째,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적 권리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권리를 인정할 때 신장된다. 우리는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제도를 정비하고, 계급.성.지역.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문화 정책을 편다. 문화적 권리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때 보장될 수 있다.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우리는 자연 생태적 가치를 존중한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문화적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자연 생태계의 복원을 문화 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여섯째, 문화 주권을 지킬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문화 제국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있으며, 특히 외국 문화의 국내 문화 시장 침투가 심각해 민족 문화의 해체가 몹시 걱정되고 있다. 우리는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민족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문화 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국수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개방적 성격을 띤 민족 문화를 창달한다.

일곱째, ≪문명의 전환≫과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의 발전이 인간 발전에 핵심임을 생각할 때 모든 사회 정책에서 문화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정책을 사회 발전 전략의 한 핵으로 삼고, 정부 조직에도 문화 부문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문화적 태도와 문화 정책이 정부 조직 전체에 걸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문화적 역량과 사회적 창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들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 부문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의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여덟째, 문화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 독자적 학문 정책을 수립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의 핵심은 예술과 학문에 있지만, 학문은 그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특별한 발전 전략을 필요로 한다. 기술 개발, 산업 성장, 정치 발전, 역사 발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문이 타 영역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학문의 민주성, 공공성, 사회적 생산성을 강화하여 창조적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언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는 여론의 수렴과 반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이며, 언론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기본 수단이다. 따라서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며 확산시키는 언론의 자유는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언론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여야 한다. 언론은 힘 없고 권력에서 소외된 세력의 견해를 포함해 모든 집단의 의견이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매체를 소유할 능력 또는 매체에 접근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것을 가로막는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론 매체가 일부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에서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 역할만을 수행했다. 3공화국 이후 꾸준히 진행된 언론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언론은 이제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는 권언유착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자본에 영합하는 또 하나의 권력 기구로 성장하였다. 산업화, 집중화, 거대화라는 세계적인 물결 속에서 사회적 도구로서 보다는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언론 자유의 보장 못지않게 언론의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소수에게 집중된 언론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인과 사회 여러 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자본이 언론을 지배하는 것을 배제하고 공영성을 회복한다. 재벌은 언론사 소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으며, 언론 기업 육성 과정을 통해 성장한 족벌 언론의 폐해는 심각하며, 방송의 사기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언론 권력의 집중을 가져온다. 소수 언론의 여론 독과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재벌의 시장 진입 제한, 기업의 일인 소유지분 제한 등을 통해 자본의 언론 지배를 막고 권력 행사를 제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갖출 것이다.

둘째, 언론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게 하고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함은 기본이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는 오래된 일로, 최근에는 언론이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언론은 언론 소유주, 경영진, 간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언론이 일부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내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접근권을 보장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매체의 소유와 매체의 이용은 구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 매체는 공적인 수단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체에 대한 접근권 행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대안 매체를 활성화할 것이다. 비대하고 중앙 집중화한 거대 언론이 권력에서 배제된 소수 집단의 삶과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매체의 활성화는 사회 발전의 지표이다. 우리는 매체의 분산, 매체 권력의 분산을 지향하여 대안적인 작은 매체의 존재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고, 대안 매체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꾀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 격차를 줄여 갈 것이다. 공동체 사회의 붕괴와 거대 사회의 등장은 정보 권력이 집중화 현상 불러왔다. 정보량이 증대하고 정보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간 정보의 빈부 격차가 발생했다.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장악한 집단의 권력화는 개인의 삶을 지배와 통제 아래 놓이게 한다. 우리는 정보의 확산과 정보 권력의 분산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여 정보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되도록 노력한다.

≪환경≫

친환경적인 대안 사회의 실현

민중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친환경적인 사회체제를 누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개발독재는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행해 왔다. 한국의 정권들은 골프장 건설, 핵 발전소 건설, 군사시설 확충 등을 정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삼아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또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편승하여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환경정책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기업사회는 재벌을 필두로 해서 환경을 단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지구적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원전사고, 유전자조작 등의 문제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인 사회체제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든 정치 역량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통합적 환경정책을 수립한다. 환경 정책은 경제, 산업, 노동, 국토계획, 도시정책, 인권과 민주주의, 안전, 과학기술, 교육, 여성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국토개발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대해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이고 광역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고 그린벨트와 산림을 보존하며, 철저한 물 수요 관리를 통해 환경 댐을 건설하며,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등을 실현해 나간다. ≪사전 예방의 원칙≫, ≪총량규제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등을 담은 ≪환경기본법≫을 수립하여 친환경정책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해 환경산업 육성책 및 환경예산 연동제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간다.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핵 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지하며,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시킨 화석연료의 시대를 넘어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간다. 석유, 석탄, 우라늄 등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태양력, 풍력, 열 병합 등 신 에너지원 개발 정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효율의 혁명과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적정기술 및 제도적 대안을 추구한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한다. 대기오염과 교통지옥을 낳고 있는 무분별한 도로 건설과 승용차 지원 정책을 통제하고 버스, 기차, 자전거 등의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교통 안전과 교통 복지에 기여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통제를 강화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식량 증산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예기치 못할 생태계 교란의 요소를 안은 채 초국적 농산물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환경의식의 확산과 심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환경에 있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심층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적 환경 연대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는 지역 곳곳에서 환경 파수꾼으로서 기업과 국책사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지키는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 등 사회세력과 연대한다. 국민에게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초국적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지구환경파괴의 실상을 공개하여 이를 차단하고 감시하는 데 모든 사람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대안사회 건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공공 이익에 봉사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육성하는 데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만 중점이 놓여져 있을 뿐, 그러한 기술 발전이 사회의 필요 및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군사력이나 기업의 이윤이 아닌, 공공이익에 봉사하도록 하려면 그 동안 냉전과 성장지상주의 시기에 자리잡은 연구개발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개혁을 통해 기술 발전이 국민의 기본적 필요와 특히 소외집단의 복지, 그리고 파괴된 환경의 복구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그럼으로써 인류 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개발체계를 세워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연구개발 집단의 사람과 학문 분야 등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든다. 우리 나라 연구개발 집단은 압도적으로 남성에 편향되어 있음은 물론 특정 대학 출신과 유학하고 온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써 폐쇄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폐쇄된 연구개발 집단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연구개발 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하는 연구를 활성화한다. 연구개발활동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술 변화의 이익을 공평히 분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술 진보가 곧 사회 진보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편향된 과학 기술의 팽창은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심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술 진보와 사회 진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연과학자 집단과 사회과학자 집단이 학제간 협동 연구를 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치와 과학기술 사이에서 정직한 매개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만든다. 과학기술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성을 갖는다. 과학기술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성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와 연구의제 간의 바람직한 조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로써 사회적.정책적 목적과 관련 연구개발사업(예컨대 에너지, 환경, 보건,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사이의 연계를 검토함으로써 특정한 연구개발사업이 공공이익과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게 한다. 다른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기구를 둔다.

넷째,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참여민주주의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의 결정 과정은 기술관료와 해당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시민 간의 민주적 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은 민주주의 원칙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집단의 고립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계기로서도 중요한 것이다.

다섯째, 지구적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앞장선다. 그 동안 우리의 과학기술은 소비와 성장의 절대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구의 과학기술을 모방해 왔다. 그러나 지구환경 변화와 탈냉전 뒤 삶의 질이 소비 및 성장의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학기술정책도 물질생활의 수준에서 삶의 질을 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동안 홀대 받았던 우리의 고유 지식과 전통 문화 등에 눈을 돌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추구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당헌

2000. 1. 29.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전 문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질곡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창당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주,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우,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주인이며 민주노동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이념정당이고, 노동자,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방면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혁파하는 견인차면서 동시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조직적 모범인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면서 우리 당의 최고 규범으로 이 당헌을 제정한다.

2000년 1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노동당≫이라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Democratic Labor Party≫로 하며, 영문 약칭은 ≪DLP≫로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두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을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우)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우가 될 수 있다.
② 당우의 가입과 탈퇴,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7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8조 (장애우당원의 지위와 권리)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① 장애우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을 일정비율 할당한다.
② 장애우당원의 할당 비율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지지단체)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지지단체에 일정수의 당대회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대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으로 구성한다.
1. 중앙위원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수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의 당대회 대의원
②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 (당대회 대의원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 당대회에서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당대회 의장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④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 (권한)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제정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의 선출과 탄핵
4.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5.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6.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7.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8. 기타 중요한 결정

제14조 (소집)
① 정기 당대회는 1년에 한번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5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와 부대표
2. 사무총장
3.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수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의 중앙위원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되, 대표가 의장을 맡고 부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③ 중앙위원의 선출과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중앙위원의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1.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각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본부의 설치
5. 전국집행위원, 당기관지위원장,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 회계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및 해임
6. 정책위원장, 기획위원장, 대변인, 중앙연수원장과 부원장, 당기관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각부문위원회 위원장,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본부장의 인준
7.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8. 지지단체 인준
9. 당헌개정안의 발의
10. 당헌, 당규의 해석
11. 부실지구당 및 사고지구당에 대한 판정, 직무대행자 선정
12. 지부와 지구당 해산에 대한 인준
13.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14.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15.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8조 (소집)
정기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은 전국집행위원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와 부대표

제19조 (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한다.
② 대표는 집행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는 중앙집행부서의 각 위원장을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20조 (대표의 선출)
① 대표는 당대회에서 재적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의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90일 이내에 당대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대표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 (대표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대표 직무대행)
① 대표가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부대표 중 1인을 선임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3조 (부대표)
①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당무처리를 협의한다.
② 부대표는 5인 내외로 한다.
③ 부대표는 당대회에서 재적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부대표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집행위원회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제24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집행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다.
② 전국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
2. 부대표
3. 사무총장
4. 광역시도지부장
5.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각 부문에서 1인씩 선출한 집행위원
6.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9인의 집행위원
③ 전국집행위원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되, 대표가 의장을 맡고 부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④ 전국집행위원의 선출, 전국집행위원회의 직무수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 등은 당규로 정한다.
⑤ 위 2항 6호와 관련 9인의 집행위원 중 여성집행위원으로 6인 이상을 선출한다.

제25조 (임기)
전국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6조 (권한)
① 전국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2. 주요한 당 사업과 정책의 심의, 의결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

제27조 (소집)
① 전국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전국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전국집행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제28조 (지위와 구성)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집행기관이다.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
2. 부대표
3. 사무총장
4. 각 집행부서장
③ 상무집행위원회는 대표가 의장을 맡고, 부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④ 상무집행위원회는 주 1회 소집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즉시 소집한다

제29조 (권한)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일상적인 당의 사업 및 정책의 의결집행
2. 전국집행위원회에 안건 제출
3. 중앙위원회 및 전국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제4절 사무처

제30조 (구성)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 1인과 수인의 부총장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대회에서 재적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사무총장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32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기획위원회

제33조 (기획위원회)
① 주요 당방침 및 사업계획과 당무의 기획과 조정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획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대변인실

제34조 (대변인실)
① 당 각급 회의의 결정사항과 기타 조직 의사의 공식발표를 위해 대변인실을 둔다.
② 대변인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대변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인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④ 대변인실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중앙연수원

제35조 (중앙연수원)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 중앙연수원은 위원장과 수인의 부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연수원장과 부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앙연수원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절 부문위원회

제36조 (부문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37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제38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

다..
② 고문은 대표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9조 (당기관지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기관지를 발행한다.
② 당기관지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관지위원회 산하에 당기관지편집위원회를 두며, 당기관지편집권은 당기관지편집위원회가 갖는다.
④ 당기관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기관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당기관지편집위원장과 위원은 당기관지위원장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⑦ 당기관지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 (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중앙당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계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 (의원단회의)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회의는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지역조직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제1절 광역시.도지부

제43조 (지위와 구성)
① 광역시.도에 지부를 두며, 지부는 해당시도의 지구당을 총괄한다.
② 시 도지부에 지부장과 약간명의 부지부장을 둔다.
③ 시 도지부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당규가 정한 국을 둔다.
④ 지부의 설치와 직제,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 (대의원대회)
① 지부 대의원대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2. 각 지구당 위원장
3. 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의원
4. 해당 광역 소속 당대회 대의원
5. 당지부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② 지부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지부장, 부지부장의 선출과 탄핵
2. 시도지부 규약의 제정과 개정
3. 시도지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4. 지구당의 주요한 업무
③ 2항 1호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해당 시도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총회 또는 총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⑤ 지부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45조 (운영위원회)
① 시도지부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부장, 부지부장
2. 사무처장
3. 지구당위원장
4. 당지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지부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해당시도의 당정책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3. 시도지부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4. 시도지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6. 기타 시도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지구당

제46조 (구성)
① 지구당에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지구당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국장을 두고,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구당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총회)
① 지구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지구당 소속 당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구당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과 탄핵
2.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선출
3. 중앙위원 및 대의원의 선출
4. 지구당의 해산 등 조직의 주요진로에 관한 사항
③ 제45조 2항은 지구당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지구당에 소속된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당원총투표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대의원대회)
① 지구당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구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2. 당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3. 지구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② 지구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구당의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중요사업 결정

③ 지구당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구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9조 (운영위원회)

① 지구당의 운영위원회는 지구당의 일상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위로서 다음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1. 지구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사무국장
3. 지구당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지구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지구당의 일상사업 의결 및 집행
2. 분회의 신설과 해소 및 분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지구당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5. 기타 지구당의 주요업무

③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분회

제50조 (분회)

① 분회는 우리 당의 기초조직으로 지구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별로 설치한다.

② 분회의 구성은 15인~29인으로 한다.

③ 분회의 편재기준과 원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공직선거

제51조 (대통령 후보)

① 대통령 후보는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당대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경선일 경우 당원 과반수 투표참여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제1, 2위 득표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한다.

②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국회의원 후보)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지구당 전체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대회에서 선출하며, 여성에 30% 이상을 할당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 (광역단체장 후보)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①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해 시도지부의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① 기초단체장 후보와 지방의회의원 후보는 당해 선거구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당해 선거구에 지구당이 없을 경우의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 (인준 거부와 재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② 인준이 거부되면 선출 기관에서 즉시 후보를 다시 재선출해야 한다. 이 때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제8장 포상과 징계

제56조 (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전국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9장 재정

제57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년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9조 (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대표.부대표.사무총장의 탄핵, 합당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0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지부 또는 지구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지부 또는 지구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당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권한)
창당대의원대회는 이 당헌의 당대회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창당대의원대회 대의원)
창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각 지부와 지부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 각 부문에 할당한 대의원, 그리고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 특례)
① 창당준비위원회의 중앙위원회는 이 당헌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당헌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단, 전국집행위원 선출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②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은 당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지 못한다.
③ 각급 당조직은 2000년 2월 중에 이 당헌.당규에 따른 새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제5조 (총선거 후의 임시 당대회)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2개월 이내에 임시 당대회를 개최하여 총선평가와 조직재편, 그리고 조직발전전망을 논의한다.

제6조 (지역조직 경과규정) (2001. 2. 24. 정기당대회 개정)
모든 지부는 2001년 8월까지 당헌 제 6장 지역조직 제2절에 입각하여 조직정비를 완료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4.13총선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진로

-목차-

1. 개괄적 평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면 무엇보다 내외관심이 집중된 새로운 유권자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민중정치실현을 위해 창당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시도를 꼽을 수 있겠다.

낙천,낙선운동은 한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왔다는 일부 지적과 음모론 ,유착설을 비롯한 지역감정 등 전근대적인 역풍, 그리고 대안부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낙선대상 86명중 59명이 탈락하여 낙선율 68.6%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으며 여기에는 대중의 정치개혁요구라는 긍정적 성격이 담겨있다.

700 여개 각기 다른 단체가 연대하여 짧은 기간 전개한 낙천낙선운동은 기존정치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의 여망을 반영함으로써 민중을 업신여기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것은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기존정치권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있다 하겠다.

역대 선거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전체인구 70%차지) 총선 사상 최하의 투표율(57.2%)을 기록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번 총선의 중요한 특징이다. 가장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유권자층이 투표에 대거 불참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의 벽이 여전히 두텁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낙천낙선운동이 낡고 부패한 반민중적인 정치권을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과 패배주의를 더욱 부채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역의원 207명중 41.8%에 해당하는 86명이 낙선되었고 이중 33.7%인 29명이 3선 이상의 중진국회의원으로서 퇴출되었다는 것은 시대변화의 새 흐름을 보여준다.

16대 국회의원 41.0% 에 해당하는 112명의 국회의원이 초선임을 감안할 때 민중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치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민중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과는 반대로, 돈과 권력의 무차별적인 횡포로 저질러진 16대 총선은 지난 15대 선거에 비해 무려 4배에 가까운 2843건이 선거법위반 사례로 적발되었고 선관위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부정선거행위는 상상을 초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역구인 성남 일선경찰서에서 저질러진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알몸수색사건은 범죄적인 만행으로서 지배세력이 민중정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탄압사건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27개중 21개 지역에 출전하여 22만 3천여표를 획득하였고 전체 득표율 1.18%를 얻었으며 후보 평균 13.1%라는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난 14대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 평균득표율이 6.5%인 점과 비교하면 민노당의 총선점수는 진보정당운동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시켜주는 선전이었다고 평가된다.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한달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법과 제도적인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 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진출이 좌절됨으로써 제2창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영남 지역구 65개 중 무소속 정몽준 한 석을 제외하고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것이나 호남 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의 친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새천년 민주당의 호남 독식은 한국정치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민주노동당이 보수와 수구일색의 정치적 암흑기를 헤치고 동터 오르는 역사의 새아침을 민중의 손으로 맞이하기 위한 대안세력으로 서자면 치열한 자기혁신과 준비가 요청된다.

2. 냉철한 판단으로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자

득표율에 나타난 민심과 민노당의 과제

총선 평가에 앞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어떻게 싸웠는가?

당면선거투쟁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총선 평가에 있어서 조급함과 청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다. 민중을 중심으로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당의 군중기반을 확대하는 관점과 입장이 바로서야 선거투쟁의 한탕주의를 막고 정당정치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민중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고자 창당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실현은 매우 어렵고 간고한 실천투쟁의 성과들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번 16대 총선은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시대정신과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의 장이었으며 민중시대를 여는 대장정의 서막이었다.

2000년 총선은 궁극적으로 민중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당을 정비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험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227개의 지역구중 21개 지역에서 치러진 민주노동당 정치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크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중부권 그리고 영남권으로 선거구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성남중원구 정형주19,781표(21.5%) 득표와 민주노동당전략지역으로 꼽힌 울산. 동구 이갑용29,288표(35.7%) .북구 최용규18,867표(41.8%) .창원을 권영길후보 36,579표(38.7%)

등에서 알수 있듯이 민주노동당의 상당한 약진을 볼 수 있다. 대전유성 이성우 10,852표(18.2%)나 울산남구 윤인섭 20,594표(16.8%)또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1개 지역구중 크게 두 자리 이상 득표한 위의 지역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과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지역의 조직적 군중기반이 튼튼하다는 점이다. 하루아침에 정치역량이 쌓이는 게 아니라 10여년 동안 지역운동을 통해서 또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급 대중운동을 통해서 정치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식의 바람몰이 정치는 대중에게 통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대중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과정속에 축적된 정치역량이 준비되지 않는 한 선거전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낡은 지배구도를 밑으로부터 허무는 치열한 정치투쟁의 현장인 총선은 지자체 선거를 통한 역량축적과 다종다양한 대중투쟁의 실천적 산 경험들이 강화될 때 진보세력의 정치적 승리가 가능한 것이다.

둘째, 보수정치와 근본이 전혀 다른 민중의 정치를 실현하고자하는 진보정당운동은 그 상이 낯설어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빠른 시간내에 얻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중들이 진보정당의 정치노선을 지지하고 진보정당후보에게 깊은 호감을 갖고 있음에도 선뜻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간 굴절된 한국정치행태에 대한 반감과 진보정치 실현가능성의 불투명함 등으로 인한 현실승리에 대한 동요가 적지 않게 녹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울산, 창원 등지에서 기층민중이 보여준 열렬한 지지와 환호의 열기는 당선을 확신할만큼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 그러나 분위기가 좋다고 득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직관계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앞으로의 선거결과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대중 속에 깊숙하게 당조직이 살아 있어야 실질적인 정치행위로 기존 정치권을 심판 할 수 있다는 것이 총선 투쟁이 우리에게 제시한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렇다면 기층 당 조직이 어떻게 하면 대중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노동대중을 비롯한 조직화된 대중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축적된 정치적 성과와 요구를 진보정당으로 발전시켜 낼 때만이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당적 운동으로 전화 발전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어디를 가나 도시든 농촌이든 민중의 생활 속 을 들여다보면 50여년간 지배해온 기존 정치권의 영향력이 상당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상가번영회 상조회 친목회 향우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름대로 조직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정당조직은 일상생활에선 잘 드러나진 않지만 선거를 비롯한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는 여전히 살아있고 정권 교체 후 그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단위별로 유지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번 선거투쟁에서도 알 수 있듯 새천년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막상 선거시기가 오면 오히려 눈에띈 정치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미리 각 단위별 최소 2-300개 사랑방 좌담회니 의정발표회식으로 조직을 점검하고 선거 때는 흐름을 놓치지 않게 분위기만 주로 살리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다. 물론 수십억의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그 실질적인 득표효과는 매우 크다.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그간 선거전에 패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거시기 후보를 비롯한 조직원, 자원 봉사자 등 전 역량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인 선거투쟁을 해도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다. 동네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를 누비며 새로운 정치, 민중의 희망을 노래하여 분위기는 무척 좋지만 선거결과는 늘 아쉬움으로 남는 것도 민중속으로 선거운동이 살아숨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마다 동. 통. 반 별로 짜여진 지배세력의 기층조직을 허무는 것은 향후 진보정당을 살리고 민중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존 정치권을 허무는 기층당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진보정당의 출로를 찾는 기층당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노총이라는 강력한 대중조직은 분단과 전근대적인 요소가 혼재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 할 수 있게 만든 진보정당운동의 수원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막연한 일반대중으로부터 조직화된 기본군중을 초점으로 의식화 조직화의 관점으로 당 사업의 활로를 찾는다면 향후 진보정당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다.

3. 울산북구 선거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총선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울산북구는 최초로 노동자 후보가 원내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로 해서 민중운동진영을 비롯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향후 진보세력의 원내 진출 교두보로 한껏 기대가 모아졌던 울산북구는 선거결과 아깝게 낙선하여 단순한 선거 평가를 넘어 민주노동당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다.

울산북구의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진보정당을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당을 깨는 패배주의로 떨어질 것인가 ?

진보정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평가기준이 정확해야 하며 그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점이다. 엄연한 사실은 울산 북구는 민주노동당 여러 지역구중 하나이지 이번 총선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중 정치세력화의 실체로서 당조직을 강화하는 기준에서 평가의 주체성과 객관성을 엄정히 세워야지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새로 움트기 시작한 진보정당운동의 싹을 밟는 어리석은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패배를 놓고 주관적인 평가를 앞세우거나 당내 문제를 당 밖으로 부풀려 운동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비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조직결정에 대한 조직사상적인 관점의 문제를 교묘하게 정파적 대립의 문제로 몰고가는 경향 또한 경계해야 한다. 비판과 상호비판을 철저하게 하되 그 기준은 조직을 중심으로 단결을 높여 내는 관점과 입장에 서야함이 당연하다.

논란의 핵심은 후보선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절차상 문제인지 아니면 후보의 자격과 역량의 문제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경선에 탈락한 후보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음으로서 계급적 단결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역량을 십분 발휘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랬으면 기존 정치판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 될 수 있었으리라는 주장은 매우 현실성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천에 탈락했다고 당을 이탈하는 기존 정치판의 치졸한 작태와 비교되는 진보정당만이 보여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선거결과가 정당운동의 절대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를 총체적인 주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해야지 낙선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이며 정치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식의 청산적이고 비조직적인 태도는 삼가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최용규 선대본은 최선을 다했는가? 계급적 입장과 당의 노선을 정확하게 알리고 투쟁했는가? 운동대오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투쟁했는가? 하는 측면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평가해야지 최용규 후보가 나왔으니 실패했고 그 책임은 최후보를 선출한 사람들이 원죄다라는 식의 다분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은 이후 운동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 후보선정의 기준은 당선가능성인가? 당의 민주적 절차인가?

북구문제의 핵심은 후보선정에 있어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물론 후보 선정에 있어 당선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당선가능성이란 상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기 마련이다. 거기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인가? 오히려 이점이 기존정당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결정을 당원들이 하며 당 중앙은 당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이 존재하는 아래로부터의 우리식 민주주의는 진보정당의 생활력을 보장하는 결정적 근거이다.

알려진 대로 최용규 후보 선출과정은 합법적이었다.

민주노동당 안팎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민주노동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최용규 북구 후보가 선출되었다. 경선 과정의 치열한 공방과 논란은 오히려 언론에 주목을 받으며 기존정당의 후보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밀실공천 일인보스정치와 차별성을 지니는 신선한 충격으로 평가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후보선정의 기준은 당선가능성. 당발전 기여도. 조직관. 대중적인 신망. 지도력. 노동계급적 선이 분명한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와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방침은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신성한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후 많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후보선출에 있어서 당선가능성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근거로 (여론조사는 상대적일뿐이다) 당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후보를 선정한다면 일인지배체제라는 기존보수정당의 보스정치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노동대중을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고자 결성한 민주노동당은 민주와 집중의 통일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조직원리를 갖고 있다. 민주를 기반한 집중이야말로 강력한 실천력을 지닌 진보정당의 생활력이며 낡은 사회를 개조할 무기이기에 반드시 지켜야할 진보정당의 근간인 것이다.

나. 과연 최용규 후보는 당선가능성이 낮은 후보였는가?

최용규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한 총화와 분석은 최용규 선대본 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과연 최용규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낮았다는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일각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지명도가 낮다는 점이며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출신이 아닌 협력업체 노조위원장출신이라는 점이다.

울산 북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대자동차 위원장 출신이 협력업체 위원장 출신보다는 선거투쟁에서 유리한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명도와 현자사람이라는 점은 선거 승리을 이루기 위한 여러 유리한 조건의 하나이지 결정적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란 후보.조직 .대중기반을 바탕으로 선거전에 임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 열정과 기세, 선거 전술, 정세변화 등 여러가지 변수와 가능성이 결합되고 혼재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입체전이며 여기서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은 주체적 측면인 후보와 조직과 대중의 혼연일체정도에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강조한 이유도 조직적 힘이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 동구의 이갑용 후보와 창원을 권영길 후보의 석패는 이를 입증한다.

지명도가 높고 현대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이라고 해서 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최용규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앞지른 것으로 나왔으며 출구조사에서도 작은 표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능성은 가능성일뿐이며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주체적인 노력과 힘의 결실인 것이다.

최용규 후보가 현대자동차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억지 주장은 하지 말자

그것은 울산북구 출신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가 토론에 나와 말하는 토박이만이 북구를 위한다는 식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분열주의이며 노동계급을 모욕하는 것이며 우리가 진보적인 사람임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동일 뿐이다.

용접공 최용규후보가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사상적으로나 풍모로 볼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인물로 볼 때도 자격을 갖춘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알고있다.

우리들의 정치는 이땅 50여년을 지배한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돈과 권력과 학벌과 연고주의 을 청산하고 민중을 하늘처럼 섬기고 땀흘려 일하는 다수의 민중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게 하는 섬김의 정치이며 참여의 정치인 것이다

한번도 당당하게 민중사상과 정견을 내놓고 말할수 없었으며 민중의 대표를 선출 할 수 없었던 착취와 억압의 땅에서 노동계급의 대표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가 없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노동계급의 한사람인 용접공 최용규 후보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정치이다.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희망 없는 민중에게 희망을 만들어내는 실천투쟁이 진보정치여야 할 것이다.

다. 최용규 후보의 패인은 무엇인가?

최용규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출된 이후 낮은 지명도와 지지도에서 출발했음에도 후보등록과정의 당내 마찰 해소 등 조직적인 사전준비와 선거등록, 자동차파업이후 실천투쟁을 거치며 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투표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참여가 낮았다는 점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울산북구지역의 지난 97년 대선 (83.1%) 참여율이나 98년 지방선거 (63.8%) 투표율에 비하여 이번 총선참여율이 60.5%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사실로부터 선거 바람보다는 조직력에 기초한 선거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최용규 후보가 크게 뒤진 용정.효문 등은 67.6%와 60.4%로서 지역구 평균참여율을 웃도는 수준인 반면에 최용규 후보가 앞지른 농소3동은 현대 자동차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도 57.0%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한나라당 후보와 겨우 500여표 차이로 낙선했다는 안타까운 결과는 부동층의 변수 보다 단결과 실질적인 득표력에 기반한 조직적인 선거가 필요했음을 말해준다.

북구 선거에 우호적인 관심을 가졌던 mbc특별취재팀이나 한겨레신문 등에서 대체로 그 상황을 놓고 경선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대자동차에 살포된 현노신 신문은 당선이후 운동대오의 단결을 이루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운동진영의 단결에 기초하지 않는 한 승리는 어렵다.

특히 기존지배구도를 깨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은 철저한 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결은 추상구호가 아니라 계급적 원칙이며 실천투쟁의 동력이다.

또한 투쟁의 역동성은 조건의 유불리함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조직자체의 힘을 어느만큼 발휘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최의 낙선은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력을 최대한 살려내지 못한 당내 기풍의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제가 ≪울산북구≪ 선거투쟁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성적인 지역감정과 금권 관권선거 등 여러 제도적인 불리한 요인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의 조직적 단결 문제가 앞으로 내부의 치열한 반성과 평가가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최용규 후보 당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투쟁했는가를 기준으로 울산지부의 조직적 총화반성을 진행하는 태도야말로 진보정치의 이름에 값하는 계급적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을 대신하면, 울산북구 선거결과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당내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민주주의의 실체는 동지적 단합과 단결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가르쳐준다.

일반당원들이 아래로부터 직접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일시적인 곡절이 있다 해서 훼손되거나 꺾여서는 안될 진보정당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라고 본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되 그 결과에 무조건 복종하는 아름다운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쇠가 달구어지듯이 더욱 강해지는 강철의 당 조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당 조직을 정비하고 이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 투쟁 속에서 민중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했으며 이를 전취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많이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선거전으로 사라지는 나약하고 전망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고 더욱 커지는 진보세력으로 거듭나야할 역사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민심을 얻는데는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울산, 창원을 비롯 대전유성이나 성남중원 등 일부지역에서의 선전은 앞으로의 승리를 자신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신속하게 당 조직을 정비하여 당내에 자리한 개인주의적이고 패배적인 분위기를 일소하고 앞으로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당 조직사업을 강화하는데 있어 첫째로 중요한 것은 민노당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일이며, 당내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높이는데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존정당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정당의 실체는 당명의 차이에서가 아닌 당의색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노동계급의 선이 선명하고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민중중심의 이념과 당 활동의 전투성은 이후 진보정당발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당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야 기존세력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할수 있으며 각계각층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운동진영의 단결의 폭을 강화할수 있다.

단지 정치경제개혁과 진보적 전망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대중앞에 기존정당의 개혁주의나 정치공방과 차별성을 명확히 할 수 없다.

현시기 민노당의 진보성은 민족적, 계급적 현실에 대한 총체적 비판과 대안제시로 표현되어야 한다. 반미자주의 정치적 기치를 뚜렷이 들고 대우자동차와 주미철투쟁 등 민중투쟁에 주동적으로 결합해나간다면, 매판적인 기존보수정치에 식상한 광범위한 각계층 민중의 신선한 공감과 지지를 진보정당 주위로 결집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내교양 특히 당원교육과 간부사업에 역점을 두고 현재 기관지를 당내기관지로 성격을 분명하게 하여 당원들 사이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일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관지 사업을 당내교양과 이후 대중사업의 무기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기관지수준을 높이는데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소식지수준을 넘어 교양과 선전의 무기로 키워내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당을 정비 하는데 있어 일반 당원과 간부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하게 하여 당사업의지휘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조직력은 사상적 힘과 그를 받쳐주는 조직체계에 있다고 말할수 있으며 현재 민노당을 건설한 당조직으로 만드는데서는 당활동의 질서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당활동이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서있지 않으면 당내 통일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일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진다.

각급단위 지휘체계를 바로세워 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높여내는 것이야말로 당을 강화하는 지름길인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당원교육과 간부 연수를 실시하여 당의 정치력을 높이는 조직적인 교양사업과 교양체계가 필요하다.

당의 역량은 정치사상적 통일에서 나오며 사상의 힘은 조직적으로 담보될 때 발휘된다

현시기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논란이 많으나 모든 논의와 실천은 당을 정비강화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당운동이 살아날수 있다.

원내진출의 실패라는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중정치를 갈망하는 노동대중을 비롯한 민중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안고 당조직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자.

나) 선거투쟁 속에서 만났던 많은 지지자들을 당의 조직역량으로 만들어야한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은 기존정당 지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 지지자들은 상당 범위에서 선거라는 정치사상투쟁의 장에서 기존구도를 반대한 진보적인 사람들로서 우리의 주력이자 원군임을 명심해야한다.

우리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과 심정으론 민노당을 지지하나 당선가능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당선가능성 있는 차선의 후보에게 몰표를 줬던 사람들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실천이 선거 이후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군중사업중 하나이다.

민노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미 기존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우리를 지원할 것이며 다음 선거전에서도 다시 만날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입증되었다. 우리를 지지한 민중들은 우리가 민심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영원히 우리편이다.

여론조사 명단을 확보하든 어쩌든 다종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지한 유권자들을 만나고 이후 조직적 지지자로, 당의 군중적 토대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원화≫하는 사업이며 ≪당원배가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하여 일반대중의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민중정치활동의 새장을 여는데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당원배가운동을 군중운동으로 전개하는 관점을 철저하게 가져야 한다.

대중운동을 당차원의 운동으로 발전시켜 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은 심정적 지지자와 후원자들을 당정치활동의 주체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정당운동이 지니는 생활력이 있

다.

기존 대중조직과 정당운동의 차이가 바로 이점이다.

선거라는 정치투쟁 속에서 맺어진 정치적 관계를 조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위력한 결속체가 바로 진보정당이다.

취미나 기호, 생존권적 이해나 요구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만난 일반대중을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운동이 바로 당원배가 운동이다.

당원배가 운동은 목표와 과제가 단순명료하므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알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중운동으로서 발전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지방 보궐선거등 앞으로 놓여진 선거일정은 민중정치활동의 새장을 여는 활력소가 될것이 분명하다.

≪선거전의 성과를 당원배가운동으로!≫

이것이 현 시기 민노당에 요구되는 대중정치활동의 중심구호이다.

다) 노동계급의 투쟁을 비롯한 각계민중들의 투쟁에 적극나서야 한다.

기존 보수정당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정치를 하며 그들의 밑천은 돈과 권력의 크기에 달렸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세하고 이권챙기고 군림하는 기존정치는 민중하고는 인연이 없는 그들만의 정치이며 통치인 것이다.

진보정당은 지배세력의 통치 기술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치를 하는 전문적인 정치집단이다.

저들의 정치가 돈과 군림의 정치라면 우리의 정치는 사랑과 섬김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진보정당의 생명은 민중의 지지와 엄호에 달려있다.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 살 것이요, 외면당하면 죽은 목숨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중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민중속으로 들어가야 함은 당연하다.

기존 정당들의 화려한 언어와 제스처에 실망하고 절망한 민중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민중속에서 살아숨쉬는 당조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화끈한 실천이 중요한 법이다

이번에 임금인상을 제기한 노동대중의 요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 민중의 생존권요구를 가장 앞장서서 실현해가는 민노당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

또한 민중생존권투쟁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가 집중된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실천적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중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통일문제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과업이며 2000년대 최대 숙원사업이다.

민주노동당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세와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찌든 기존정치권과 확실하게 다른 실천력을 보여 줘야한다.

분단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냉전의 산물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세계적 범위에서 냉전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반도통일문제는 민족의 전쟁과 분열로부터 지난시기 엄중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이룰 때 진정한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그간 통일운동의 산경험을 교훈삼아 위대한 자주역량을 한껏 시위할 수 있는 민족대단결운동에 민노당이 적극나서야 할것이다.

남북당국자간의 통일논의와 별도로 밑으로부터의 자주적인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특히 작년 통일운동의 성과였던 남북 노동자 토론회와 축구대회에 적극 결합, 지원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 제정당 단체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가칭 ≪남북 제정당 단체 민족연석회의≫를 북에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주동성을 발휘하여 각계 민중들이 통일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당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

라) 당활동의 정형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하며 민중연대전선에 적극나서야한다.

민노당이 진정으로 집권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당기초활동을 잘하는 것으로부터 당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일상적인 당활동의 모범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고도의 정치예술이며 조직원리이기 때문에 쉽게 터득되는것은 아니지만 그리 어려울바도 아니다.

민노당의 주요 간부들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에 그간사업의 정형을 잘 검토하고 연구하면 우리실정에 맞는 당정치활동의 정형를 창조해내리라 생각된다.

일선지구당활동의 모범을 만들기위해선 일반 당원들의 일상활동에 대한 입체적 이해와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당사업은 본질은 사람과의 사업이기에 당활동 기초를 사람관계 자체를 발전시키는데 두고 주된 관심을 쏟는다면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실무주의 경향을 일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업에서 실무주의와 형식주의는 진보정당의 생활력을 떨어뜨리는 독소로서 동지들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부풀리게 만든다.

당원들 사이의 이러저러한 정치적 차이나 갈등의 역사성을 녹여내는 당차원의 결속과 단결을 이루기 위해 끈기있는 이해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노당 활동을 사상교양을 바탕으로 동지상호간 결속과 이해를 높이고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일상활동을 전개한다면 당은 활력있게 될 것이다.

지구당분위기가 생기있고 활발하면 일반대중들이 모여드는것은 시간 문제다.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이 동지적인 분위기와 서로 협력하는 정서가 살아나면 나비가 꽃을 향하듯 대중들이 우리를 향할 것이다.

당원들사이에 형제애적인 사랑과 단결을 기초로 대중정치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

당내 단결은 사상적 단결을 강화해야 가능하다.

개인주의 와 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동지애를 바탕으로 집단주의를 높이고 살리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정기적인 교양과 더불어 단합대회를 잘 조직하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상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당의 기풍을 활기차고 집단적인 분위기로 만드는것과 함께 지역연대기구를 만드는데도 주요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우선 기층대중조직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 각종 다종다양한 단체와 공동의 실천과 단결을 모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한다.

특히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과 청년학생 등 민중운동의 주력을 우리 당에 결집시키는 것은 진보정당의 첫걸음을 떼는 현시기에 상층만이 아니라 기층에서도 힘을 쏟아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주력대중을 기반으로 튼튼하게 서지 못하면 민중운동 내에서 진보정당운동이 견지해야할 정치적 구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개 정파의 지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진보정당이 가야할길은 험하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각계각층과 연대와 단결의 운동을 잘하는 것은 당운동을 활성화하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며 당자체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지구당을 비롯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적범위의 연대 통일전선을 만드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2000년을 진보정당운동의 원년으로 만들자



고난에 찬 진보정당운동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진보정당운동을 전개하자. 이번 총선에서 아쉽게도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진보정당운동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득표에서는 실패했지만 정치적 사상전에서는 승리했다. 낙선낙천운동에서 드러나듯 민중의 요구와 지향은 몇몇 정치인의 퇴출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해온 기존세력을 송두리째 뽑아내길 갈망하고 있다.

낙선낙천운동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민중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자하는 바램이 있는 한 진보정당운동은 계속된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민심은 진보정당을 해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화 발전하라는 것임을 직시하자.

이번 총선이 주는 최대의 교훈은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정치적.조직적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조직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민심이 새로운 정치를 원해도 민중의 염원은 한갓 꿈에 머문다는 것을 선거결과는 말해준다.

2000년을 진보정당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당을 강화하고 당 사업을 개척하는데 역사적 사명 의식과 책임감을 갖자.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 비록 소수의 운동으로 시작할지라도 민중의 지향과 염원이 우리 길을 비추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압도적 다수의 운동으로 더욱 커지고 자라나 이땅 민중들이 역사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날을 반드시 안아오고 말 것이다.



2000/04/26

남북정당사회단체 민족연석회의 개최 주장

민주노동당,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2000년 5월 25일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 두 정상에 중요제안

민주노동당은 오늘(25일)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군비축소, 이산가족왕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러 조치들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측방문을 요청할 예정이며 평화통일운동이 정부나 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오는 8월 15일경 ≪(가칭)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정당사회단체 민족연석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박순경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고문, 이수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의장 등 통일운동 원로들도 참석했다.

2000/ 5/25



매향리폭격장폐쇄, SOFA전면개정촉구 민주노동당 투쟁선포식

23일(일) 낮 1시 용산 미8군사령부 앞
당원 약 800여명 참가

1. 민주노동당은 23일 낮 1시 용산 미8군사령부(국방부 맞은편) 정문 앞에서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각종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2. 집회는 권영길 당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의 연대사, 정치연설과 더불어 문화공연의 순으로 진행되며, 집회 마지막에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집회에는 서울.수도권의 당원들과 학생당원들을 포함하여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3. 최근 독극물 방류사태에서 보듯이 주한미군 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단지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를 바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제대로 개정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없이 우리 국민의 높아지는 반미감정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2000/ 7/21





민주노동당 민생살리기 10만km 대장정에 나서며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한 경제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지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민생은 사실상 파탄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20대 80의 사회≫를 넘어 ≪10대 90의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파탄속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 각계 각층의 요구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만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은 3당공조라는 미명 아래 1천만원 짜리 내기골프를 버젓이 치고, 호화판 술잔치를 벌임으로써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치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은 또 어떻습니까?

그간 돈세탁방지법, 국가보안법 같은 각종 개혁법안의 처리에는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고,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과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은 커녕 정치공세로 매도하면서 때만 되면 각종 ≪설≫과 ≪풍≫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벌규제 완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 여야 정당이 주축이 된 국회는 생산적인 정치보다는 차기 대권을 향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예 실종돼 버렸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상황은 한마디로 ≪경제실패.민생파탄.정치실종≫의 정국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노동당은 작금의 현실을 중대한 위기적 상황이라 규정하고, ≪경제실패.민생파탄.정치실종≫의 정국에서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보수정치권을 압박하는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이 국민운동은 5월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까지 이어지는 3개월여에 걸친 ≪민생살리기 10만km 대장정≫입니다. ≪대장정≫은 부산경남을 시발로 대구경북－대전충청－경기수도권－광주전라－강원－서울 입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대장정≫과정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일반 시민과 상인, 중소기업인, 정규 및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주부, 청년학생 등 여러 계층의 국민들을 거리연설회, 시국강연회, 간담회, 반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리해고.부자중심.해외매각 위주의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우리의 대안인 ≪노동자, 서민 중심의 진보적 구조개혁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현재의 보수 여야 정치권은 말로는 국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가진자들을 위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는 세력은 재벌과 가진 자들에게 발목잡히지 않은 민주노동당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민생살리기 10만 km 대장정≫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생생한 요구를 결집하여 기성정치권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면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노동자와 서민, 땀흘려 일하는 국민의 진정한 벗≫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민생살리기 10만 km 대장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21일
민주노동당

정부는 방북단 구속방침을 철회하고 통일방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지금 이 땅에는 한판의 냉전광란극이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교류와 협력을 말하고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면서도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수구세력은 ≪2001통일대축전≫에서 벌어진 몇가지 일을 빌미로 온 나라를 마녀사냥식으로 난도질하고 있다. 현 정권 역시 이들 수구세력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 교묘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방북단 인사들을 구속하려는 등 이 소극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 우리 당은 이번 사태를 맞이하는 김대중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력통일을 상징하는 기념물도 아니고 통일방안의 하나인 연방제가 포함된 기념탑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관≫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정권이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북단의 3대헌장탑 앞 행사 참관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이는 지난해 6.15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인정했던 대통령과 현 정권이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결정을 내렸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교수 개인이 북한 지도자의 생가를 방문해 남긴 몇 마디 문구를 침소봉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것 역시 얼토당토 않은 짓이다.

아울러 우리 당은 이번 사태가 과연 통일의 큰 길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동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행사에 단순히 ≪참관≫하고 지도자의 생가에서 방명록을 쓴 것을 가지고 마녀사냥식의 탄압을 해대는 정권과 어떻게 통일을 논의하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김대중 정권이 수많은 실정 속에서도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치적인 통일정책에서의 성과가 이번 방북단 구속을 계기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음을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방북단에 대한 구속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태가 초래된 배경에는 냉전수구세력들의 무차별적인 반북, 이적공세와 함께 원칙없고 정략적인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김대중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연방제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논의를 제안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가 통일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2분법으로 대립하고 있고,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목도했다.

제대로 된 통일방안도 없이 오로지 국민들의 막연한 대북경계심리에 편승해 ≪승공통일.북진통일≫식의 ≪흡수통일≫만을 외치는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통일방안의 하나인 연방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무차별적인 반북.이적공세를 펴는 것은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를 두 갈래로 분열시키는 것이고 통일에 크나큰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방제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연방제를 포함한 통일방안의 가감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남북관계.통일문제 전문가들의 대토론회를 비롯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남북간의 조건없는 평화군축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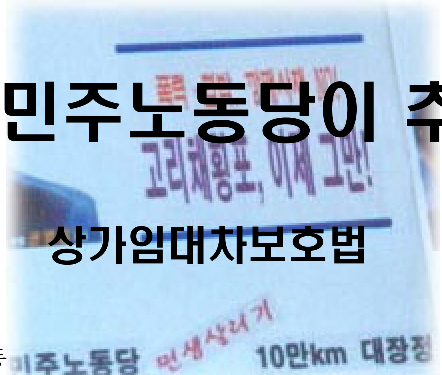
이제는 말로만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병력과 무기의 감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남북간에 평화군축협상이 지체된다면 우리측에서 먼저 군병력 감축과 현행 예비군제 폐지, 재래식 무기 감축 및 신무기 도입 백지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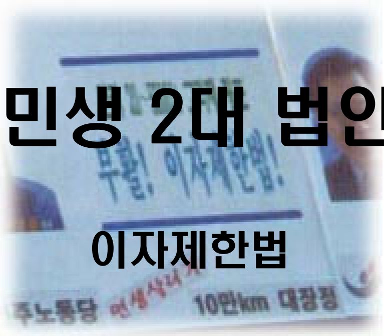
우리는 이상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다시 한번 방북단 연행자의 즉각적인 석방과 구속방침 철회를 촉구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냉전수구세력의 광란에 춤추며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진보적인 통일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방북단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자유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사법처리≫라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현 정권이 수구세력의 공세를 비껴가기 위해 반통일.반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방북단 연행자의 석방을 촉구하며, 연방제를 포함한 통일방안에 대한 전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거듭 제안하는 바이다.

2001년 8월 23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민생 2대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 활동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참여연대 등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입법청원, 공청회, 여야의원 정부간담회, 전국상인대회 개최, 전화상담, 현장방문상담, 피해상인생존권 사수 등 피해상인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진행해왔다.
□임차상인 400만명으로추산
□피해 상담접수(임대차상담실 02-761-1333) 건: 총 1만여 건(대형상가포함)
□주요 대형상가: 명동 코스모스백화점, 거평마트, 거평프레야, 밀레오레, 두산타워, 메사, 굿엔굿, 서울온천, 한양프라자, 분당 테마폴리스, 분당종합시장, 신양축산, 부천 농수산물도매시장, 엠폴리스 20여 상가
□서명운동: 총 3만명

□정치권 반응
□여 천정배의원, 야 이재오의원 등 중심으로 의원입법 추진
□송영길, 이종걸, 임종석, 이재정, 김원웅의원 등 개혁입법에 앞장서는 의원들 2-30여명들이 모여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민생개혁입법으로 운동본부측 법안을 거의 원안그대로 수용해 적극적으로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옴.(2월 5일 11시 김원웅의원실에서 미팅)

□임시국회시 계획
□운동본부, 범국민운동단체로 확대전환: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국지하도 상가연합회, 용산전자상가연합회(6천점포라고함) 등등 대규모 임차상인단체 및 직능단체 가입의사 밝혀옴
□민생개혁입법 추진하는 여야 의원들과 공동기자회견(2월 9일~15일)
□입법 촉구 전국 2차 상인대회 개최(2월 15일 오후 2시 국회앞)
□지역구 의원 법추진 서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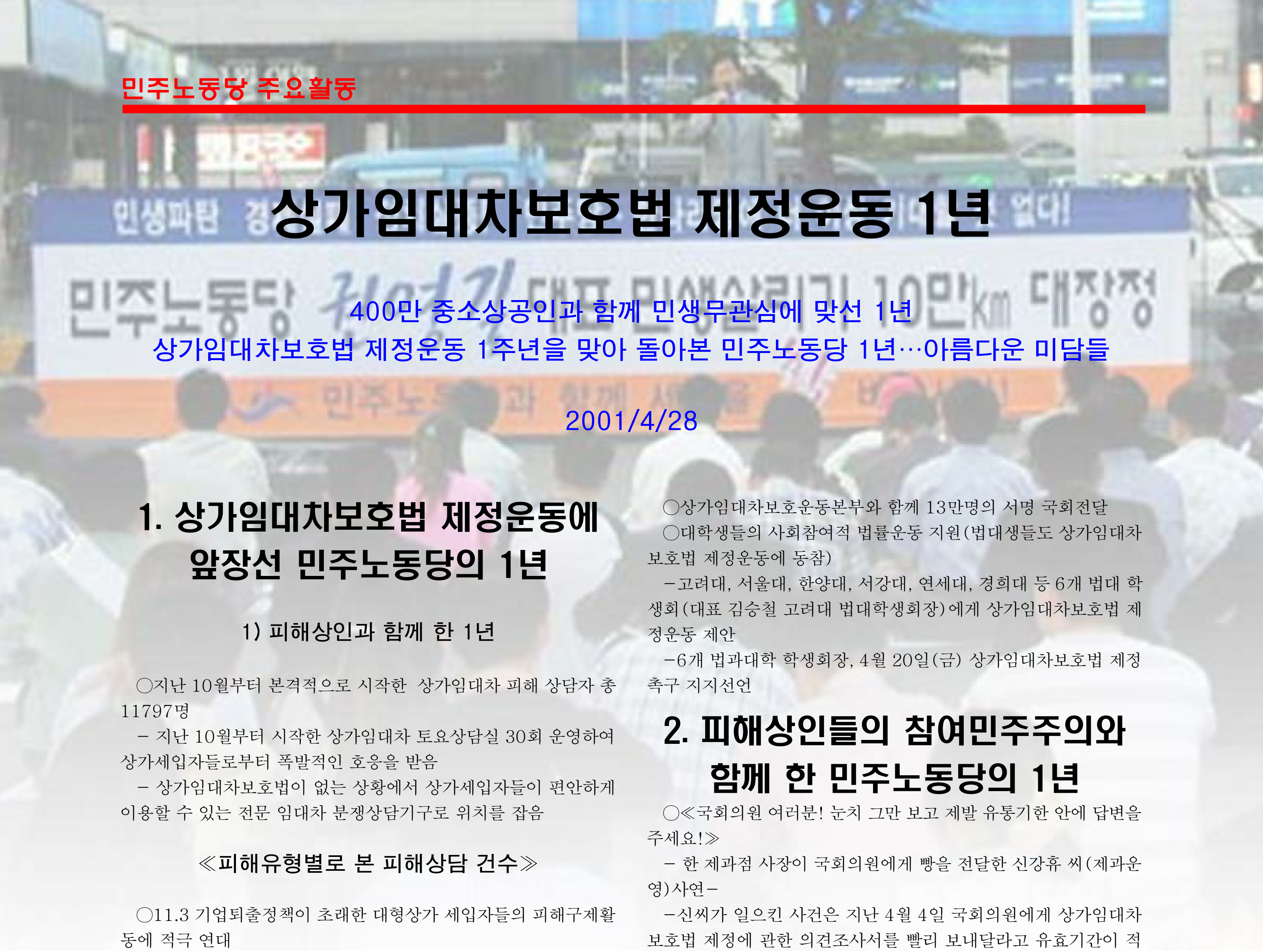


이자제한법

□고금리(고리대)의 폐해가 사채의 영역에서부터 카드연체의 영역까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심지어 사기와 협박.폭행.납치.유괴.강간.인신매매.자살.살인 등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고금리(고리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인 법정최고금리제(20%)를 부활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를 도모함.
□피해유형
□불법 유사금융기관의 고금리 사기사건
연 24-40% 상식밖 고금리 제시.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총 331건의 피해접수(www. fss.or.kr 금감원 보도자료 2001.1.27)
□신용불량자 급증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 수는 지난 10월말 현재 238만명으로 지난해말(225만여명)보다 13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불량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10명 당 1명 꼴인 셈이다.(2000.12.08 조선일보)
□악덕 사채업자 ≪무법천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8일부터 9. 26.까지 50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 대출시 대출금의 20%인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80만원을 대출해 준 후 10일마다 원금의 10%인 10만원씩, 월 30%의 고리로 변제케 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등 서민들을 괴롭혀 폭리를 취해온 사채업자 및 주변 폭력배등 163명을 검거하여 109명을 구속조치 하였다(2000.09.29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신용카드 금리 너무 높다(고금리 구조의 재생산)
카드빚 증가로 가계 무더기 파산 우려됨.
카드금리 변동추이(2000년 9월중 은행가계대출 금리 연 9.76%대비)
(단위:%)
자료: 민주노동당, 한국은행 통계(2001. 1.27) 재구성

□임시국회시 계획
민주노동당은 현재 이자제한법(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워크샵(2월 중순)을 가진후 입법추진 운동을 벌일 계획임. 특히 2월 임시국회 때에는 민생개혁입법의원들이 민생개혁법안에 이자제한법을 포함해서 의원입법할 수 있도록 공동추진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담당: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위원장(761-1333)/참고 대변인실(www.kdlp.org)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1년

400만 중소상공인과 함께 민생무관심에 맞선 1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1주년을 맞아 돌아본 민주노동당 1년…아름다운 미담들

2001/4/28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에 앞장선 민주노동당의 1년

1) 피해상인과 함께 한 1년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가임대차 피해 상담자 총 11797명

–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상가임대차 토요상담실 30회 운영하여 상가세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가세입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임대차 분쟁상담기구로 위치를 잡음

≪피해유형별로 본 피해상담 건수≫

○11.3 기업퇴출정책이 초래한 대형상가 세입자들의 피해구제활동에 적극 연대

–월 평균 5회 피해상가 방문 및 상담, 연대집회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및 피해구제활동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비스 자영업자 지지도 8.5%, 자민련 지지도 5.2% 상회

– 지난 3월 월간 신동아가 (주)오픈 소사이어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이 4.7%지지로 4.1%지지의 자민련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남(95%신뢰수준, 3.32%신뢰구간. 표 참조)

–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정쟁≫정당이 아닌 ≪정책≫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노동자와 서민 편에 선 실천을 경주함으로써 보수지역주의정당들을 압도하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할 것임

2) 낙선운동식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전개, 민생무관심 국회의원의 명단공개 통해 무기력 정치의 실체를 밝힘

○지난 2월 20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와 함께 273명의원 전원에게 찬/반/제안 의견조사서 발송, 수차례 회신호소 및 피해상인과 함께 전화로비 진행

– 현재 133명 회신, 찬성 133로 결과 나타나, 140명 의원 미회신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권력쟁탈에만 몰두하고 민생에는 무관심함을 폭로

–대선주자인 민주당 이인제의원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의견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생정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외면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3) 발로 뛰어 받아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13만명 서명과 각 단체와 연대활동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와 함께 13만명의 서명 국회전달

○대학생들의 사회참여적 법률운동 지원(법대생들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에 동참)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서강대, 연세대, 경희대 등 6개 법대 학생회(대표 김승철 고려대 법대학생회장)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제안

–6개 법과대학 학생회장, 4월 20일(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지지선언

2. 피해상인들의 참여민주주의와 함께 한 민주노동당의 1년

○≪국회의원 여러분! 눈치 그만 보고 제발 유통기한 안에 답변을 주세요!≫

– 한 제과점 사장이 국회의원에게 빵을 전달한 신강휴 씨(제과운영)사연–

–신씨가 일으킨 사건은 지난 4월 4일 국회의원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조사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유효기간이 적힌 빵을 우표대신 붙이고 보냄

○≪악덕 공무원 건물주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복 입은 부부상인≫

–동사무소계장으로 있는 건물주는 각종 탈세와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악덕건물주임

–양승진 씨는 1억 5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하고 피자점을 운영하던 중 최근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인 임대계약해지통고를 받고 이에 맞서 상복을 입고 건물주가 근무하는 동사무소에 출근하고 있음

3.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전문가들의 숨은 노력

○변호사 3인, 법학자 3인, 전문 정책의원 1인의 열정어린 노력

– 이덕우.황인상.김남근 변호사들이 상가임대차보호 토요법률상담실에 무료 상담지원

– 윤기택(청주대 법학).김재환(고려대 법학).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와 송태경 정책위원 등이 상가임대차관련 외국사례 및 법률안 작성을 통해 적극 지원함

4.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향한 1년 활동일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태동기

–93년 10월 23일: 청주, 백상기 선생님(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고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서명(2.109명)운동 시작

–93년 12월 17일: 14대 국회에 백상기 선생님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소개의원 정기호)

-94년 8월 : 경제민주모임(대표 이선근)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촉구
-97년 1월 26일: 백상기 선생님, 점포임대차포호법 입법청원(소개의원 이재오)
-97년 12월: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통령후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공약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본격 추진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운동 정책기획 및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 초안마련(송태경 당 정책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위원회 구성
-2000년 4월: 민주노동당 총선핵심 공약,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부터 우수공약 선정
-2000년 4월~7월: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서명운동(1만명), 상담활동
-2000년 7월 20일: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 제안(참여연대 등 제단체에 제안)
-2000년 7월 26일: 상가임대차 보호법 추진 간담회
-2000년 8월 17~24일: 법안 논의과정을 거쳐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등의 공동법안 확정
-2000년 9월 5일: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1차 실무회의
-2000년 9월 26일: 시민단체와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발족(집행위원장 이선근)
-2000년 10월 1일 : 피해상인 상담전화 폭주 (하루 500여건)로 중앙당 업무마비
-2000년 10월 7일 :상가임대차 보호 토요 상담실 시작

□2000년 10월 10일 400만 중소상공인의 염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
-2000년 10월 3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 1차 대회(상인 20여명 참여)
-2000년 11월 7일: 세입자권리찾기 상인모임 결성식(민주노동당사)
-2000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 공청회(의원회관)

□2000년 12월 5일 한국 최초 전국임차상인대회 개최, 이제 상인이 나선다.
-12월 5일(수): 전국 임차상인 대회
400명 임차상인참여/민주노동당 주최/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주관
-12월 29일(목): 명동 코스모스 5명의 상가임차인 10일째 점거농성 중
-12월 29일(목): 명동코스모스 상가임차인 결의대회
-명동 코스모스 임차상인 50여명참가, 명동 농성자 인권유린중단, 보장금보장 등

□2001년 민주노동당 낙선운동식 상가임대차제정운동 추진
-2001년 1월 5일(금): 명동코스모스 상가임차인 2차 결의대회
-명동코스모스 임차상인 50여명 참가
-2001년 2월 9일(금):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청와대 면담, 민주당 관계자 면담
-2001년 2월 15일(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상인대회 개최
- 2001년 3월 7일(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반대하는 전국은행연합회앞 집회 및 공개질의서 전달
- 2001년 3월 23일(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서 발송 및 전화로비 시작
- 2001년 3월 29일(목) : 상가임대차제정 촉구 13만명 서명제출
- 2001년 3월 30일(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는 성남분당을 임태희 의원 규탄집회
- ≪민주노동당, 낙선운동식 입법청원운동≫ 연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방영, 한겨레 보도
- 2001년 4월 4일(수) : 무응답 의원에게 독촉장 발송(우표대신 빵을 붙인 독촉장 전달)
- ≪민주노동당, 유통기한 안에 답해달라≫
- 2001년 4월 12일(수) : 제3차 전국상인임차인대회 국회앞 국민은행 광장, 무응답 무소신 눈치의원 명단공개
- 2001년 4월 19일(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전국은행연합회 규탄집회
- 2001년 4월 20일(금) : 서울지역 6개 법과대학 학생회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담당: 임동현 정책부장(761-1333/016-306-2068)



민족민주세력 총단결로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정성희(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전국연합 기관지 ≪민≫지 8월호에 게재된 글

평화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미국 부시정권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기어코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세계적인 군비경쟁, 평화파괴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미사일방어체제를 미국이 고집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통해 미국 군수자본의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한편,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를 미리 제압, 21세기에도 세계 패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처럼 분명함에도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가 이북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심지어 동해 앞바다에 첨단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하려 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과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미국이, 또 다시 전세계를 겨냥한 엄청난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하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이북의 미사일을 걸고 넘어지고 있으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얼어붙어 있다. 최근 미국은 이북과의 대화 재개를 제안해놓고도 재래식무기 감축문제 등 일방적 의제를 고집하여 사실상 북미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발전하던 남북관계도 주춤거리고 있다. 당국자회담, 이산가족 교환방문, 경의선 복원 등이 막혀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남북관계가 이같은 지경에 이르기까지에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부화뇌동하여 남북 화해와 단합에 사사건건 찬물을 끼얹은 국내 반통일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더불어 6.15선언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라는 약속을 위배하고 한미공조를 내세워 미국의 주문에 따라 움직인 현정부도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6.15 이후에도 여전히 이북을 ≪주적≫으로 삼고 미국의 값비싼 무기를 사들이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해온 당국의 반통일적 행위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1년은 우리민족에게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막지 못하고 민족공조보다 외세공조를 앞세우는 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또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속에 급속히 확산시키고 통일운동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내외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 책동을 분쇄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후 1년은, 줏대를 잃고 외세에 추종하는 여야 사대매국세력에게 민족의 운명을 언제까지 맡겨둘 것인지, 하루빨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분쇄와 자주적 민주정부

한편,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와 이에 호응하는 현정부의 구조조정 정책는 경제예속과 민생파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미국의 공황 조짐과 그 여파가 예속적 한국경제에 제2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탈출구를 오직 더 불리한 조건의 외자유치.해외매각, 더 가혹한 구조조정에서 찾고 있다. IMF신탁통치 이후 3년간 유입된 외자총액이 무려 620억 달러인데, 이는 1962년~1997년 35년간의 외자총액 246억달러의 2.5배나 되며, 외국자본이 보유

한 주식총액은 시가총액 30%를 차지, 증권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시중은행 16개중 외국인 지분 20%가 넘는 은행이 7개, 외국인 지분 30%이상 기업이 국내 상장기업의 60.7%인 47개이며, 50%이상 기업도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10여개에 달한다. 대형건물과 토지들도 속속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4월말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땅이 여의도의 39배나 된다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지금 100만 실업자, 700만 비정규직이라는 전대미문의 고용대란이 야기된 가운데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현정부 출범 이후 무려 576명의 노동자(올해 들어 137명, 6월에만 47명)가 구속되었다.

또 ≪개방농정≫으로 농업과 농민들이 파산상태에 빠져 농가부채가 92년 568만 3천원에서 98년말 1,701만 1천원, 99년말 1,753만 5천원으로 늘어났고 2000년 7월 현재 농가부채 총액은 무려 39조 7,565억원이나 된다. 농촌에는 살 길이 막막해진 농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 빈집이 수두룩하고 농촌인구도 약400만으로 줄었다. 어민들의 생계도 마찬가지다. 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좁아진 어로수역과 나빠진 어로조건 때문에 영세어민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되었고, 우리민중이 왜 외국자본의 노예로 전락하였는가. 한마디로 미국의 지배간섭,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경제침탈과 현정부의 사대매국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외국자본에게는 국가 기간산업, 알짜기업들을 헐값에 넘기고 노동자에게는 대량정리해고에 구속수배까지 감행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일 수 있는가. 오늘의 절망적인 경제를 살리는 길은 오직 외세를 배격하고 자립의 길을 택하는 것뿐이다. 이 일을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할 수 있는가. 오직 민족민주세력 밖에 없다. 민족민주세력이 앞장서서 하루빨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그 힘으로 경제대개혁을 통한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고 외국자본을 조절, 통제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남협력 등 새로운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금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민중생존권쟁취투쟁을 반미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힘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2~3년 정세와 민족민주세력

향후 2~3년의 정세는 한국사회의 전반적 재편기라고 할 수 있다.

분열과 갈등을 추구하는 미국 및 그 앞잡이들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민족간의 대격돌을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을 한편으로, 더 이상의 예속과 수탈, 착취를 거부하는 이 땅의 근로민중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치열한 투쟁이 예상되며, 3김 이후 보수정치권 내부의 새로운 권력재편과 민족민주세력의 강력한 진보정치세력화가 맞물리는 총체적인 정치투쟁의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년의 10년보다 향후 2~3년이 오히려 더 소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2002년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내년 지방선거도 대선국면에서 치뤄지는 대선 전초전이다. 북미관계.남북관계와 경제상황이 대선국면에 민감하게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민중의 힘이다. 민족민주세력이 통일단결하여 민중의 힘을 얼마나 발동하느냐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의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축성하는가를 결정할 것이다.

정세는 결코 민족민주세력에게 불리하지 않다. 지금 일시적으로 경색된 북미관계는 늦어도 2003년까지는 양단간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도 결국 7천만 겨레와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작용에 의해 포용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낙관할 수 있다.

왜냐하면, 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서에서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에 2003년까지 총200만kw 경수로발전소 제공 및 에너지 손실 보상 등을 약속했는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지금도 양쪽 모두 이 합의의 이행을 거듭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일 이 합의를 파기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면 이는 이북과의 전쟁을 각오하거나 이북의 핵.미사일을 방치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93~94년의 경험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이 지금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첫째, MD체제 구축작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이북 미사일문제에 관한 협상을 전개하기가 어렵다, 둘째, 최근 주한미군기지 통폐합계획에서 보듯이 MD체제 구축 대신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는 계획아래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팔고 나아가 이북의 재래식 무기감축까지 유도하며, 셋째,경수로 건설 불이행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부담도 덜어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북미관계의 진전이 대선 전이냐, 이후냐는 대선국면에서 각 정치세력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족민주세력은 이와는 상관없이 대선국면을 안팎의 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고립시키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6.15약속을 잘 이행치 않는 햇볕론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6.15선언 이행을 대세로 만들고 자주통일세력의 힘을 비약적으로 키워야 한다. 동시에 민심이반과 권력말기의 이완된 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양심적 지식인 등 각계 민중들의 신자유주의정책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광범위한 반미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진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그 실현을 위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널리 선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과 자주통일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이라는 하나의 뿌리속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다. 따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양대투쟁을 올바로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통일정세 발전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세력, 신자유주의정책을 집행하고 외세의존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세력, 신자유주의에 찬성하고 반북대결에 매달리는 수구세력으로 국내정치지형을 점차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미국반대! 보수정치 심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평화위협, 내정간섭, 경제침략 미국 반대!, 사대매국 민생파탄 민주실종 보수정치 심판!, 민족자주 민생안정 민주정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6.15실현 연방통일!)을 내걸고 향후 2~3년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발전시키면서 이를 거점으로 하여 제 정당, 정파,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을 총망라하는 위력적인 민족민주연합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정치군사적 간섭과 경제적 지배, 사대매국적 보수정당들의 반민족적 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이 땅의 모든 민중을 힘있게 묶어세워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족민주세력은 외세에 추종하는 극소수 분열주의자들을 제외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평화통일세력을 규합, 강력하고 위력적인 조국통일 범민족전선도 구축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통해 97년 대선시 국민승리21의 성과를 토대로 2000년 1월 30일 창당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다. 4.13총선시 창당 초기의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21개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켜 평균 13.1%를 득표하고 울산, 창원지역에는 당선권에 육박함으로써 다수 민중들에게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총선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 매월 1회 미군부대앞 집회, 이북바로알기 영화상영 등의 자주.통일투쟁, 그리고 부패방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의 민생.개혁 입법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헌재 승소 판결에 따른 1인 2표 정당비례대표제와 기탁금 철폐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대표가 민중속으로 들어가 당 정책을 알리는 민생살리기 10만km대장정을 전개하였다. 또 민주노동당은 현재 약1만 6천명, 40여개 지역지부를 두고 있으며, 2기 당대회의 결의에 따라 8월말까지 8개 광역시도지부와 1차로 70여개 지구당을 건설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3만 당원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지난 4월 신동아 여론조사에 의하면 4.7% 지지율을 기록하여 자민련(4.1%)을 제치고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민중의 당(30개 지구당 1천 당원)이나, 한겨레민주당(60개 지구당, 2천당원), 민중당(54개 지구당, 2천 당원)과는 확연히 다른 진보정당이다. 우선 몇몇 명망가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노동자 등 기층민중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정당이다. 조직력이나 당원과 당비에 의한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이전의 진보정당보다 진일보하였다. 또한 과거 진보정당들이 통일전선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투쟁과 선거를 결합시키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진보정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강화하면 위력적인 민족민주연합전선체 건설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등 계급계층의 대중조직들은 조직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계급계층의 문제가 일차적이기 때문에 전선운동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가기 어렵다. 현재 민중연대, 통일연대가 원만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보정당이 아직 취약하고 각계 민중속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진보정당의 강화가 참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역사적 의의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직적으로 결의한 민주노총의 다수 조합원을 당원으로 가입시키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벗인 농민과 다수의 청년, 학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계, 의료계, 문예계, 법조계, 중소상공인 등의 각계 진보세력을 폭넓게 끌어당기지 못해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다.

그리고 정치적 정책적 능력이 부족하고 협소한 이미지를 줌으로써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진보/보수의 구도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우리사회의 성격이나 보나 현단계 사회변혁의 임무로 볼 때, 사회 제 계급적 관계를 고려하여 노동자계급정당이나 노농동맹당이 아니라 노동자가 주도하고 농민, 빈민, 청년학생과 함께 중심을 형성하며 양심적 지식인, 진보적인 중소상공인 등 각계 진보세력을 광범위하게 망라한 통일전선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 또 사회주의이념정당이 아니라 민족민주이념정당이며, 소수정예의 전위

정당이 아니라 광범한 민중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한계도 민족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조직강화와 재창당 사업에 박차를 가할 때 빠른 속도로 극복될 것이다.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을 위하여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노동자계급정당, 비제도적 투쟁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정당은 단순히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취와 억압, 차별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정당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분단 55년동안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 젖어있으며, 민족자주권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도 해결하지 못한 지금의 한국상황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여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으며, 또 살아남기나 하겠는가. 과거 사노맹이나 한국노동당도 비슷한 발상이었지만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상기해보아야 한다. 더구나 비제도적 투쟁정당이라는데, 선거공간은 투쟁의 장이 아니란 말인가. 초기에 민주노동당에 대해 개량주의, 선거주의, 의회주의라고 비난한 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비난이 거의 없어졌다. 왜냐하면 실천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는 민중속에서 민중과 함께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선거 시기에는 그 공간을 활용해 보다 많은 민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의회단상에서는 과학적인 머리와 뜨거운 심장으로 민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제도적 노동자계급정당을 할 때가 아니라 민족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합법적 진보정당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때이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반합법 운동단체와 달리 다양한 의식의 일반민중들도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며, 시군구, 동별, 사업장까지 기초단위를 둘 수 있어 대중속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합(전선)조직과는 다르게 단일조직 형태의 당조직이기 때문에 발빠른 정치정책적 투쟁적 대응을 전개할 수 있다. 합법정당이 갖는 모든 장점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정치투쟁과 지역주민사업과 선거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기층 민중의 대중조직을 지지, 지원하고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진정으로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된 사람들은 우선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화하면서 그 맹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여야 보수정당내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모인 ≪화합과 전진을 위한 모임≫이 제3당을 만들거나 ≪노무현 대망론≫에 기대를 걸고 있는 무리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기성 정치인은 이미 현실에 영합하는 보수정당의 정치인일뿐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흡인력 때문에 제3당을 창당하기도 어렵다. 설령 창당하더라도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에 기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지금, 이들 정치인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용기있게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고 현정권으로부터 무차별 폭행과 구속수배되고 있을 때,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노무현 대망론≫도 민족과 민중의 이해와는 별 인연이 없다. 30년 야당생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사형선고까지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사대매국적 반민중적 길을 걷고 있는데, 노무현 고문이 무슨 철학과 힘으로 김대중의 한계를 뛰어 넘겠는가. 노무현 고문도 당내 경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세력과 손잡을 게 뻔하다.

우리사회의 진보와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 모여야 한다. 농민들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김대중 후보를 밀어줬음에도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이제 진보정당을 통해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 누구도 농민의 내일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오직 자기자신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다. 전농의 깨어있는 농민들이 대거 진보정당에 결합하여 민주노총의 노동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청년, 학생들도 그동안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에서 앞장서 투쟁했으나, 그 성과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힘의 결집으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00만 학도가 조국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일념으로 당적 운동에 참여한다면 당의 선봉부대로서 민족민주운동, 자주통일운동의 대중화를 급속히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양심적 지식인들도 이제 더 이상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역사의 중요한 길목에서 용기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민족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먼저 강력한 전국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대선국면에서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당면한 절박한 요구와 함께 ≪미국반대, 보수정치 심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을 내걸고 대규모 정치투쟁을 벌이자. 그 연장선에서 이 투쟁에 참여한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이 주인답게 참여하는 대선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자. 그러면 2002년 대선에서 최소 100만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남북화해시대, 3김의 영향력이 무너진 새로운 정치환경의 2004년 총선에서는 최소 지역구 2~3석 당선과 전국 득표율 5%이상(100만표)으로 전국구 2~3명 당선, 4~6명의 집단적인 원내 진출을 이룰 수 있다. 물론 1인2표의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 을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최소 국회의원 5명을 내기 위해서는 약 150명의 후보를 내어야 하고, 150명의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각계 민중이 함께 하는 강력한 진보정당, 전국 각 지역에 지구당을 둔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계기로 노동자가 주도하고 노농동맹에 기초하며 각계 진보역량을 최대한 결집한 강력한 진보정당이 건설해야 한다. 운동 내부의 차이를 넘어 민족과 민중의 요구를 중심으로 통일단결하자.

2001/08/08



민족민주운동과 진보정당

2001. 6.30-7.1 전국연합 진보정당특별위원회 워크샵 자료집 중

1.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태도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자

진보정당 건설 문제는 남한 민족민주진영에게 있어서 숙원 가운데 하나였다. 진보당과 사회대중당이 분단독재세력에 의해 채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압살을 당한 이후 남한 내 진보정당운동은 그 맥이 끊겼다. 우리 민중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정당을 가질 권리조차 박탈당해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민중의 당 등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실험이 있었지만, 기성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중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해산당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역사는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민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으면 현실정치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진보정당 문제에 대하여 전국연합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진영 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지난 시기 진보정당을 건설 운동이 번번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한 패배감도 작용할 것이다. 또 그간 진보정당 논의가 어김없이 운동진영의 분열과 제도정치권 흡수로 귀결되었던 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년 전국연합 내부의 진보정당 건설 논의가 일부 수정 개량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극심한 합법주의와 개량주의로 흘렀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현실에서 존재하는 진보정당이 창당과정에서부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 올바른 진보정당의 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진보정당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하는 객관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연합 내에서는 그간 진보정당문제는 논의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전국연합은 지난 99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될 때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선운동을 지키고 강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진영 사이에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흐리고 민족민주전선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섣부른 진보정당 건설은 자칫 합법주의적 경향이 존재했으며, 전선체 무용론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변혁적 기치를 뚜렷이 하지 않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개량주의적 요소에서부터 편협한 계급주의에 이르기까지 그릇된 정치노선이 혼재해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아울러 간부의 준비나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토대 구축 없이 선거일정과 맞물려 졸속으로 추진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연합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민주전선을 사수 강화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반면에 전국연합은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주체적 견해와 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정세발전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과 경로, 상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중들의 정치세력화의 요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전국연합은 진보정당 건설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실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대표체를 표방하는 전국연합이 진보정당 문제에 대한 자기의 주체적 입장과 계획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민족간부의 높이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높이에서 진보정당 건설 문제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진보정당건설이 민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고, 운동발전의 필수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누가 잘못했건, 현실에서 어떠한 그릇된 경향이 있건 그것이 현실의 과제를 외면하는 이유로 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주체에 달려 있다. 전선운동도 그릇된 관점과 입장을 갖고 하면 개량주의라고 빠지고, 정당운동도 민중중심의 올바른 사상관점과 확고한 원칙이 바로 서고 대중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이 하면 변혁적인 것으로 된다. 운동의 발전은 언제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며, 순탄한 길보다는 실패와 좌절, 겹쌓인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있기에 우리의 논의는 지난 피의 교훈을 일보전진의 근거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야 하는 이유

우리 운동은 지금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고 있다. 6.15선언 이후 사변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는 통일정세, 반미자주화 운동의 일대 고양 속에 광범위한 민중의 정치적 성장과 진출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감으로써 가까운 몇 해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민족사적 전망을 활짝 열어 젖혔다. 반세기가 넘게 이 땅을 억눌러왔던 분단지배체제가 근본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 민중의 통일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분출되고 있으며, 민족대단결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분단지배체제 속에서 철저하게 은폐되어 왔던 미국의 침략자, 범죄자로서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광범위한 민중이 반미자주화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가 활짝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지난 2000년은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여 미래를 예견성 있게 준비하는 것과 함께 운동방식을 과감히 혁신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지 못하고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자주와 통일의 새 세기인 21세기를 시작하는 역사의 길목에서 전국연합은 연방통일조국 건설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완수해야 할 튼튼한 기둥이자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 운동 승리의 열쇠는 변혁역량을 얼마나 힘있게 축적하고 장성시키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전국연합은 광범위하게 진출하는 기층민중을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주인으로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연방통일조국 건설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국연합은 연방통일조국 건설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완수를 위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주력군이 중심이 된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이라는 총적 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첫째, 민중연대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건설함으로써 기층민중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범민련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통일연대를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광범위한 통일운동세력을 묶어 세워야 한다. 셋째, 민중이 정치적 지향을 대변하는 올바른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일상적 정치활동을 통해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넷째, 이러한 과제를 힘있게 수행하기 위해 전국연합을 비상히 혁신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 시기 진보정당 건설 문제는 전국연합에게 있어 연방통일조국 건설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완수를 책임질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이라는 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민중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하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민중의 절실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 것처럼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대중의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있다.

정권교체로 여야의 차별성도 없어진 가운데 기성정치세력은 이념적 정치적 전망도 없이 파당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의 의사와 무관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정세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친미사대의식이 급속히 퇴조함에 따라 기성정치권은 더욱 더 심각한 이념적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아울러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행으로 기층민중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광범위한 민심이 지배세력으로부터 이반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비 개혁을 통한 중간층 포섭전략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200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이른바 3김시대가 막을 내림에 따라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은 급속한 재편을 강제받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향후 한국사회 정치지형은 자주와 통일을 한편으로 하고 사대와 분단을 한편으로 하는 정치지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의 지향도 주체의 준비가 없으면 정치적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0년4.13 총선 때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국민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치권에 대한 심판을 행동전으로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적 대안이 없는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적 허무주의만 부추길 뿐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민중의 희망으로 다가가고 무궁무진한 민중의 힘을 변혁의 힘으로 모아냄으로써 운동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정확히 포착하여 그 요구에 전면적으로 부응해 나서야 한다.

2)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전면에 걸고 정치활동을 전면화 할 때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을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감옥을 갈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 우리 사회 당면 변혁의 과제와 동떨어진 주의주장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은 이상 그럴 위험은 거의 없다.

특히 6.15공동선언은 55년 동안 이 땅을 짓눌러 왔던 반공반북이데올로기와 그것에 기초한 분단지배체제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 보수적 언론이나 지배세력 내에서조차 이념적 혼란을 겪을 만큼 6.15공동선언은 우리사회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놓은 대사변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법률적으로 개폐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다가 미제국주의의 무차별적인 세계화공세는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음에 따라 우리 민중의 민족적 자각은 반미투쟁의 의지로 발전하고 있다.

고엽제 살포, 양민학살, 매향리 폭격장, 불평등한 소파협정, 독극물 살포 등 지난 55년 동안 이 땅에서 저질러진 미국의 범죄적, 침략자적 만행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세의 변화를 이루어낸 힘은 무엇이었던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민중의 투쟁이다. 우리 앞에 열려진 공간,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세는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 민중의 투쟁이 이루어낸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민중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이 공간을 민족민주운동의 일대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진공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할 때가 온 것이다.

앞으로도 정세는 반동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부침과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자주민주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대세는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민중의 정치적 지향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과거 진보당이나 사회대중당이 겪었던 것처럼 지배세력의 탄압에 의해 파괴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민중은 자기의 정치적 지향을 대변하는 정당을 가질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진보정당 건설은 민족민주운동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합법적 공간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디 모든 사회운동은 비합법적인 운동에서 반합법적인 운동으로, 반합법적인 운동에서 합법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지배세력이 쳐놓은 합법의 테두리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의 변혁적 기치를 내리는 것은 개량이요, 합법주의이지만 지배세력이 접근을 불허했던 공간을 투쟁으로 쟁취했을 때 그것은 가장 변혁적인 운동으로 된다.

3) 대중의식화, 조직화의 획기적 전진을 통한 변혁역량의 비약적인 장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건설이 필수적이다

현 정세는 대중의식화, 조직화 사업에서의 획기적인 전진을 통해 변혁역량의 비약적인 장성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정세이다.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대중의식화, 조직화 사업은 대단히 수공업적이고 소규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합운동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된 반면에 정치적 활동은 지극히 빈약하다. 이로 말미암아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정치활동이 광범위한 민중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소수 활동가들만의 활동으로 되고 있으며,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최대의 약점이다.

정당은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대중단체에 비해 참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주변에 재야단체 활동은 어렵지만 정당활동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정당은 그 목적과 정치적 지향이 뚜렷해서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정치의식을 높이는데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당이 대중의식화, 조직화를 획기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위력한 조직적 무기로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라는 합법적 지위는 대중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일상정치활동을 전개하는데서 매우 유리하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되어 정치적 지위를 획득할 경우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대중정치활동을 벌일 수 있으며, 대중의식화 조직화를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고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부분적인 경험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비유하자면 비정기적 유인물과 정기적이고 합법적인 신문이 갖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거는 대중의식화 조직화를 전진시키는데 있어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선거 때는 대중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향이 전면적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대중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선거는 대중정치활동의 꽃이며, 전면적인 계급적 정치투쟁이다.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고 각 정치세력간의 사활을 건 전면적 격돌이 일어난다.

선거 공간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전면적인 정치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의 정치의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많은 대중을 발굴하여 조직할 수 있는 위력적인 정치학교이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승부와 관계없이 엄청난 조직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는 선거투쟁을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는 대중주체의 정치투쟁으로 조직하고 위력적인 대중투쟁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이다. 기성정치인

들 하듯이 대중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잘못된 선거투쟁은 패배감 밖에 남길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진보정당 건설은 몇몇 사람의 의회진출과 제도정치권에 대한 대응 문제를 뛰어넘어 대중의식화 조직화의 획기적인 전진을 통해 변혁역량 장성을 가져오자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4) 진보정당운동은 민족민주세력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으로 다가가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사회운동은 초보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부터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운동으로 발전해나가는 합법칙성을 지닌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집중된 형태가 정치이며, 정치의 지배권인 정권을 장악하는 문제는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최적, 최우선의 조건을 창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국민대중에게 하나의 비판세력, 투쟁세력으로만 다가갈 뿐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정당운동을 전개해야 정치세력으로 이해하는 민중적 정서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재야정치운동은 정당과 결부하지 않고서는 정치세력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8-90년대를 거치면서 남한의 대중운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여성, 빈민, 시민운동조직 등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급 대중조직들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상설적인 민중연대전선의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일은 이러한 연대전선이 민족자주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투쟁전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하는 대중운동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결집하고 정치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운동을 정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할 때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대중 앞에 제시하고 이를 목표로 투쟁하며 활동하는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5) 기동성 있는 여론전의 강화를 통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진보정당은 기여한다.

정치투쟁의 승패는 여론에 달여 있다. 아직까지도 물리적 억압과 탄압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여론을 통해 고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물리적 공세를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여론조작 등의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민심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투쟁에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 정치적 선전효과는 턱없이 낮은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예화된 몇몇 역량으로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조직의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대중운동에 토대를 둔 우리가 제때에 정치적 기동전을 조직한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엄청날 것이다. 특히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 정세는 어느 때라도 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신속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사건에 대한 대응 등 시시각각으로 터져나오는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응은 신속성과 집중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큰 힘을 들여 개별로 다루기보다 준비된 단위에서 제 때 제 때 싸워나가는 식으로 하면 작은 역량으로도 크게 빛이 날 것이다.

정당운동은 준비된 정치역량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가장 발전된 조직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이러한 특성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정치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치적 기동전을 조직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진보정당이 정치적 통일성을 정정당운동의 수준에 맞게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한다.

6) 진보정당은 통일전선운동의 확대발전에도 기여한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그 자체가 통일전선적 정당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자주 민주통일이라는 공동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을 정치적으로 결속함으로써 통일전선운동의 확대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이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하층통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정당운동은 정치적 경험과 노선이 다른 제 정파를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결속하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정당운동은 시민운동진영을 포함한 중간층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공간이기도 하다. 통일전선운동에서 중간층 전취 문제는 통일전선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과제이다. 최종적인 승패는 결국 중간층을 누가 전취하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통일전선운동은 민족민주전선체의 건설과 발전을 중핵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조직형식을 뛰어넘는 대단히 총체적인 운동이다. 정당운동도 통일전선운동의 위력한 방도의 하나인 것이다.

7) 연방제 통일의 주체적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진보정당 건설은 절실히 요청된다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에서 민족대단결운동을 합법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연방제 통일의 주체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제도정치권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통일정세의 근본특징 가운데 핵심은 남북최고당국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감으로써 자주적 연방통일조국 건설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분단선을 돌파해왔던 3자연대운동은 합법적이고 거족적인 민족대단결운동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만이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는데 복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진보정당은 통일운동을 합법화 대중화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지 않아 통일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각계각층 통일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움으로써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것과 함께 제도정치권, 의회공간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반통일세력에 대한 통일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민중의 통일에 대한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 시기상조론에 대해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 진보정당 건설은 중장기적 과제이다≫

이러한 견해는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안일한 생각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제때를 놓치면 그 후에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그만한 성과를 내오기 힘든 법이다.

그러면 진보정당 건설이 왜 당면한 실천과업으로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현 시기 어느 때보다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아는 것처럼 6.15공동선언으로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기성정치권은 심각한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민중의 정치적 진출은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제국주의의 무차별적인 경제침략과 정권의 매국적, 반민중적 경제정책으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성정치권에서 민심은 광범위하게 이반되고 있다. 이러한 민중의 삶은 도외시한 채 추잡한 정쟁만 일삼고 있는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대중의 불신과 분노는 한계를 넘은 지 오래이다.

여야의 차별성이 없어졌으며, 민중의 정치적 지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치집단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맞이하는 2002년 권력재편기는 3김시대의 퇴조와 맞물리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치지형의 형성을 강제하고 있다.

3김시대 이후 정치지형은 필연적으로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친미분단을 지향하는 세력과의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이러한 정치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국민대중에게 새로운 정치적 희망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민중들의 정치적 각성은 정치적 허무주의와 패배주의로 흐르게 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과제는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는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확실히 진보정당 건설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다. 그러나 운동은 수많은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에 도달하는 것이지 언제나 유리한 조건에서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듯 당건설사업 또한 초기 사업에서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 건설 사업은 역동하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준비되고 창조되는 사업이다. 그런 만큼 현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준비 없이 결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간 전선과 현장 속에 단련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핵심간부들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야 올바른 진보정당을 힘있게 건설할 수 있다.

2) 전민항쟁과 선거투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반민주적 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순전히 의회 전술과 선거를 통해 집권을 실현하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대중투쟁은 정세가 아무리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할지라도 여전히 민중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하는 가장 위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식화 조직화의 기본방도이다. 전민항쟁은 소수 몇몇 사람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 민중의 힘으로 지배권력을 포위 고립하여 민중중심의 정치권력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위력한 방도이다.

그러나 대중투쟁과 전민항쟁을 도식화하여 선거투쟁과 정당사업을 제도권 진입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발전가정을 실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대사의 고비 고비에서 전면적인 민중항쟁은 권력재편기에 선거를 둘러싼 지배권력의 음모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폭발로 나타났으며 민중의 정치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였다.

3.15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일어난 4.19나 선거 자체를 부정한 5.17 쿠데타를 계기로 터진 광주민중항쟁, 직선제 개헌을 거부한 4.13호헌조치를 도화선으로 일어난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 등은 선거를 둘러싸고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치열한 투쟁을 동반했으며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총화해보면 선거와 전민항쟁은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 속에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투쟁은 선거투쟁과 결합할 때 정치적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선거투쟁은 대중투쟁의 불길 속에 치러질 때 민중의 무궁무진한 정치적 힘을 결집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의 표대결로 그치지 않고 위력한 정치투쟁으로 전변되는 것이다.

정당은 의회전술과 선거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과 전민항쟁의 중심에도 설 수 있다. 예컨대 과거 만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야당은 의회투쟁이나 선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두투쟁을 조직했으며, 6월 항쟁에서는 중심적인 정치적 역할을 담당했다. 투쟁 이후 정치적 전망이 없다면 과연 그와 같이 폭발적인 항쟁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긴밀히 결합할 때, 대중투쟁의 힘을 정치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자기 정당이 있을 때 대중투쟁은 항의와 규탄의 투쟁을 넘어 정치권력 쟁취를 목표로 하는 전민항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정당은 이와 같이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며 선거투쟁을 계기로 민중의 정치역량강화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제도권 정당이라고 제도권 틀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어긋난다.

3) 전선체와 정당의 관계

합법적인 공간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식민지배체제가 엄존하고 있고 민중의 기본권이 여전히 유린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합법적인 정당만으로 광범위한 민중을 변혁역량으로 묶어 세울 수 없다. 변혁운동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의 힘이 지배권력을 압도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지켜진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한 칠레의 아옌데정권이 미국의 사주에 의한 유혈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역사적 경험은 민중이 조직회된 힘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서만이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광범위한 민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대중조직을 광범위하게 건설하고 이를 더욱 전투화, 변혁화하는 가운데 이를 자주민주통일을 과제로 한 민족민주전선체로 결집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민족민주전선체는 변혁역량의 조직화에서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방향이다. 민중의 진보정당은 전선체에 결합하여 민족민주전선의 강화에 복무하는 것과 함께 전선체의 정치적 부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전선체에 튼튼히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의 강화에 복무할 때 민중의 정치적 지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합법정당 건설만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명백히 합법주의적 편향이이다.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대중조직을 대중의 일상적 이해를 대변한은 것을 넘어 정치적 지향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각계각층의 정치적 대중조직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사업, 각계각층을 공통의 기치 아래 묶어 세우는 통일전선체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사업, 대중의 정치적 지향을 대변하는 정당을 건설하는 사업 등 총체적 과정을 통해 압도적 다수 민중을 변혁운동의 주체로 묶어 세우는 사업이다.

그러나 반면에 정당을 제도정치권 진출을 위한 전술적 단위로 협

소하게 바라보는 것은 전선체와 당과의 관계를 역동하는 현실 속에서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 발전적 관계이듯이 전선체와 당도 또한 그러하다. 정당이 전선체에 기반하고 전선체 강화에 복무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전선체 또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을 가질 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현 시기 우리가 건설해야 할 진보정당은 변혁운동의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할 민중정치투쟁의 조직적 무기이다.

4) 당을 하면 전선체가 약화되고 개량화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전선체 안에서 정당운동을 추진했거나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선운동에서 이탈하였을 뿐 만 아니라 운동의 원칙을 저버리고 기성정치권에 편입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당사업은 자칫 전선체의 역량 손실과 운동의 개량화를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점은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아야 한다. 민중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부재는 불가피하게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기성정치권의 충원세력으로 작용하게 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정당운동에 대한 뚜렷한 정치적 전망을 안겨줌으로써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출했던 사람들이 보였던 부정적인 모습은 그것이 정당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적 운동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정당운동은 유권자를 의식함으로써 표를 얻기 위해 강령을 파는 일이 속출함으로써 개량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는 그 뜻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주체적이지 못한 견해이다. 이것이 주체적이지 모산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거투쟁을 기성정치인들의 그것과 차별성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돈과 권력과 학연, 인맥과 혈연을 밑천으로 치러지는 전근대적인 선거방식은 기존 정객들이 하는 방법으로 당선은커녕 우리에게 독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선거투쟁을 어떠한 관점과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의 강령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돌려놓는 위력한 투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 지난 99년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의 승리는 표를 얻기 위해 강령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전취하기 위해 우리의 강령을 선전하고 조직하는 우리식 선거투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을 표밭으로 바라보는 기성정치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당과 선거는 개량의 길이지만 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민중중심의 관점으로 볼 때 선거와 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령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음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변혁적 정치활동인 것이다.

일상대중투쟁과 또 다른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하는 선거투쟁의 미력은 대중이 얼마나 지혜롭고 참다운 정치세력을 열망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관념적으로 예단할 때 선거전을 개량으로, 소모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조직사업을 하면 전선체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소극적인 생각이다. 사실 한정된 간부역량과 조직력으로 대중조직사업과 전선체사업에다 당사업까지를 하려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선운동도 결국 조직력이 확대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속에서만 강화될 수 있다고 할 때, 정당운동으로 진출은 전선역량의 손실이 아니라 조직사업의 비약적인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의무감을 갖고 하면 부담이 되지만 위력한 조직사업으로 바라보면 전선사업과 당사업이 밀접히 결합될 때 전선도 강화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당건설사업을 비롯한 제반 조직사업을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진행하는 것은 전선을 강화하고 지배세력을 고립 포위하는 위협적인 역량배치로서 강력한 실천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4. 올바른 진보정당의 상

1) 자주민주통일 정치적 강령으로 하는 변혁적 대중정당
2)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을 중심으로 중간층까지 망라한 통일전선적 대중정당
3) 민족민주전선에 의거하고 민족민주전선체의 강화에 기여하는 정당
4) 일상적 정치활동을 통해 대중을 당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정당
5)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당
6) 각계각층 대중조직에 뿌리내린 정당

5. 전국연합은 올바른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전국연합이 올바른 진보정당 건설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자기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는 아직까지 전국연합 안에 진보정당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적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진보정당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중조직사업과 전선사업, 정당사업을 통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갖추지 못한 단위가 많고 지역간 부문간 운동발전의 수준과 단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 전국연합의 내적 통일성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국연합 내의 정당건설 논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는 하는데 신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문제는 조직내부의 민주적이면서도 풍부한 토론에 기초해서 단결된 결정을 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정책적 문제이다. 특히 조직의 성격과 발전의 정도에 편차가 있는 조건에서는 획일적으로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히 하는 가운데 각 지역과 부문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업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운동의 본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실 조건을 정확히 타산하는 가운데서도 이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관점과 태도가 요구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주체의 의지를 확고히 세우는 것에 있다. 전국연합이 올바른 진보정당 건설에 책임 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자기의 조직적 의지를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국연합은 이번 10기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정당 건설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서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뚜렷이 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조직태세를 마련할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운동을 위한 한총련정치위원회 구성하자!

새 세기 민족민주운동과 한총련운동은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주와 승리의 세기, 민중의 세기인 새 세기에도 민중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침탈은 날로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유실시키려는 대북 강경정책과 한국 내정간섭이 첨예화되고 있고, 영구주둔 계획인 ≪연합토지 관리계획≫과 기름유출 환경오염 등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깡패 행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지배패권전략으로 인해 전 세계적 화해 해빙기에도 유독 한반도만은 긴장과 대결의 한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 독점자본의 무한 이윤을 위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쓴 경제침탈을 가속화하여 정리해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해외매각, 비정규직 양산 등 민중의 기본 생존마저 난폭하게 유린되고 있다. 민중들에게는 희망의 새 세기가 아니라 고통의 구세기의 연장일 뿐이다.

민족의 자주와 민중의 생존권이 이렇듯 난도질당하는 현실에도 이른바 나라를 경영한다는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들에게는 분단과 예속의 반세기를 넘어서려는 민족적 염원과 대업도 한낱 정치공방의 한 주제일 뿐이며, 피눈물 나는 민중의 현실도 골프채 휘두르는 재미보다 중요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혐오는 오래 전 도를 넘어서 정치인과 정치 자체를 무조건 기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의 주인이자 곧 정치와 권력의 주인인 민중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상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모순과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고통과 혼란의 소용돌이 깊이로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물결이 쉼없이 흐르고 있다.

97년 대선에서의 여야 정권교체는 한국 사회 정치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비록 친미보수세력 내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정권교체는 민중들에게 정치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각성, 정치적 변화와 전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록 이후 더 큰 실망과 분노로 변했지만)

현재 여야 정치세력의 관계는 이전과 같은 ≪여=반민주/야=민주≫ 식의 단선 구도가 아니다. 여야의 권력관계 역시 이전 시대와는 달리 역전 상태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진보운동 등 다양한 세력까지 복잡하게 결합, 대치, 편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때로는 개혁과 수구로, 때로는 통일과 반통일로, 때로는 민중과 반민중으로 사안별로 전선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단적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대북 화해협력 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한미관계 문제 등에 대한 입장과 전선은 단일하지 않다. 정치적 쟁투와 대응은 대단히 유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구집단 한나라당이 민주당 정권의 부평 폭력집안을 규탄하기도 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시민단체 중 일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한다. 심지어 공안기관 내에서마저 지지세력에 따라 서로 암투를 벌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현 집권세력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며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전통 야당세력이 아니라 수구집단 자민련까지 포괄한 약체 소수세력인데다 집권 초부터 국민적 지지와 동참 아래 민주개혁조처를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은 필연적 결과이다. 더욱이 김대중정권은 태생적 한계로 친미사대매국성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의 복잡한 양상과 혼돈은 반세기를 지배해온 극우반공이데올로기와 공안무력통치가 민중들의 정치적 저항과 진출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과도기적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즉 외세와 수구매판세력이 새로운 지배세력권을 형성하고, 현재의 역관계에 맞는 대응체계를 완비해가는 과정에서의 돌출상황인 것이다. 이 근저에는 87년 6월 대항쟁을 정점으로 하여 전개되어온 민중 주도의 국면 전개가 놓여 있다.

유동적(=열린) 정치국면에도 불구하고, 여권도 야권도 민중의 희망이 아닌 지금과 같은 극도의 정치적 공백상태는 결정적으로 민중의 정치적 희망이 되어야 할 민족민주운동이 정치적 입지를 갖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결과이다. 현재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정치 지형은 민족민주운동이 민중의 요구와 역량을 집약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해 정치적 유력.수권세력으로서 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민중의 기대와 염원인 민족민주세력의 집권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룩할 수 있다.

민족민주운동은 90년 중반 이후의 혼란과 탄압을 뚫고, 자체의 조직력을 복구하고 전선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비약을 예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기층민중의 투쟁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운동 노선상의 견해 차이로 복잡한 균열을 보였던 통일운동세력의 단결단합이 통일연대 결성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운동 내에서 지도력과 구심력, 내적 조직역량을 높여가고 있으며, 명실공히 전체 진보운동, 민중운동을 총괄하는 민중연대가 하반기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한총련은 통일단결과 운동대중화를 자기의 기치로 높이 들고 혁신을 다그치고 있으며, 이적규정을 분쇄하고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도상에 올라 있다.

개혁적 시민운동과 다양한 영역의 진보운동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의 태풍은 민중의 잠재된 분노와 행동력을 시민단체의 시의적절한 전술과 구호가 폭발시킨 일대 사변이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민족민주운동의 품 안에서 싹텄던 환경, 여성, 인권, 문화운동도 이제는 일가를 이루어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장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외연이 대단히 넓어진 것이다.

4.10 부평사건에서 보듯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하여 이를 기반으로한 신속하고 기동적인 여론 형성과 파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족민주운동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론을 조직, 확산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차제에, 사안 터지면 회의 열어서 집회 시위하는 방식의 천편일률적인 정치투쟁을 보다 풍부히 하여 민중의 정치의식을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계발해야 한다.

정세와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급변하는 자주통일정세는 한국사회는 물론 전체 한반도에 일대 격랑을 일으키며 근본적 변화를 몰고왔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전민족 앞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는 자주의 약속을 굳게 다져 민족통일전선을 공고하게 구축하였다. 반세기를 넘은 이산가족이 얼싸안는 감동에

온겨레가 울었고,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있다. 제 2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 할 6.15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성사되고, 노동자와 농민이 남북 교류를 실현하였다. 통일연대 민화협 7대종단이 하나가 되어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통일사업 민간추진기구인 8.15 민족통일대축전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청년과 학생 단위는 청년.학생추진위를 조직하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새 세기 첫 광복절에 평양에서 역사적인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1주년과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은 민족 자주의 기치 아래 남북해외 칠천만 겨레가 단결단합하는 기운을 상승시키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6.15 남북공동선언 못지 않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8년간의 정전대치 상태인 한반도에서 전운을 말끔히 가시고 평화체계를 굳건히 세우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향한 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제 우리 민중들은 누구나 현실로 통일을 느끼고 있다. 통일이라는 전민족적 염원이 실현되면, 민족 구성원 전체 삶이 큰 폭으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민중들은 통일문제의 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통일 문제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민중들은 민족사의 대격변기를 맞아 민족민주운동에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부강번영을 이룰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무수한 민족의 변혁 역사에서 보듯 민족의 명운이 기로에 선 시기에는 애국민주세력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민족의 장래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한국 사회 수구반통일세력의 격렬한 저항은 민족민주운동이 짊어져야 할 지도적 책임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민족민주운동가들은 작금의 시기에 시대의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각하고, 비상한 열정과 노력으로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한다.

시대 변화, 민족민주운동 전진의 추동력은 날로 높아가는 민중의 요구와 역량이다

글자 몇 줄로 표현할 수 없는 폭과 깊이로 일고 있는 대격변의 출발은 어디인가? 무엇이 시대를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 가고 있는가?

시대 변화의 추동력은 민중이다. 끝을 모르고 공고할 것 같던 민족대결의 시대에 종말을 고한 것도, 정권교체라는 한 때는 꿈만 같던 구호를 현실로 만든 것도, 험난한 시대를 뚫고 민족민주운동을 기어이 재생 강화한 것도 모두 민중의 힘이다. 지배세력의 온갖 탄압과 수정개량주의 변절자들의 사상 공세 역시 민중들의 힘찬 투쟁으로 분쇄되었다.

민중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민족 운명의 개척자로 일어서고 있다. 생활 속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행동은 몇 년 만에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냉전동토지대를 짓누르던 ≪아메리카 신화≫는 깨지고, 이전 날에는 침묵하던 민족멸시의 죄상에 대해 오늘은 규탄의 목소리가 격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이땅은 주한미군의 낙원, 미국의 만년 식민점령지가 아니라 반미투쟁, 자주운동의 심장부가 되고 있다.

민중들은 자주를 향한 더 높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민중들은 단순한 저항자에 만족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 완전히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생존권 투쟁에서 연대연합전선으로, 정치권력을 자기 손에 쥐려는 투쟁으로 가파른 길을 오르고 있다. 노동자, 농민 기층운동은 물론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중과 연대하여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려는 단체와 조직이 건설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노조, 농민회, 학생회, 청년회, 여성회, 정당, 연대단체.... 민중이 있는 곳마다 투쟁이 싹트고, 조직이 서고 있다.

모든 객관 정세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민중이 살고 투쟁하는 곳에서 시대의 진보와 운동의 희망이 생겨난 것이다. 민족민주운동가들은 90년대를 감회 깊게 회고하며, 그 어떤 깊은 절망의 협곡에서라도 기어이 희망의 정상을 향해 부활 재생하고야 마는 민중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새 세기 민족민주운동의 중흥과 도약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참여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심으로 지지, 환영한다

최근 한총련 핵심운동가들 내에서 민주노동당 참여에 대한 고민이 확산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의 선봉대, 주력군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닌 청년학생 핵심운동가들이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을 향한 장정에 동참하려는 것은 한총련운동은 물론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향방에 있어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한총련 핵심운동가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한다.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을 향한 투쟁은 무엇보다 운동 주체인 민중들의 요구에 비추어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민주운동 초미의 과제이다. 변화하는 정치지형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최소한이라도 기대를 걸고 지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민족민주운동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예비하는 뚜렷한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중투쟁과 전선운동의 더욱더 높은 도약과 발전을 위해 그 정치적 대변자이자 결집된 선진역량으로서 진보정당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더 이상 지속적인(=축적 가능한) 조직적 틀이 부재한 채 일회적, 단속적 대중투쟁만으로는 민중을 효과적으로 각성시키기도 어렵고, 이를 집중하여 집권 역량으로 조직할 수도 없다.

≪민주노동당과 각 지구당의 당원 또는 열성 지지자≫ 라는 틀은 ≪대중조직이나 전선조직의 지지자≫ 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하고 효과적인 역량 결집을 가능하게 하며, 민중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정치참여와 집권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런 면에서 대중투쟁과 전선운동의 발전은 일정 수준으로 도약하면 반드시 정치조직, 정당운동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진보정당운동의 총체이자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의 대안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중들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지난 총선에서는 울산, 창원, 성남, 대전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내보였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기대나 민족민주운동의 요구에 비해 여러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현재 내포하고 있는 많은 부족함은 비단 민주노동당만의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 정치세력화의 현주소이며, 전체 운동역량이 결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민주노동당은 90년대 중반 이후 전선운동과 대중조직 내에서 다양하고 폭발적으로 제기된 진보정당 건설 논의의 실천이자 결실이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진보정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과 전망을 갖고 있다. 즉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연합, 곧 민주노총에 조직적 토대를 형성하고 당이 건설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대중과 민주노조에 확고히 뿌리 박은 최초의 진보정당≫이 곧 민주노동당이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총선에서 비록 아깝게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이전 정당과 달리 당이 해체 소멸되지 않고, 곧바로 당력을 집중하고 체제를 정비하여 거듭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것이다.

앞으로 60만 민주노총 조합원 속에서 더 많은 당원이 배출되고,

여기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지식인, 중소상공인, 진보적 시민운동 역량, 신망받는 개별 진보인사 등 각 계급, 계층, 부문의 진보적 역량을 포괄하여 명실공히 한국 민중의 정치적 희망이자 강력한 집권세력, 수권정당으로 강화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은 필수적으로 정견을 넘어 진보운동, 민중운동의 총단결을 기해야 하며, 따라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분란을 낳기보다 공동의 과업과 실천투쟁을 중시하면서 민중에 근거하여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 한총련운동대오는 민주노동당 참여와 함께 복잡다단한 논란보다 민주노동당의 일상정치활동과 선거투쟁에 밀접히 결합, 복무하여 무엇보다 실천으로 당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진보정당운동이라는 미지의 운동 영역에 발을 딛으며 우리 앞에는 해결하고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한총련 핵심운동가들은 전체 민족민주운동을 더욱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항상 현실의 투쟁과 함께 앞으로를 내다보며 꾸준히 스스로를 준비하고 강화할 줄 알아야 한다. 운동의 전진과 도약은 자체의 혁신이 가장 우선이며, 이로부터 시작되고 이로부터 결과가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핵심들부터 연구와 토론, 변화와 혁신의 기수가 되어 참다운 정치간부, 지도간부가 되려는 전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방도에 앞서 운동 주체의 결의이다. 정당운동이니 정치간부니 집권이니 이외에도 많은 개념과 내용과 활동상이 아직 낯설지만, 제기되는 혁신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부진 각오가 날이 빛나는 칼처럼 예리하고 강인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이 속에서 한총련운동대오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실천적 의지가 되어 빛나는 결실을 맺을 것이며, 단순히 민주노동당 참여가 아니라 한총련 운동의 일대중흥과 도약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당적 운동을 위한 조직적 준비를 충실히 갖추고, 편향을 경계하자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중정당, 합법정당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총련운동대오 내에는 민주노동당에 이전부터 참여해온 사람도 있고, 새로이 동참하려는 동지들도 있으며,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지난날의 왜곡된 인식을 아직 가지고 있는 일꾼들도 적지 않다.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의문도 많이 생기고,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 하거나 피하려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올해 한총련운동의 주요 지표인 ≪사상운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양, 토론의 계기로 삼고, 간부들의 주체적인 사고와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체 일꾼들이 민족민주운동의 전망, 전선운동과 정당운동과 같은 수준 높은 주제에 대해 안목과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한총련운동대오 전체 차원의 내적 통일성을 갖고, 당적 운동에 대한 목적의식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간부, 핵심간부들부터 치열하고 풍부한 사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치열하고 풍부한 사상운동이란 무엇보다 주체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핵심간부와 일꾼들 전체가 스스로 사색하고 연구하고 이를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한 문제라도 집단의 힘으로 반드시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보정당운동이 단순한 조직 형식의 변화나 일개 연대조직에의 참여가 아니라 사상운동적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이 되고, 대중조직운동에서 정치조직운동, 정당운동으로 조직적 발전의 중대 계기가 되려면 반드시 주체적 사상풍토가 구현되어야 한다.

또 먼저 준비된 간부들이 전체 일꾼들을 교양하기 위한 내용을 만들고, 교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진보정당운동에 이전부터 참여해온 동지들도 그간 다른 많은 동지들과 대화하며 활동 내용을 나누지 못했고, 그렇지 않은 동지들은 진보정당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서적으로 막연히 진보정당운동을 ≪개량적이다≫ 라고 인식한 동지들도 많다. 이런 일꾼들을 하나로 묶어 참다운 정치간부로 준비시키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민중의 요구따라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고 운동을 발전시키는 걸음이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무엇보다 전체 일꾼들의 사상수준, 이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상교양적 내용을 정하고, 이를 교양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둘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 민중의 요구는 높고, 현실 정치일정과 정세 흐름은 빠르게 변화,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계적, 형식적 사고를 탈피하여 전국에서 대중적 사상운동을 들불처럼 일으켜 짧은 시간 내에 사상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어려운 일일수록 답은 대중에게 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대중의 자각과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내어교양전투를 조직하고 사상혁신을 달성해야 한다.

민중의 요구라는데 우리 핵심간부들이 책이라면 수십 권은 못 읽으며, 토론이라면 밤은 못 세우겠는가? 연구 논문도 척척 써내고, 문제에 대한 참신한 주장도 속에 있는 그대로 내놓게 하고, 이런 식으로 대중적인 사상운동을 불러 일으킬 때 우리는 단기간 안에 간부들의 정치교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고, 조직적 결의와 역량에 근거하여 핵심간부을 당원으로 배출할 수 있다.

기우일 수도 있으나, 한총련운동대오가 민주노동당에 첫 발을 내딛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처음부터 우여곡절을 피하고 정도로 나아가자는 것이니 충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첫째로,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교양 몇 번하고, 가입원서 쓰고, 회비 낸다고 진보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준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우리는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이라는 민중의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안고 당을 더욱 강화하려는 청년학생들이다. 운동의 과정 어느 것 하나 형식적이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정당운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직운동이며, 고도의 정치적 자각과 판단을 요하는 활동이다. 민주노동당을 전술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형식적인 준비로 때울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와 결의를 바탕으로 조직적, 개인적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가져야 한다.

사람이 자기 이해가 깊지 못하고, 그 전망을 크게 내다보지 못하면 주인된 운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 특히 그 동안 진보정당운동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이 부족한 많은 단위의 동지들은 사상이론적 준비를 시급히 갖추기 위한 노력을 더욱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 우리 앞에는 당과 관련하여 해명하고 알아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개념, 민주노동당의 강령 규약과 운동 경과, 당원의 조직생활과 정치활동, 선거를 통한 집권과 전민항쟁 노선, 진보정당운동과 학생운동 연대연합 문제.... 어느 것 하나 누가 입에 떠넣어 주는 것이 아니며, 특히 학생운동 관련 문제는 오로지 우리 핵심운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더불어 당적 운동에 걸맞은 규율성과 조직성을 세워야 한다.

정당은 공통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결사체이다. 평소에는 신속하고 기동적으로 당의 입장과 주장을 해설, 확산하여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야 하며, 선거투쟁 시기에는 무비의 헌신성과 일사분란한 대오로 민중의 지지를 조직해내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맡은 바 목표와 과업을 반드시 그 지표대로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며, 개인의 견해나 주장과 다르더라도 당의 조직적 결정을 따르고 자기 신념화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당원이라면 응당 높은 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시시각각 발생하고, 변화하는 무수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노동계급적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설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 언제나 학우대중과 지역 민중들 속 깊이 들어가 함께 울고 웃으며 당의 노선과 입장을 해설하고 그들을 당의 우군으로, 주인으로 조직해야 한다. 하다 못해 복장과 말씨 하나까지 민중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투쟁과 결합하는 것이다.

학교와 단위의 책임지역을 설정하고, 당의 이름으로 당면 사안에 대한의 정책을 해설하며 정치선전도 진행하고, 지지자도 모아야 한다. 모든 사안을 민중생존권 및 지역 주민 스스로의 문제로 만들어 구체적이고 통속적으로 해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각성시키는 실천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자. 당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과 소속감이 강화되고, 지역 민중들과 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정 시간과 일정이 여의치 않다면 주 1-2회 새벽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로, 혹여 일부 일꾼이라도 패권주의적 관점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며, ≪진보운동, 민중운동의 총결집≫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과 진로에 복무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들어가서 우리 견해를 중심으로 주도해보겠다≫ 이런 관점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한총련운동대오에서 조직적으로 가입하면 이는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적지 않은 숫자이다. 새로이 정당운동을 시작하면서 한총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책임감을 높게 가지고 적극 활동하려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간 진보정당운동을 먼저 시작한 여러 선배, 동지들에 대해 동지애를 갖고 존중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 민족민주운동 대열 전체로부터 충분한 지지, 방조도 없는 악조건에서 민중의 정치적 희망이 되고자 분투한 동지들에 대해서는 정견을 가리지 말고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한총련은 민주노동당이 작은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진보운동, 민중운동 전체의 정치적 총화로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보조를 맞추고 힘을 보태야 한다. 사실 ≪8월 현재 당원 1만 7천명, 매일 250여명 증가≫는 결코 쉽게 보아 넘길 수치가 아니다. 그만큼 당의 지반이 일정 수준을 넘어 튼튼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동지들의 헌신적 노고와 함께 진보정당에 대한 현장 활동가와 민중들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다.

한총련은 민주노동당을 함께하는 각계각층의 동지들과 더불어 특히 학생운동 동지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열린 자세로 대해야 한다. 한총련이 학생운동의 대표조직으로 연대연합에 먼저 더 통큰 자세로 나서야 하듯이, 한총련 핵심운동가들도 전체 변혁운동 진영의 단결과 연대를 위해 책임을 더 높게 가져야 한다.

학생운동의 실천적 연대의 지반과 조건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교육투쟁을 비롯하여 노학연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MD구축저지투쟁 등에서 이미 학생운동가들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실천적 연대와 동질감을 형성해왔다. 최근 ≪김대중 정권 퇴진≫ 구호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드러나고 있지만, 일단 차이는 뒤로 하고 크던 작던 같이 싸울 수 있는 투쟁을 앞세우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당내에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열린 자세로 서로 격려하고 비판해나간다면 이견이 있는 문제라도 좀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지도급 핵심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정견과 정파에 입각한 분파적 이해를 앞세우기보다 당의 강화를 중심으로 큰 안목의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아는 통합적 사고와 기풍이 절실히 요구된다.

회의를 열고 결의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내실있는 조직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한정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진보정당운동과 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지 벌써 5-6년을 헤아리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대단히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운동이론적 문제부터 정치적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조직적 준비를 다그치는 것까지 전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 조직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준비 정도를 급속히 높여야 한다.

제안

한총련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자!

당은 대중조직, 전선조직에서 마련된 조직적 토대 속에서 건설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중조직, 전선조직운동과 당운동이 같은 수준과 양태의 운동은 아니다. 대중투쟁과 전선 강화에서 발굴되고 단련된 우수한 핵심들로 망라되는 것이 일반적인 당이다. 비합법 전위정당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 합법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문턱을 낮추고 외연을 확장하여 한국 사회 전체 진보운동, 민중운동의 총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민족민주세력의 집권을 실현할 것이다. 이는 통일전선적 합법정당을 꾸리려는 노선과도 일맥상통한다. 민주노동당의 문턱은 낮지만, 간부들에 대한 내적 훈련과 교양으로 높은 당적 결속과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대중조직인 한총련운동대오가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한총련 차원의 집중적 지도와 훈련이 담보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민주노동당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전제되어 있다. 지역과 단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한총련≫ 차원의 조직적 지도와 훈련 아래 당적 운동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간단히 정리한다.

첫째 당적 운동으로의 발전이 한총련의 사상운동 활성화, 조직 혁신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둘째 짧은 시간 안에 이해 정도와 사상 수준을 빠르게 높여 준비된 정치간부로서 민주노동당에 참여해야 하며, 셋째 이 과정이 한총련운동을 넘어 민주노동당과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총련 정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한총련 정치위원회는 한시적 특별기구로서 정당운동에 관련한 제반 준비를 총괄 지휘하는 단위이다. 대중조직 한총련의 핵심간부들이 정치조직인 민주노동당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단위이며, 학생운동 초유의 길을 창조하고 개척하는 단위이다.

정치위원회는

≪1≫사상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쇄물 및 인터넷상의 자료를 발간하며, 민족민주운동과 학생운동 내의 각종 정치적, 이론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조직한다. 여기에는 앞서 지적한 문제들보다 더 많은 사안이 제기되고 논의될 것이다. 간부일꾼들 사이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자체 토론 게시판을 운영한다.

정치위원회는

≪2≫당원이 될 간부일꾼을 교육하고 단련하기 위해 지역, 지구, 학교 단위로 정치일꾼 모임 또는 정치간부 교육훈련체계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정치학교와 같은 집약된 형식도 있을 수 있고, 전국 정치일꾼 모임이나 수련회 같은 중앙집중적 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준비된 강사단의 연쇄 간담회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교양과 훈련은 한총련 정치위원회가 민주노동당 및 당 연수원과 연계하여 조직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정치위원회는

≪3≫한총련의 참여를 기하여 백만 학우대중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사업을 기획한다. 민주노동당을 알리는 광범위한 대중선전을 진행하고, 대표님 및 당의 명망있는 간부의 순회 강연과 대대적인 후원회 조직, 후원금 모금 등도 해야 한다. 물론 당 학생위원회 학교지부를 공식 건설하거나 당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가을 체전과 대동제, 학술제와 연계하여 전개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대중 지반을 확장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다.

굳이 나누어보았지만 사상교양사업과 대중운동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면서 종합적으로 기획, 조직되어야 한다.

이미 전국연합이 정치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민주노동당 건설 과정에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운동을 준비한 이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치위원회는 중앙 차원은 물론 최소 지역총련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결의가 있고 준비가 되는 단위는 지구와 학교 단위까지 구성하면 더욱 좋다. 정치위원회는 정치조직, 정당운동, 전선운동 등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동지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른 조건과 문턱을 두지 말고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정치위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스스로 부단히 자체 혁신을 기하고 정치역량을 강화하여, 당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동지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복잡다단한 과정을 단결된 힘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구심력을 가져야 한다. 과정에서 정치위원회가 가입사업 실무나 대행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정치위원회는 민주노동당 가입 시기에는 가입 준비가 된 당원들의 결집이 될 것이며, 당 및 당학생위원회와의 사업 추이를 보아서 한총련 내에 상시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조직적 가입 이후 해산 할 수도 있으며, 다른 경로를 그릴 수도 있다.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가고 있는 길은 다른 어느 나라와 민족의 운동 경험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변혁은 매개 나라와 민족, 시대와 단계에 따라 결코 같은 경로와 과정이 반복될 수 없으며, 오직 객관 조건을 이기고 나아가려는 주체의 결심과 과학적 운동노선으로 전진되게 마련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복잡다단한 많은 조건과 관계와 변수가 엉켜 있으며, 누가 보아도 새로운 물결이 출렁이며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이 제기되었으며, 그 조직적 대안으로 진보적 대중정당, 합법정당이 건설되었다. 바야흐로 우리 한총련도 이 운동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문턱에 서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도전정신과 개척정신 곧 청년다움이다.

청년은 새롭고 낯선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낡고 낙후한 것을 혁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같은 길을 가기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길을 가기 위해 도전한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젊기에 패기와 열정 하나로 기세 당당하게 도전하며, 그러한 결심과 각오로 역사의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이것이 청년이다.

비록 우리 앞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조국과 민중의 요구이기에, 새로운 시대의 화두이기에 우리는 주저없이 나아갈 것이다. 학생운동가들은 각계각층의 조언을 구해야 하겠지만,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밀고나가겠다는 결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 청년다운 도전의 한켠에 글쓴이도 함께 서고자 한다.

여러 동지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싶다.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이다. 앞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여 올릴 예정이니 여러 동지들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토론을 기대한다.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시대의 격랑을 해치고,
민족민주운동의 새 지평을 열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8월
민족통일대축전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에 설레는 가슴으로
민주노동당 학생당원

민주노동당 참여와 한총련의 진로

1. 왜 진보정당운동이 중요한가?

1)진보정치, 민중정치의 측면에서

정치는 한 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동시에 변혁운동에 있어서는 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자각케 하고, 사회 권력의 담당자로 성장시키는 핵심적 영역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운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운동이며, 대중운동은 직접적 표면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정치성을 획득할 때 진정한 사회변혁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란 가장 혐오스럽고 불명예한 존재의 대명사이다. 역사를 구구절절 훑을 것도 없이 오늘의 현실만 보아도 정치는 민중에게 다름 아닌 ≪적≫이다. 정치권을 이룬 집단 전체가 친일친미, 부정부패, 지역감정, 보수반동으로 물들어 민중의 여망을 실현할 수 없는 낡고 퇴락한 세력들이기에 현존 정치 질서에서 민중은 어떠한 희망도 없다.

따라서 민중의 열망에 부응하고, 사회변혁을 추동하려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민중 속에 들어가 그 힘을 결속하여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진정한 대안정치인 진보정치, 민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정당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2)집권투쟁의 측면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단순히 저항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변혁을 끝까지 책임지고 민중의 힘으로 승리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렇다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우리 민중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권력을 잡는 것이다. 실상 우리가 정권을 비판하고, 정치투쟁을 하는 핵심목표는 바로 ≪집권≫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반드시 집권전략, 집권노선을 올바로 확립해야 한다.

정규군에 의한 전쟁이나 게릴라식 무장항쟁을 제외하고, 현실 가능한 집권 경로로 제출되고 있는 것은 전민항쟁과 선거이다.

전민항쟁은 ≪6월항쟁≫과 같이 전국적 동시다발 군중궐기를 통해 압도적 다수의 민중역량으로 소수 지배권력을 포위 고립하여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이는 전국민적 대중투쟁이 극히 활성화되고 연대전선이 공고히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전국적 노동자 총파업, 농민 궐기 등 기층 민중의 전면적 진출이 있어야 한다. 집약하면 전민항쟁은 군중투쟁의 가장 발전 고조된 양태이다.

알아둘 것은 전민항쟁과 선거를 통한 집권은 상호대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는 이미 집권세력을 결정하는 기본 경로로 자리잡았다. 금권, 관권, 흑색선전 등이 존재하지만, 민중혁명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지배권력도 선거 자체를 전복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 민중이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결실이다.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듯, 극단적인 독재로 전민항쟁이 성공한다 해도 향후 집권세력은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일상정치활동과 선거투쟁을 맹렬하게 전개할 때 민중들의 각성도 고양되고 그에 따라 군중투쟁도 활성화될 수 있으며, 진보정당이 집권세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갖출 때 민중은 더욱 확신성 있게 군중투쟁에 떨쳐나설 수 있다. 그러므로 민중에 뿌리내린 힘있는 진보정당 없이 집권은 불가능하다.

3)민족민주전선 강화 측면에서

91년 전국연합이 처음으로 발족할 때 표방한 기치는 ≪자주민주통일의 강고한 연대전선≫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대표체≫이다. 전국연합이 그동안 온갖 우여곡절에도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고수하며, 민족민주운동의 최선두에서 투쟁해온 것은 긍지높게 총화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연합이 애초의 의미심장한 기치에 걸맞은 조직적 결속력과 정치적 지도력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도 현실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과 대안이 도출되어야 하겠는데,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민족민주전선과 정당의 문제이다.

민족민주전선이 합법 정치부대로 진보정당을 갖지 못하다보니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입장 차이로 분란을 겪었으며, 집권세력으로서 조직적 전망을 갖지 못하였다. 누구는 기존 보수정당의 수혈론에 유혹되고, 누구는 조직적 합의 없이 정당운동을 하다 파산하였다. 민중당이니, 한겨레당이니, 민주개혁국민연합이니 하면서 민족민주운동 지도적 역량이 적지 않게 정당운동으로 빠져나가고, 대부분 타락과 일탈의 길을 걸었다.

또한 전국연합은 1년 내내 대책위 만들고, 성명서 내고, 이런저런 정치적 대응하느라 부문과 지역의 기층 대중조직을 강화하고, 군중투쟁을 활성화하며, 지도력을 구축하는 주업은 팽개치다시피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과 학생 등 운동 핵심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대부분 지역연합을 힘겹고 왜소하게 꾸려가는 실정이다.

올 하반기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을 필두로 하여 부문과 지역의 각계각층 진보역량를 총망라한 민중연대 건설이 일정에 올라 있다.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운동의 책임있는 대표조직답게 민족민주전선 구축 및 그 정치 역량을 망라한 진보정당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투쟁과 군중투쟁, 진보정당과 민족민주전선을 고찰하며, 칠레의 아옌데 정권의 교훈을 자주 거론한다. 전선과 정당 양자를 활성화하여 민중역량을 총체적으로 조직 발동해야 사회 변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기층 대중조직을 힘있게 일떠세우고, 진보정당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역량을 집약하여 강력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양자의 공동투쟁으로 전체 민족민주운동 역량의 강화, 발전에 상호 조력해야 한다.

4) 학생운동 연대 강화의 측면에서

현재 민주노동당에는 다양한 학생운동세력이 참여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동지들도 적지 않다. 또한 한총련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지역 동지들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단위에서 더 많은 동지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한총련 동지들이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게 되면, 당내에서 여러 학생동지들을 정치적 동지관계로 만나게 된다. 물론 당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견해가 다르거나 경쟁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를 같이하게 되면 그 결속과 연대가 단체와 단체로 연대를 논할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대화와 토론이 자주 이루어지며, 같은 지구당이나 학교, 지역의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올해 초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한총련 공동 방어를 천명한 바 있다.

올 하반기와 내년은 학생운동 공동사업과 연대투쟁의 과제가 많은 좋은 시기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조직사건 및 통일운동 탄압 등 공안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국발안 철회 및 교육 공공성 쟁취, MD 저지 및 미군기지 반환, 부시 방한 반대...

내년의 지자체 선거와 대선에서 학내에서부터 광범위한 군중운동을 전개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공동사업은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공동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생운동 전체 진영이 힘을 모은다면, 학생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운동은 조직과 단체간의 연대투쟁과는 다른 측면으로 학생운동 단결과 연대의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다.

5)한총련 합법화의 측면에서

한총련이 올해를 합법화 원년으로 내세우고도 적기에 합법화를 위한 과감한 조처와 투쟁을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어쨌든 적어도 2002년까지는 완전한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자기 구상을 갖고, 주동적이고 시의적절한 투쟁으로 고지를 점령해가야 한다.

정당운동은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공식적인 운동이다. 한총련이 조직적 결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있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영역의 운동으로 진출하겠다는 선언이 된다. 한총련이 민주노동당 동참을 최대한 여론화하면, 당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 한총련의 공식성, 대중성 강화의 중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총련은 향후 민주노동당과의 실천적 결합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지 동참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민주노총과 더불어 당의 중요한 조직 기반인 한총련에 대한 지지와 엄호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참여로 한총련이 비밀 비공식적 불법단체가 아니라는 강력한 근거를 하나 더 얻게 될 것이다.

6) 2002년 정치정세의 측면에서

2002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 시기이다.

지자체 선거는 보통 정치성보다는 행정적 의미가 강하지만,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관계로 각 정치세력이 대선의 예비전으로 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운동세력 등 신진세력이 대거 참여하며, 다수의 기초 단위는 물론 몇몇 광역단위에서도 선전이 예상된다.

2002년 대선은 3김 정치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의미 외에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둘러싼 수구반통일세력의 반발, 민중에게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주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선전 여부 등 한국 정치의 향후 질서를 규정할 중대 계기점이 될 것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성과 정도에 따라 2004년 총선에 유력 정치세력으로 참여하여 원내 기반을 구축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판가름될 것이다.

자칫 정치적으로 미숙한 면모를 드러내거나 실제 정치적, 조직적 역량이 기대 이하로 드러난다면, 2002년 대선을 경과한 이후에도 현재의 정치구도가 그대로 굳어져 보수정치 집단이 간판만 바꾼 채 정치권을 점하고 있을 우려도 크다.

따라서 가까운 시기 안에 현실 정치에 있어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민족민주운동세력은 2002년 양대 선거를 축으로 한 정치정세에 강력한 조직적 역량을 기반으로 주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 왜 민주노동당인가?

민주노동당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족함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기층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출발부터 민족민주운동 전체의 합의에 기초하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결과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실 정치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실천투쟁에서도 당의 깃발이 힘있게 휘날리지 못했다. 최근 당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분란과 갈등이 작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당의 근본적 조직사상적 한계가 이념과 노선의 편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과 한계는 단순히 당과 당에 참여한 동지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현 단계 민족민주운동의 한계이자 공통의 과제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곧 그 해결도 민족민주운동 전체가 함께 떠안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 민주노동당이 아닌 다른 진보정당의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결코 이러저러한 작은 견해의 차이를 잣대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며, 끝까지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자세로 견인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

1)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와 역량에 바탕한 정당이다

한국 민족민주운동에 있어 노동계급은 영도계급으로서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노동계급이 중심이 된 운동만이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사회 변혁을 끝까지 책임져나가,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운동의 총결집체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민주노총을 가장 핵심적인 조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당의 당연직 부대표이며, 당원의 다수가 노동자로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연말까지 60만 조합원의 5%인 3만명을 목표로 당원 배가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만약 민주노동당과 다른 진보정당을 만든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노총과 정치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동지들이 민주노동당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책임적 자세로 참여한 1차적 이유가 바로 민주노총의 정치적 진출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며, 이에 모든 운동가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2)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방향성을 담지한 정당이다

몇몇 이들이 민주노동당의 ≪사상적 한계≫를 필요 이상 고창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운동세력 전체를 정치적으로 총결집하기 위해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해왔으며, 이 부분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제도권 정당, 좌파 정당을 운운하거나 ≪개량주의≫ ≪편향≫으로 쉽사리 낙인찍는 협소한 분파적 사고는 시급히 교정되어야 한다.

한총련 동지들은 민주노동당의 창당 과정을 깊이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념과 관련하여서는 창당선언문과 강령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 일부분을 인용해보자.

≪창당선언문 중≫

≪우리는 오늘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한 민중의 열망을 담아 민주노동당 창당을 선언한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에는 지난 한 세기동안 이어져 온 한국 민중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평화 통일, 평등 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있다.≫

≪민주노동당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과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호혜와 평등, 자주성에 기초한 국가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조국의건설을 통해 남북한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강령 전문 중≫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한총련 동지들은 향후 민주노동당 전체 동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견해를 존중하며 당이 자주민주통일의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사상이론적으로, 조직적으로, 실천적으로 인내심있게 노력해야 한다.

3) 전국연합을 비롯하여 대다수 진보민중세력의 지지와 동참을 얻은 정당이다

전국연합은 올해 10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정당운동 동참을 천명하고, 정치위원회 및 정당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준비를 해왔다. 9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기간 논의를 총괄하고, 조직적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등과 다수의 진보적 지식인, 일부 지역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참여를 이루었다. 시민운동세력과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다시 전국연합 및 그에 소속된 학생, 청년, 농민, 지역연합 등이 참여한다면 전체 진보운동의 총화라는 당의 조직 내적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진보정당이 계급정당이 아닌 민족민주정당이라 할 때, 그 현실적 구현은 민주노동당이다. 이를 모태로 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강건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정당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역량을 집약한 대변자로 강화해가야 한다.

4) 민중들의 공인을 받은 유일한 진보정당이다

지난 99년 영남위원회 조작사건으로 치러진 울산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영순 후보가 46%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국가보안법 철폐와 진보정치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확인했다. 창당 몇 개월만에 열악한 환경에서 치러진 2000년 총선에서도 울산, 창원, 성남 등에서 20% 이상의 지지율로 보수정당들과 당락의 각축을 벌이며 민중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전국적인 입지나 인지도 등이 대단히 미약하지만 지자체 선거를 잘 치르고, 활발한 대중정치활동을 전개한다면 현재의 잠재적 지지는 급속도로 현실적 지지로 부상할 것이다.

이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97년 대선부터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합법 진보정당의 창당, 발전을 위해 먼저 노력해온 여러 동지들의 악전고투의 결과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향후 당을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정치적 총결집체로, 4천만 민중의 정치적 대변자로 강화하기 위한 길에 한총련 동지들이 함께해야 한다.

3. 민주노동당에 참가함에 있어 한총련의 기본 방향

1)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

전국연합은 10년 이상 자민통 강령을 고수하며 발전해온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적 조직이다. 전국연합의 정치력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고, 당을 자주민주통일의 정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기본 방향이다. 전국연합은 이후 더욱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데서나 진보정당을 강화하는데도 중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총련을 비롯한 전국연합 회원 동지들은 당면한 정당 관련 문제에 있어 내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당과 일치성 공감대를 확대해야 함은 물론이고, 논의와 실천에서 전국연합과 보조를 맞추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기간 진보정당운동을 둘러싸고 빚어진 운동대오 내의 이견을 시급히 해소하고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당의 외연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계기를 대대적으로 사회 여론화하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 한총련 모두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한총련과 전국연합은 공히 직면한 전선 문제와 정당 문제에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동지관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성을 굳건히 해야 한다.

2) 전체 변혁운동의 통일단결 강화에 복무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계급정당, 이념정당, 전위정당이 아니라 진보운동세력의 총결집을 지향하고 있는 통일전선적 정당이자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따라서 당내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존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고 있다.

한총련 동지들은 신념과 견해를 당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바, 장기적 관점을 철저히 가져야지 성급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는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헌신적인 실천을 통해 당의 기초를 강화하고, 동지들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운동가다운 풍모와 성숙하고 세련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합법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단순한 전술적 단위가 아니며, 향후 정치지형과 운동발전에 따라 개편, 확대하여 끝까지 지키고 강화시켜나가야 할 전략적 단위이다. 우리 스스로나 당내 다른 동지들이나 소아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경계하고, 대국적이고 동지애적 자세로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 실천적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3) 사상운동을 활성화하고 운동을 혁신하는 관점에 서야 한다

한총련 운동가들 내에는 지난 시기 다양한 견해와 활동을 이러저러하게 쉽사리 재단하는 좋지 않은 풍토가 존재했다. 그 후과로 민족민주운동의 주력군 선봉대로 자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사상적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현재의 진보정당운동이나 민족민주전선 문제에 대해 한총련 동지들의 이해 정도는 대단히 낮다. 한국 민족민주운동의 전도를 좌우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한총련 동지들의 준비 정도가 낮다는 것은 내외의 요구에 대해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학생의 특성이 ≪새 것에 민감하다≫인데 낯설고 어려운 문제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회피하는 경향마저 생겨난 데 대해 핵심간부들은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문제를 참여, 불참여 식으로 형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한총련대오의 사상운동을 활성화하여 현실 운동에서 제기되는 각이한 문제에 대한 사상이론 수준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자. 그래야 한총련운동 및 정당과 전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9, 10월과 겨울방학기간에 집중적인 교양과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정당운동과 전선문제 나아가 한국 사회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식이 아니라 조직적, 집단적 사상운동을 활성화하여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창조하는 기풍을 고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참여 과정이 한총련 동지들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사상기풍과 사업작풍을 북돋워 운동 발전의 분수령이 되도록 핵심간부들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민주노동당 참여를 위한 한총련의 향후 경로

1) 한총련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동당 참여를 결의하자

알다시피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민주노동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일꾼 각 개인이 당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서 조직적 결의를 통해 기층을 발동한 것처럼, 한총련 역시 간부일꾼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 진공적이고 조직적인 당 강화 사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당 참여 과정에서 혼란도 적고, 한총련의 조직역량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총련은 9월중에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대한 참여를 조직적으로 결의해야 한다.

전국연합이 9월에 중앙위원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결정을 최대한 옹호하고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 9월 이후에는 추석연휴와 부시방한 반대투쟁, 중간고사, 학생회 선거가 있어 현실적으로 회의개최나 내실있는 논의가 어렵다.

올해 말에는 내년 양대 선거에 대한 당의 기조나 방침이 결정되고, 각 지부 및 지구당 개편이 정리되며, 당 체계가 선거 준비로 집중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내외에서는 한총련이 이에 적극 호응, 동참하여 당을 강화하고, 양대 선거를 잘 준비하는 선봉역량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각급 정치위원회 건설, 광범위한 교양 및 토론, 당 정치활동과 실천투쟁 결합 등의 사업을 우선 시작해야 하고, 그 총화로 9월중에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2) 전국적 연쇄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를 열자

통신을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공유되면서 많은 동지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개 속도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 학생운동가들이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대해 보다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자세로 대대적인 사상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당 및 전선운동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연쇄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를 제안한다!

핵심간부들의 진지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담회가 좋을 것이며, 대중적으로는 강연회와 토론회가 좋을 것이다.

간담회는 한총련 간부나 정당활동에 조예가 깊은 학생운동가 또는 학생운동에 이해가 있는 당과 전국연합의 간부 등과 조직하자. 강연회나 토론회 초청인사로는 당의 대중적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당이나 지부 지구당의 주요 간부 등이 좋다. 토론회는 당과 전국연합, 학생 단위가 함께 참석토록 하여 전선과 정당 문제, 학생 단위의 참여 경로 등을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토론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간담회, 강연회, 토론회는 각 지역, 지구, 단위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준비 단위를 꾸려서 조직하면 된다. 서로 눈치보며 머뭇거리지 말고, 먼저 진행한 단위가 경험과 자료를 공개하여 다른 동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3) 한총련 각급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연석회의와 수련회 개최하자

한총련 중앙이 먼저 정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 ≪진보정당운동 준비를 위한 조직적 준비를 위해 한총련 정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에서 밝힌 바 있어 줄여서 인용한다.

≪1≫사상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쇄물 및 인터넷상의 자료를 발간하며, 민족민주운동과 학생운동 내의 각종 정치적, 이론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조직한다. 간부일꾼들 사이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자체 토론 게시판을 운영한다.

≪2≫당원이 될 간부일꾼을 교육하고 단련하기 위해 지역, 지구, 학교 단위로 정치일꾼 모임 또는 정치간부 교육훈련체계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정치학교와 같은 집약된 형식도 있을 수 있고, 전국 정치일꾼 모임이나 수련회 같은 중앙집중적 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준비된 강사단의 연쇄 간담회도 가능할 것이다.

≪3≫한총련의 참여를 기하여 백만 학우대중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사업을 기획한다. 민주노동당을 알리는 광범위한 대중선전을 진행하고, 대표 및 당의 명망있는 간부의 순회 강연과 대대적인 후원회 조직, 후원금 모금 등도 해야 한다. 물론 당 학생위원회 학교지부를 공식 건설하거나 당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가을 체전과 대동제, 학술제와 연계하여 전개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대중 지반을 확장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진보정당운동이 대중조직으로서의 한총련운동과 범주나 양상이 다른 특화된 사업이므로 그 주체로 정치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역할을 적극 보장해야 정당운동을 위한 한총련 내의 토론과 조직 과정이 보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 지구, 학교별로 각급 단위의 실정에 맞게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정당문제에 대해 각 지역, 지구총련 차원에서까지 기층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구축하지는 못한 조건이므로 한총련 차원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총련 전국 정치위원 연석회의≫를 만들어 전국적 편차를 줄이고 한총련 동지들의 민주노동당 참여를 위한 준비 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전국 정치위원 수련회를 조직하여 전체 단위의 준비 정도를 집중적으로 높여내야 한다.

향후 정치위원회는 전선 및 정당과 한총련의 관계를 조율하고, 한총련 동지들의 정치활동력을 높여내며 올바른 정치방침을 갖도록 보조하는 상시적 단위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전국연합이나 민주노총과 마찬가지이다.

4) 민주노동당 및 당내 학생 동지들과의 공동투쟁을 활성화자

먼저 수도권 동지들은 10.25 보궐선거에 가능한 최대로 결합하여야 한다.

10.25 보선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예비전으로 벌써부터 보수정당들 안에서 논란을 증폭시키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실체와 역량을 분명히 공인받아야 한다. 민중들의 정치적 불신이 유례없이 고조되어 있고, 2-4개의 선거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므로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기에도 유리하다. 비록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시기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선거투쟁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결합함으로써 당 전체 및 학생동지들과의 연대와 동지애를 강화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실천투쟁에 민주노동당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 당의 위상과 실천력을 강화하는데 한총련 동지들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

5) 대중적인 민주노동당 지지 지원운동을 조직하자

사실 진보정당운동의 유력한 면 중 하나는 광범위한 대중을 후비대오로 망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당원으로 당장 활동하지 못하지만 후원회원으로 지지와 후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

간부일꾼들이 당원으로 동참한다면, 학우대중들 안에서는 이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후원 분위기를 고취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단위별 민주노동당 학생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후원 방식으로 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각 주소지별로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다면, 당장 내년 양대 선거에서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다. 당장 전면적,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구



체적 대중을 장악하고 폭넓게 진보정당운동을 전개한다는 관점으로 반드시 주체를 배치해 대중적 지지 후원운동을 조직하자.

결(結)

아직 언급하지 않은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기존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학내에 있을 경우의 조직적 관계 문제, 각 지구당 편입 문제 등이 남아있고, 민족민주전선 건설 및 전선과 당의 관계, 김대중정권에 대한 관점, 내년 대선방침 등은 진지한 사색과 활발한 토론을 요하는 문제들이다.

이제 전국연합을 축으로 하여 민중연대를 건설하고 민주노동당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총련은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족민주전선 건설과 합법 진보정당 강화의 큰길로 달려나가게 되었다.

민족민주운동의 진정한 주력군 선봉대로서의 주체적 자세와 책임성을 끝까지 견지하며, 자주민주통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자.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8월 28일

민주노동당 학생당원



